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鄭仁敎 外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政策研究 03-2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鄭仁敎 外

□ 보고서 집필진

제1장: 정인교

제2장: 조용균, 정인교

제3장: 정인교, 권영민, 이홍배, 조현준, 김은지

제4장: 정인교, 조현준

제5장: 최태욱, 권영민

제6장: 정인교, 안세영

발간사

세계경제의 무역블럭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의와는 담을 쌓고 지냈던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FTA 체결 열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기에 모색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통상대국의 꿈을 버려야 할 지 모릅니다.

저희 경제사회연구회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우리 경제 운영에 중·장기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한·중·일 FTA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초부터 이 연구에 필요한 연구재원을 확보하고, 2002년 하반기에 이 연구를 주관할 연구기관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2002년 중국의 주룽지 당시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FTA 검토를 제안함으로써 저희 연구회의 연구 주제 선정이 시의성이나 내용면에서 바람직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매년 10권 내외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연구 첫해인 2003년에는 한·중·일 FTA 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를, 2004년에는 각 산업 및 분야별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마지막 연도인 2005년에는 한·중·일 FTA 추진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2003년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구 첫해에는 9권의 보고서

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연구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에 한국 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04년부터는 참여 연구기관의 수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내용을 연구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협동연구에 참여한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진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훌륭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고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연구회의 玉台煥 사무국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鄭仁敎 FTA 연구팀장은 광범위한 연구분야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협동연구의 연구보고서가 한·중·일 FTA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FTA 정책방향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文石南

서 언

2002년 현재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의 23.6%, 세계 GDP의 18%, 세계 무역량의 13.2%를 차지하고 있어 북미·유럽과 견줄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여기에다가 중국의 WTO 가입과 고도 경제성장 지속으로 동북아 경제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1월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한·중·일 3국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 우리나라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 총합연구기구(NIRA), 중국 발전연구중심(DRC)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국간 FTA의 경제적 타당성, 산업별 영향 및 추진전략 등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통상 FTA 추진이 공동연구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3국간 공동연구는 향후 동북아 경제통합에 적지 않은 의미를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단기적으로 한·중·일 FTA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본 보고서는 향후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한·중·일 FTA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상황을 대비하여 3국간 FTA의 대내외 추진환경, 추진타당성과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원내외 9명의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하였다. 본원의 집필진으로는 정인교 FTA 연구팀장, 조현준 중국팀장, 이홍배 일본팀장, 김은지 전문연구원, 외부 필진으로는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세영 서강대 교수, 조용균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최태욱 한동대

교수가 참여하였다.

본 연구를 주도한 정인교 FTA 연구팀장은 본 보고서 작성에 많은 조언을 해준 이근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김병섭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과장, 채욱 부원장, 김박수 선임연구위원, 최낙균 무역투자실장, 왕윤중 지역연구센터 소장, 송유철 연구조정실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9명의 필진이 작성한 자료를 한편의 책으로 엮어내는 데 이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보고서의 집필자들은 한·중·일 FTA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를 위해 노력했으나, 내용 자체가 워낙 광범위해 한 권의 보고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3국간 FTA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한·중·일 FTA 연구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현재의 여건만으로 3국간 FTA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 동북아와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열풍을 5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향후 5년 후 동북아에서의 통상환경은 지금과는 확연히 다를 수 있고, 한·중·일 FTA에 대한 환경도 지금보다 훨씬 개선되어 있을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연구자들은 이 보고서가 한·중·일 FTA 논의의 확산 및 심화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간 논의단계로 발전되었을 때 한국의 입장을 정립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집필진들은 본 보고서가 한·중·일 FTA 연구와 정책방향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향후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원내외 집필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03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安 忠 榮

국문요약

한·중·일 FTA는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내 FTA 논의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9년 11월 마닐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중·일 FTA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1년 11월 브루나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경제장관회의 신설, 비즈니스 포럼 창설, 외교장관회의 신설, 문화·인적 교류 및 IT 공조체제의 강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3국간 경제협력 논의의 기틀을 다졌다. 특히 3국간 경제장관회의 신설은 그 동안 기능적 수준에만 머물러 왔던 동북아 경제협력 관계를 제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년 뒤인 2002년 11월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개최된 3국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한·중·일 FTA 검토를 공식 제안함에 따라 제도적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3국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현재 3국의 국책연구기관(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종합연구기구, 중국: 발전연구중심)이 한·중·일 FTA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3국 연구기관은 연구기간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로 정하고, 첫째인 2003년에는 3국간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한·중·일 FTA에 대한 3국 업계의 입장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1차년도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 정상들은 산업별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도 정상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에 있어 한·중·일 FTA의 체결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외경제정책임에 틀림없다. 물품이 자유롭게 이동되는 통상환경의 구축이

동북아 경제중심 구축의 중요한 선결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중·일 FTA 구축을 위한 행보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은 이미 무역 및 투자 면에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시장주도의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한·중·일 FTA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한·일 FTA에 대한 공식협상이 2003년 말에 개시되고, 한·중·일 FTA에 대한 3국 국책연구기관간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한·중·일은 경제, 안보, 사회·문화를 중심으로 한 14개 분야에 대해 회담을 갖고 이 분야들에 대한 협력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한·중·일 공동선언문을 사상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중·일 FTA 체결 검토와 무역 및 투자 촉진, 금융, IT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3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인적 교류, 문화, 공공위생, 스포츠 및 지자체간의 교류 협력 강화와 인신매매, 마약거래, 돈세탁, 국제경제 및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늘날의 세계 통상환경은 글로벌화 추세와 지역화 추세가 공존하는 가운데 심화되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각국의 다각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칸쿤 각료회의의 합의 도출 실패로 다자무역체제가 다소 불안정한 가운데 지역 혹은 양자 차원의 자유화 노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01년 3월 이후 미국의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부진양상을 보였던 세계 경기는 최근 다소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빠른 회복이 예상되는 미국경제는 그 동안 ‘나홀로’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던 중국 경제와 더불어 세계경제 성장동력의 양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양자간 FTA의 중심으로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중국경제의 부상은 동아시아지역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각국은 중국경제의 발전을 자국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산업구조 조정과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내 FTA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다.

한·중·일 FTA의 의미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물론 지역 차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먼저 한·중·일 FTA로 3국은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3국의 양자간 FTA보다는 3국 전체의 FTA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 뒤져 있던 범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수동적 의미와 더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및 이 지역 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모색하겠다는 적극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를 지양함으로써 범지역 통합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중·일 FTA의 의미는 현재 한국이 결여하고 있는 지역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아 FTA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이 추진하는 동북아 중심국가의 추진과 병행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단기적으로는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협력 제도화를 통해 통상분쟁의 예방 혹은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지역 차원의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WTO와의 관계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은 관련 다자규범을 준수하

게 되면 다자주의에서도 허용되고 있으며, 활발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궁극적으로 다자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들간의 '집단행동 문제'와 관련된 '소집단의 우월성' 원리를 감안한다면 지역주의의 발전은 오히려 다자주의의 완성에 기여하는 디딤돌 내지 전 단계적 과정이 될 수 있다. 한·중·일 FTA는 APEC과도 병행 발전할 수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다. 다만 발전순서는 한·중·일 FTA가 APEC보다는 앞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APEC 그 자체로부터는 지역경제협력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거니와 한·중·일 FTA가 먼저 발전하여 APEC 내부의 여타 지역경제협력체와 연계하는 것이 소집단의 우월성이 활용될 수 있는 수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는 APEC의 주도 국가인 미국이 한·중·일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거나 혹 반대할지라도 극복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 FTA의 완성을 위한 전 단계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한·중·일 FTA가 ASEAN FTA(AFTA)와 연계해서 중국에는 동아시아 FTA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한·중·일 FTA가 먼저 견고한 경제통합체로서 부상하고, 그와 별도로 AFTA도 제도적으로 보다 성숙한 통합체로 발전되어갈 필요가 있으며, 그 후 두 집단이 소집단의 우월성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FTA를 건설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한 3국간의 협력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협력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한·중·일 FTA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통합의 논의에 대한 출발이 늦은 만큼 이른 시간 내에 유럽이나 미주 같은 수준의

지역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계획을 실행하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협력과제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협력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각각의 과제가 나름대로 논리에 바탕을 두도록 노력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NAFTA+라는 개념으로 한·중·일 FTA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 이는 한·중·일 FTA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FTA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르는 장애요인으로는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중·일간 패권경쟁, 남북한 대결구도의 지속,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등을 들고 있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한·중·일 경제통합은 EU 등 성공적인 기존 협정의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의 경제통합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는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무역분야뿐만 아니라 거시·금융분야에서도 별도의 정책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포괄적인 통합기반이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일 FTA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 이해집단과의 내부협상에 대해서도 본 보고서는 논의하고 있다. 농민단체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한·칠레 FTA의 국내비준에서 보듯이 FTA 협상은 상대국과의 대외협상보다 다양한 국내 이해집단과의 내부협상이 더 어렵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Putnam(1988)의 양면게임이론의 분석틀 속에서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한·중·일 FTA에서의 내부협상 갈등을 실증분석하였다. NGO, 농민단체, 경영자, 노조, 학생, 공무원 등 13개 집단(직종)을 대상으로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첫째 한·칠레 FTA에서 패자산업인 농민(과수농가)과 승자산업인 제조업(자동차, 전자 등)간의 내부협상 갈등구조였다면 한·중·일 FTA에서는 ‘NGO, 노조와 재벌’간의 갈등구조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일 FTA는 ‘노동자 피해 - 재벌 이익’이라는 논리로 정치이슈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중·일 FTA가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한·칠레 FTA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NGO, 노조가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칠레 FTA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중·일 FTA에도 관련 정부부처간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승자산업을 주관하는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 공무원과 농업, 수산업 등 패자산업을 주관하는 농림부·해양수산부 공무원간에 한·중·일 FTA의 견해에 대해 현저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학력, 소득수준과 한·중·일 FTA에 대한 반응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국내 갈등관계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NAFTA 추진시 미국의 국내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독자와 정책담당자의 참고를 위해 외국의 구조조정 지원사례와 NAFTA 추진시 미 행정부의 국내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국내 갈등관계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은 제6장 제2절에서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3국간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FTA 홍보강화, FTA 전담 인력 보강, FTA 협상과 국내 산업구조 조정 정책의 병행 추진 등을 제시한다.

차 례

서언 7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23

-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3
-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25
- 3. 보고서의 한계 및 향후 작업방향 28

제2장 세계통상환경의 변화 30

- 1. 세계경제 통합의 가속화 31
 - 가. 세계화의 진전과 반세계화 31
 - 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35
- 2. 지역주의 확산과 다자체제와의 보완적 관계 38
 - 가. 최근의 지역주의 추세 38
 - 나. 다자주의와의 관계 41
- 3.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 확대 42
 - 가.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42
 - 나. 동아시아내 지역무역협정의 특징과 도전 45

4.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3국간 협력 논의	46
가. 경제분야 협력사항	47
나. 안보 및 사회·문화 분야 협력	49
5.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	50
가.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	50
나. 중국의 WTO 가입	52

제3장 한·중·일 FTA 추진 당위성56

1. 한·중·일 3국간 경제관계	56
가. 한·중·일 3국의 무역 추이	58
나. 한·중·일 3국의 투자현황	64
다. 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	66
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71
2. 한·중·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72
가.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72
나.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중·일 FTA 의미	79
3. 한·중·일 FTA의 무역자유화 예상효과	86
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86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	88
다. 2003년 한·중·일 FTA 공동연구 결과	90
4.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	94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94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96
다. 중·일간 패권경쟁	98
라. 남북한 대결구도	100
마.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102

제4장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과 한·일 FTA와의 관계 설정	104
1. 한국, 중국 및 일본의 FTA 추진현황	105
가. 한국	105
나. 중국	112
다. 일본	117
2.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	122
가. 3국 정부의 입장	122
나. 3국 기업의 입장: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24
3. 한·일 FTA와의 관계 설정	126
가. 일·중간 정치적 경쟁관계	126
나. 한·일 FTA 추진 동향	129
다. 한·일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132
라. 한·일 FTA와 한·중·일 FTA 관계 설정	136
 제5장 한·중·일 FTA 선행과제 및 주요 쟁점	141
1. 한·중·일 FTA를 위한 3국간 선행과제	141
가. 한·중·일 FTA의 목표 설정	142
나. 한·중·일 경제통합의 효과적 접근방법	144
다. 경제분야의 협력	150
라. 비경제분야의 협력	167
2. 한·중·일 FTA의 주요 쟁점	170
가. 한·중·일 FTA와 다자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170
나. 한·중·일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179
다. 한·중·일 FTA와 ASEAN 및 동아시아 FTA와의 관계	189

제6장 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194
1.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정책여건 평가	194
가. 어려운 국내 정책여건	194
나. 유리한 국내 정책여건	199
다. 윈세트(win-set)와 한·중·일 FTA 협상	201
2. 국내 정책시사점	203
가. 대미국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203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204
다. 한·중·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205
라. FTA 홍보 강화	207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209
바. FTA 비관그룹에 대한 대응	211
사. 취약산업의 산업구조 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213
참고문헌	216
부 록	227
<부록 1>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보상체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	229
<부록 2> NAFTA 추진시 미국의 국내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236
<부록 3> 한·중·일 FTA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245
Executive Summary	268

표 차례

<표 2-1>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과정	47
<표 3-1>	세계경제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2002년 기준)	57
<표 3-2>	한·중·일, EU, NAFTA의 직접투자 규모 추이	58
<표 3-3>	한·중·일 3국의 무역규모 추이	59
<표 3-4>	한·중·일 3국의 지역 및 국가별 수출비중 추이	60
<표 3-5>	한·중·일 3국간 무역수지 추이	61
<표 3-6>	한국과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 추이	65
<표 3-7>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 추이	66
<표 3-8>	한·중·일 산업내무역 지수, 수직적 산업내무역 지수	70
<표 3-9>	한·중·일의 관세구조	89
<표 3-10>	한·중·일 FTA의 GDP에 대한 영향	91
<표 3-11>	한·중·일 FTA의 산업별 영향	92
<표 3-12>	한·중·일 FTA의 3국간 무역에 대한 영향	93
<표 3-13>	한·중·일 FTA하에서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	93
<표 3-14>	한국과 일본의 자급률 추이	95
<표 3-15>	한·중·일의 경제규모 비교	97
<표 4-1>	한·중·일의 FTA 추진 동향	104
<표 4-2>	한·중·일 FTA에 대한 3국 기업의 입장	125
<표 4-3>	한·중·일 FTA 추진시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25
<표 4-4>	한·일 FTA의 추진경과	130

<표 5-1> 동북아 경제통합의 단계적 접근	144
<표 5-2> 한·중·일 3국의 무역 구조	159
<표 5-3> 다국적 화학기업의 대중국 투자계획	162
<표 5-4> 동북아 에너지 개발 주요 프로젝트	165
<표 5-5> 한·중·일 3국에서 정보통신분야의 비중(GDP 대비)	166
<표 6-1> 한·중·일 FTA의 예상 패자집단의 반발정도	196
<표 6-2> 한·중·일 FTA의 예상 승자집단의 지지 정도	200
<표 6-3> 국민 또는 국내집단이 FTA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항	209
<표 6-4>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소	211
<표 6-5> NAFTA시 미 재계의 정치현금	212
<표 6-6> 피해집단에 대한 보상책	214
<부표-1> PROCAMPO의 지원추이	231
<부표-2> PROCAMPO 연도별 지원내역	231
<부표-3> NAFTA 국내 기준을 위한 멕시코의 제도적 틀	244
<부표-4> 설문 응답자의 개인 성향 분석표	246
<부표-5> 설문조사 응답자의 직종별 분포	247
<부표-6> 한·중·일 FTA로부터의 이득 분석	249
<부표-7> 한·중·일 FTA에 대한 인식	252
<부표-8> 한·중·일 FTA 체결순서	254
<부표-9> 한·중·일 FTA로 인한 피해집단 분석	255
<부표-10> 한·중·일 FTA로 인한 피해보상	256
<부표-11> 한·중·일 FTA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	257
<부표-17> 한·중·일 FTA의 찬성(또는 반대)을 위한 개인적 노력	258
<부표-18> 한·중·일 FTA 체결시기	259
<부표-14> 한·칠레 FTA 체결에 대한 개인적 견해	260

<부표-15> 한·칠레 FTA와 비교하여 한·중·일 FTA 의 찬성/반대를 위한 개인적 노력	261
<부표-17> 한·중·일 FTA를 추진하기 위한 요소	263
<부표-18> 한·중·일 FTA에 대한 시각과 체결시기	264
<부표-19> 학력과 FTA에 대한 시각	265
<부표-20> 소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각	266
<부표-21> 일본(인)과 중국(인)에 대한 감정 및 한·중·일 FTA에 대한 시각	267

그림 차례

<그림 2-1> 한·중·일간 역내 직접투자와 역내 무역의 비중	48
<그림 3-1> 전세계 직접투자에서 한·중·일, EU, NAFTA의 비중	58
<그림 3-2> 한국의 대중 무역 추이	62
<그림 3-3> 한국의 대일 무역 추이	63
<그림 3-4> 일본의 대중 무역 추이	64
<그림 3-5> 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	67
<그림 3-6> 한·중·일의 수출유사성지수(ESI)의 변화	96
<그림 5-1> 한국의 대일 수출부진품목에 대한 분석	159
<그림 6-1> 한·중·일 FTA에서 패자집단들의 반응의 특징	197
<그림 6-2> FTA 협상시 한국과 중국의 윈세트	202
<부그림-1> 멕시코의 농민보상제도 추이	229
<부그림-2> 한·중·일 FTA에 대한 시각	248
<부그림-8> 한·중·일 FTA 추진 시기	249
<부그림-4> 한·중·일 FTA로 인한 피해집단	250
<부그림-5> 한·중·일 FTA를 추진하기 위한 요소	25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유럽과 미주지역이 각각 EU와 NAFTA를 통해 배타적인 무역블록을 형성하고 점진적 경제통합을 추진해 왔지만,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불릴 수 있는 동북아지역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동북아 경제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중국, 일본, 한국 등 관련 국가간 입장 조율이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흔히 ‘가깝고도 먼 이웃으로’ 서로에게 인식되어 왔다. 여기서 ‘가깝다’는 것은 지리적 인접성, 유교 및 불교 문화권, 황색인종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며, 서로 멀게 느껴지는 것은 과거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문제들, 인근 국가에 대한 일본의 침략행위, 중국의 사회주의적 정치체제, 국경분쟁, 경제적 발전단계의 격차 등이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멀게만 느껴지던 3국간 관계가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는 느낌이다. 먼저 과거 일본의 침략지배를 받았던 세대의 수가 줄어들고, 전후 세대가 주역으로 성장함에 따라 반일감정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과정에서 나타난 친근한 한·일 관계는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오래 전에 이미 동서냉전이 종식되었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켜 나감에 따라 국제관계에 있어 정치적 이념보다는 경제적 동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 확대, 사유기업의 활동 증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육성 등으로 중국경제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등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인근 국가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금융위기 전염을 목격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상호 협력 및 지원이 위기 차단에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는 금융분야 협력을 추구하는 **Chiang Mai Initiative**로 발전되었다.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확대 및 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해 동북아도 지역적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9년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가 매년 개최되어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특히 2003년 10월 발리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한·중·일 FTA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북아 경제통합의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였다. 동북아라고 할 때 여러 국가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경제적으로 규모가 큰 한·중·일 3국을 주로 지칭하게 되며, 이들 3국간 관계가 동북아 경제통합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정상간 단순 회동이 아니라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회의로 인식되어야 한다.

한·중·일 경제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WTO와 같은 다자간 협력은 물론이고, 에너지, 환경, 물류, 과학기술 등 분야별 협력도 가능하다. 다자체제하의 협력은 제3국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역외국의 반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WTO 전회원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협상타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수반된다. 이로 인해 특정지역내 경제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FTA와 같은 지역무역블록을 형성하여 상호간에 특혜적인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본 보고서는 최근 들어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한·중·일 FTA의 대내외 추진 여건을 검토하고, 이 FTA를 달성하기 위한 선행과제를 제시하

고자 한다. 경제학자, 기업인 여부를 떠나 많은 사람은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FTA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즉 경제적으로는 필요성이 높지만,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이 크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한·중·일 FTA에 대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한·중·일 FTA, 더 나아가 동북아 경제통합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동안 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경제적 효과의 추정에 그쳤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대규모 FTA는 정치·외교, 안보 등 비경제적인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 못지 않게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3국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추정보다는 이들 비경제적인 요인 분석에 치중하며, 3국간 FTA 추진 분위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단계적 접근방안과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른 대내적 정책시사점 발굴에 노력하였다.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통상환경의 변화를 논의하고, 제3장에서는 한·중·일 경제관계 분석을 통해 3국간 FTA 추진 여건을 고찰하고, 3국간 FTA 추진당위성에 대해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을 고찰한 후 3국간 FTA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제시하고, 한·일 FTA와 한·중·일 FTA의 관계 설정(sequencing)을 논의한다. 이어 제5장은 한·중·일 FTA 추진 전에 실시할 수 있는 선행과제와 한·중·일 FTA에 따르는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각 장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WTO 다자체제 출범 후 가속화되는 세계화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반세계화 움직임을 분석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의미를 고찰한다. 또한 지역주의

확산 추이를 분석하고,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체제 발전에 기여함을 제시한다. 또한 최근 발리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3국간 협력사항을 경제분야와 안보 및 사회·문화분야로 나누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으로 인한 중국의 통상환경 개선이 한·중·일 경제협력에 주는 의미를 살펴본다.

이러한 세계통상환경의 변화에 한·중·일 3국이 대응하는 수단으로 3국간 FTA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3국간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및 분업구조 측면에서 고찰하고, 3국간 FTA 추진의 당위성을 살펴본다. 또한 한·중·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을 동북아시아 차원의 의미와 한국의 입장에서 본 의미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어 한·중·일 FTA하의 무역자유화 예상효과를 제시함으로써 3국간 FTA가 경제적으로 필요함을 예시한다. 한편 동북아시아 및 한국의 입장에서 한·중·일 FTA는 상당한 의미가 있으나, 한·중·일 FTA의 추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은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3국간 FTA에 대한 각국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분석한다. 한국, 중국 및 일본은 양자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은 FTA 체결을 통해 경제적 이익의 확보, 경제개혁, 경제적 우방의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와 동아시아에서 지역적 리더십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한·중·일 FTA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3국의 기업들은 대체로 3국간 FTA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중·일 FTA를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일 FTA와 어떤 관계로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2003년 말부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일 FTA와 한·중·일 FTA간 관계 설정(sequencing) 문제를 제기한 후, 일·중간 정치적 경쟁관계와 한·일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논의하고, 한·중·일 FTA 추진방향을 FTA의 추진순서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한·중·일 FTA 추진에 대비한 선행과제와 3국간 FTA에 대한 주요 쟁점은 제5장에서 논의된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으로는 한·중·일 FTA와 다자체제간 관계, 한·중·일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한·중·일 FTA와 ASEAN 및 동아시아 FTA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의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중·일 FTA 추진시 예상되는 국내 정책여건을 분석하였다. 한국에 대한 정책시사점으로는 대미국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한·중·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한·일 FTA와 한·중·일 FTA간 관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본 보고서의 여러 곳에서 한·일 FTA는 단순히 양국간 시장통합을 넘어서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큰 구도하에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Baldwin(2002)은 한국과 일본간 FTA 체결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핵심그룹(core group)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양국간 FTA가 다른 지역과의 FTA에서 모델케이스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모범적인 FTA일 때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서 경제통합을 리드해 나가는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가 보였던 지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현재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 한국과의 FTA는 이러한 모범적인 FTA와는 일부 거리가 있다는 것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즉 일본은 우선 한국과의 FTA 체결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본과의 FTA를 단순히 양자간 관계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 경제통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적 이익과 역내 안정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한·중·일 FTA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먼저 지난 4년 동안 논의가 지속되어 온 한·일 FTA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가

별로는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지역적으로 볼 때, 한·중·일 FTA가 동북아내 양자간 FTA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과의 양자간 FTA보다는 한·중·일 FTA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일 FTA는 이제 막 검토가 시작되었고, 중국과 일본의 대립관계, 중국의 불완전한 시장경제, 농업문제 등으로 단기간내 추진이 곤란하다. 그렇다고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을 마냥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이므로, 우선 한·일 FTA를 추진하면서 중국이 제안한 한·중·일 FTA 검토에 적극 임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양자간 FTA 논의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제6장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한·중·일 FTA 추진에 대비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보고서의 한계 및 향후 작업방향

본 보고서가 한·중·일 FTA의 추진에 따르는 문제점 분석과 대내적인 정책과제 연구에 주력했으나, 연구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연구기간, 예산 및 연구인력의 제약으로 분석이 한국 위주로 그쳤다. 향후에는 일본, 중국 연구진과의 협동연구를 통해 3국의 입장에서 한·중·일 FTA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부록 3>에 제시된 설문조사 또한 한국의 기업, 비정부단체(NGO), 학계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완벽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3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대내적인 정책과제 중 산업구조 조정의 구체적 방향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분석하지 않았다.¹⁾ 또한 편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보고서

1) 한·중·일 FTA하에서 한국 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본 보고서와 더불어 본원이 주관하는 한·중·일 FTA 협동연구의 일부로 산업연구원이 2003년도에 작성하는 보고서에 포함되므로, 본 보고서보다는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였음.

인 관계로 1인 연구자가 작성하는 보고서에 비해 구성이 자연스럽지 못할 수 있다. 개별 연구자가 작성한 내용을 본 보고서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전체 보고서 편집 방향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보고서 집필 책임자는 적지 않은 고민을 했다. 그러나 개별 저자의 양해를 얻어 보고서의 큰 틀 속에서 각 장의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제2장 세계통상환경의 변화

한·중·일 3국간의 긴밀한 경제관계와 지리적 인접성, 상호보완적인 생산자원 등으로 볼 때, 경제통합의 기본조건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동북아지역에서의 FTA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의 일이다.²⁾ 한국은 2002년 10월 칠레와 최초의 양자간 FTA를 타결한 데 이어 현재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FTA에 해당하는 싱가포르와의 FTA(EPA)를 2002년 발효시켰으며,³⁾ 한국 이외에도 ASEAN 국가 및 멕시코 등과 다각적인 FTA 체결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은 시장 경제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 수준이 FTA를 논의하기에는 미비한 상태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 ASEAN과의 FTA를 위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동북아 3국이 모두 FTA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물론 일본이나 중국 모두 세계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FTA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들 국가들의 FTA 정책은 급변하는 세계 혹은 동아시아 통상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한·중·일 FTA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세계 및 동아시아 통상환경의 변화와 그 특징에 대해 분석하

- 2)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 연구는 지역주의의 원인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 자유주의적 시각, 기능주의적 시각, 구성주의적 시각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지역정체성 결여, 지역안보 불안에 따르는 상호의존 심화 부진, 산업내 무역 발달 지연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근(2002) 참고
- 3) 일본과 싱가포르간 협정의 공식명칭은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Singapore and Japan for a New Age Economic Partnership임. 일본은 동 협정이 FTA보다 더 포괄적이라는 의미를 내세워 경제연계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으로 부르고 있으나, 사실상 다른 FTA와 별 차이가 없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일·싱가포르간 협정을 단순 FTA로 표기함.

고자 한다.

1. 세계경제 통합의 가속화

가. 세계화의 진전과 반세계화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 있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통합은 상호 시너지효과 속에 가속화되어 왔다. 초기의 세계화는 다국적기업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세계화가 그 규모나 속도에 있어 실물경제의 세계화를 압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 실물부문의 세계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그 확대로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것은 무역과 투자의 양적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까지 포함한다. 오늘날 세계화의 특징은 오히려 다음의 몇 가지 무역패턴의 질적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⁴⁾ 첫째, 전체 상품 교역 중 제조업 무역의 비중이 현저히 상승하였다. 1970년 60% 수준에 머물던 제조업 무역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75% 수준을 상회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도국의 제조업 무역비중은 같은 기간 18% 수준에서 66%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주로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 결과 제조업분야에서 무역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둘째, 상품무역에 비해 서비스무역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무역 중 서비스무역의 비중은 25%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추세는 세계화에 따라 인적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셋째, 이

4) 무역패턴의 질적 변화와 관련한 세계화의 특징에 대해서는 Cho(2001) 참고

러한 무역과 투자의 확대에는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무역장벽의 완화, 철폐를 통해 무역증대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중간재 및 이를 이용해 생산된 최종재 무역을 통해 무역 확대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는 총무역 중 기업내 무역 비중의 증대를 초래하는 한편 인적 이동을 통해 서비스 무역의 확대를 가져왔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무역과 함께 직접투자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통합을 심화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무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국제투자에 있어서도 제조업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투자에 관한 한 무역에서와는 달리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국이 되기는 했지만 중국을 비롯한 몇몇 아시아 개도국과 극소수의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개도국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세계화가 국가간 빈부격차의 확대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금융부문의 세계화

금융분야에서의 세계화는 실물분야에 비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민간에 의한 국제금융의 폭발적 증가가 세계화의 중요한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국제적 자본이동의 빠른 증가세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에 따른 변동환율제로의 전환과 1973년 이후 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본이동자유화 노력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1973년 하루 150억 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외환시장의 거래규모는 1995년에는 1조 2,60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현재는 1조 4,000억~1조 5,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결제에 따르는 외환거래와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거래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1조 달러를 넘는 압도적 부분이 투기적 성격의 단기자금 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규모 국제적 금융자본의 높은 이동성(mobility)으로 말미암아 각국의 정책담당자는 불안정한 자본이동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저성장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긴축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9·11 테러 이후 세계화가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리는 듯한 시기를 맞기도 하였다. 또한 테러를 계기로 세계화의 후퇴 혹은 둔화를 예견하는 견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세계화의 흐름은 쇠퇴하지 않았고 세계경제의 통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특히 DDA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통합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3) 반세계화 운동과 세계화의 도전요인

세계경제의 통합이 진전될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화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국가 혹은 계층에 의한 저항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정부기구(NGOs) 혹은 다양한 그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 세계화 저항운동은 나름대로 논리를 표방하고 있어 이를 하나로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분류해 보면 단순히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부터 세계화의 속도와 지역적 범위를 조절하는 입장, 그리고 세계화 내용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 등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세계화를 반대하는 측은 주로 다국적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화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고 있으며, 빈부격차, 환경파괴, 실업, 문화적 다양성의 파괴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세계화로부터 차단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매우 단순하고 폐쇄적

인 입장이다. 반면 세계화의 속도와 범위를 조절하자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세계화가 미래의 추세임을 인정하면서도 급속한 세계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요인들을 속도 조절로 차단하고, 동시에 세계화의 혜택이 특정 지역 혹은 국가가 아닌 보다 폭넓게 미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세계화 내용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은 세계화가 다국적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되어서는 안되고 건전한 노동기준, 환경기준, 인권규범 등의 세계적 확산이 경제적 세계화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하면 세계화 저항운동의 본질은 세계화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주제에 따라 다소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그 입장들이 서로 혼재되어 공동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바람직한 세계화의 지속적 발전 여부는 이러한 노력이 세계화의 부작용을 견제하는 데 얼마나 성공적이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세계화 저항운동이 표방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세계화에 수반되는 부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많은 경우 세계화는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일 뿐 아니라 위험에 대한 노출을 확대시키게 된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간 혹은 일국내 소득불균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가간 마찰을 격화시킨다. 또한 급속한 세계화과정에서 각국 정부는 그들의 사회 혹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새로이 활성화되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금융체제 등 제도적 결함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도전 요인들은 세계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순탄하게 진행되기 위해 극복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오늘날의 세계무역질서는 다자주의를 대표하는 WTO와 다양한 수준의 지역무역협정을 그 내용으로 하는 지역주의의 쌍두마차에 의해 영위되고 있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각국의 참여한 이해관계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에 대한 회원국의 우려와 실패시 다자무역체제의 약화 가능성에 따른 위기의식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새로운 라운드 협상의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DDA 협상이 2002년 1월부터 출범하게 되었다.

1) 무역자유화의 모멘텀 유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선도해 온 것은 GATT 체제였다. 그 동안 8차에 걸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1970년대 이후부터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철폐를 위한 노력이 협상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해 왔다. 그 결과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연평균 8%에 달하는 높은 세계무역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GATT 시대의 무역성장률은 세계의 생산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였다. 또한 UR 협상의 타결로 무역자유화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농업부문과 서비스분야의 자유화가 WTO 안에서 논의되게 되었고 지적재산권, 반덤핑 이외에도 많은 새로운 이슈가 논의대상이 되면서 WTO는 세계무역을 총괄하는 국제기구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GATT/WTO의 9번째 다자협상으로 기록되는 DDA 협상은 WTO 출범 이후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산물과 서비스에 관한 규범 강화 문제가 이미 제기되어 있었고, 여기에 환경,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새로운 통상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반덤핑 및 WTO 분쟁해결규범을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개도국들의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었고 UR 협정 이행문제와 개도국에 대한 다양한 특혜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번 DDA 협상은 이러한 개도국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 여부가 협상 성공의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DDA 협상 진행상황은 그다지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다. 서비스분야의 협상처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농산물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회의에서는 협상의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합의부터 지연되고 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특혜조치 부여를 둘러싸고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기대되었던 각국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합의 도출이 무산되면서 향후 협상의 전망을 낙관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DDA 협상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닌 제5차 각료회의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는 데 실패함으로써 최소한 협상일정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DDA 협상 타결이 무산될 경우 세계 무역환경은 지역블록화, 보호주의 조치 도입 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1993년 UR 협상 막바지에 그 타결 전망이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각국이 다자체제 불안에 따라 취했던 경쟁적 지역주의 정책을 상기해 보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곧 세계 모든 국가가 손해 보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DDA 협상의 종료시한은 2005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당초의 협상타결 목표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2) 다자무역체제의 공고화

원래 예정보다 2년 지연되기는 했지만 DDA 협상의 출범은 세계경기 부진의 심화, 국가간 통상마찰의 증대, 세계무역 위축 등의 도전 요인에

대해 WTO가 시장개방 확대와 새로운 무역규범 제정 및 강화를 통해 다자무역질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침체된 세계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DDA 협상에서는 주요 통상 혹은 통상 관련 이슈들을 망라하는 포괄적 의제를 협상의제로 채택하였다. 만약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WTO는 새로운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주요 문제를 관할하는 세계무역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확고히 하게 될 것이다.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GATT 체제의 강화, 곧 WTO 체제의 출범을 가져왔듯이 DDA 협상의 성공은 세계무역질서를 이끄는 주체로서 WTO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제4차 WTO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가입이 확정됨으로써 WTO는 세계 모든 주요 무역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명실공히 세계무역을 주관하는 다자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중국의 가입으로 세계무역의 대부분이 WTO의 관할하에 편입됨은 물론 중국의 개혁, 개방을 가속화함으로써 무역의 양적 확대를 가져오게 되어 DDA 협상 출범으로 인한 무역자유화 흐름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성장세 회복에도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다만 중국의 가입과 함께 WTO 규범이 관할하는 통상영역이 확대되고 통상문제의 성격이 복잡다단해지면서 WTO에 회부되는 국가간의 통상마찰은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중재, 해결할 수 있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개선을 위한 논의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분쟁해결을 위해 WTO에 의존하는 경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분쟁해결절차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WTO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2. 지역주의 확산과 다자체제와의 보완적 관계

가. 최근의 지역주의 추세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주의 추세는 1995년 다자체제의 중심을 이루는 WTO 체제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오히려 확대, 심화되고 있다. 먼저 지역적으로 지역무역협정 추세는 전세계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미주지역의 NAFTA에 이은 FTAA 추진, EU의 협력 심화 및 회원국 확대, 그리고 동아시아지역 경제협력의 활성화 등 범지역 차원의 확대 및 심화 추세와 더불어 수많은 소지역 혹은 양자 차원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수적으로는 GATT 출범 이후 2002년 말까지 GATT/WTO에 통고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250개가 넘는다. 그 중에서 1994년까지 통고된 협정이 124개인 데 반해 WTO가 출범한 1995년 1월 1일 이후 통고된 협정은 130개로 지난 8년 동안 통고된 지역무역협정이 이전 47년간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현재 발효중인 협정이 180여 개이며 그밖에도 80여 개의 협정이 아직 WTO에 통고되지 않는 것임은 사실이지만 실제 협상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계획 혹은 협상이 진행중인 협정이 타결된다고 가정하면 2005년까지는 총 300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대 추세는 일반적으로 냉전체제의 붕괴와 세계경제의 다극화라는 두 가지 현상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미·소간의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국제질서는 이념을 둘러싼 대립 구도로부터 경제적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로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세계질서의 변혁을 바탕으로 이미 1970년대부터 진행되어 오던 세계경제의 3극화는 3극을 형성하는 핵심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 구도를 창출하게 되었다. 유럽의 지역무역협정은 이미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미국 중심의 미주지역과 일본이 중심이 되

는 동아시아지역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주의 추세는 이제 전세계를 무대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지역주의 생성의 배경에는 냉전의 종식과 세계경제의 다극화 요인이 작용하였지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전반의 지역무역협정과 후반의 그것 사이에는 그 원인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990년대 전반의 세계무역환경은 UR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의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진다. 협상의 타결 전망이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미국은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통해 동아시아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NAFTA의 체결을 통해 멕시코를 끌어들이며 미주지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과거 다자체제를 이끌어 오면서 지역무역협정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던 미국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참여는 유럽 통합의 심화는 물론 아시아를 포함하는 여타 지역의 지역무역협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1990년대 후반의 상황은 이와는 다소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WTO의 성공적 출범으로 세계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정도 해소되었다. 출범 이후 WTO는 비교적 세계무역질서의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1990년대 전반에 팽배했던 지역주의의 배타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감소하였다.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지역주의의 배타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해소라는 상황 변화가 역설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도미노적 확산과 결부되면서 지역무역협정 추세는 더욱 확산되고 가속화되었다.

최근의 지역무역협정 확산 추세는 과거의 그것과 구분되는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특히 NAFTA의 체결을 계기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수직적 결합을 통한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칠레와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고 한 걸음 나아가 전미주지역을 포함하는 FTA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U 또한 동

유럽 8개국 및 지중해 연안 2개국 등 10개국의 2004년 신규 가입을 공식 결정함으로써 머지않아 수직적 결합을 통한 지역무역협정은 범세계적으로 보편화될 전망이다.⁵⁾ 둘째, 최근의 지역무역협정은 단위협력체당 참여국 수의 증대로 점차 광역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화는 주로 기존 협력체의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지역무역협정체간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EU는 당초 6개국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15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4년에는 회원국의 수가 25개국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FTAA는 미주 34개국이 개별 국가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미의 NAFTA와 남미의 MERCOSUR간 통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광역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지리적 인접성을 초월하는 지역무역협정 추세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효율의 상승은 인접국가간 협력에서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FTA와 같은 경제적 효율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은 인접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의 지역무역협정은 이러한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어떤 지역의 국가와도 통합이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다. 미국·요르단, 미국·이스라엘의 FTA는 정치적 성격의 지역무역협정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싱가포르, EU·칠레 및 한국·칠레 FTA는 바로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을 초월하는 지역무역협정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지역무역협정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통합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ASEM, APEC과 같은 지역내 혹은 지역간 협력을 위한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에서 시작하여 단일통화권을 형성한 EU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의 통합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지역무역협정의 형식에 있어서는 FTA가 가장 보편적 형태이다. 또한 지역무역협정 협정이 관할하는 어젠다의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형성되는 대부

5) 최근의 EU 확대 추세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박홍규(2003) 참고

분의 무역협정은 전통적인 관세인하 이외에도 서비스 무역자유화와 투자 자유화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반덤핑,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의 무역규범문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을 지향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역무역협정들은 협력분야나 그 심도에 있어 다자규범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까지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다자 차원의 자유화를 선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DD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더라도 지역무역협정의 가치는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향후 지역무역협정 추세는 다자질서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나. 다자주의와의 관계

WTO가 출범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체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것은 당시 지역주의 확산 추세의 발단 자체가 다자체제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에서 비롯되었고, 실제 UR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역주의가 다자체제를 대신하는 지배적 질서로 자리잡아 배타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근거 있는 우려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UR 협상은 타결되었고 그 결과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가 출범하였다. 출범 8년을 맞는 WTO는 그 동안 DDA 출범을 전후하여 다소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무역협정은 더욱 확대되었고 오늘날에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와 지역주의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다자체제의 정착이 역설적으로 지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와 다자 무역질서의 정착으로 경제의 범세계적 통합이 하나의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배타적 지역주의는 그 효용성이 저하됨은 물론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지역무역협정 확산 추세는 지역주의 도미노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될수록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높아짐으로써 대부분의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가지는 이론적 모순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의 지역무역협정은 개방성과 다자체제와의 정합성(consistency)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무역협정체는 협력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세계화시대에 생존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자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 지역무역협정 추세는 다자체제와의 보완적 공존관계를 유지하면서 더욱 확대, 심화되어 나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 확대

가.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지역무역협정의 추세는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이 과거에 비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동아시아이다. 동아시아지역 최초의 지역무역협정은 ASEAN 6개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인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이다. 1992년 제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AFTA는 그 뒤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ASEAN 후발국들이 참여하여 현재는 동남아 10개국을 관할하는 FTA로 발전하였다. 이후 이 지역의 자유무역협정 논의는 주로 ASEAN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전개되었다.⁶⁾ 즉 ASEAN은 중국과의 쌍무

6)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지역무역협정 논의 추세에 대해서는 Cheong(2002) 참고

적 FTA 이외에도 일본, 인도 나아가서는 호주·뉴질랜드간 FTA인 CER과의 FTA를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이 ASEAN 개별국가와의 FTA를 체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여 그 대상이 아시아지역을 넘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이 지역 경제협력이 ASEAN을 넘어 동아시아지역 전체로서의 지역무역협정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ASEM의 출범과 1997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중·일 3국과 ASEAN을 포괄하는 이른바 ASEAN+3 차원의 협력이 구체화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전부터 APEC을 통한 다각적인 경제협력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APEC 자체가 협력을 위한 협의체(forum)에 지나지 않고 자발적이고도 일방적 자유화 논의가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역내 국가간 FTA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1997년부터 논의되고 있는 ASEAN+3 협력구도는 전체 동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FTA 창출에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 FTA(EAFTA) 창설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ASEAN+3 협력체제의 경우 아직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협력사업의 선정, 시행 등에 있어서도 체계성 및 효율성이 결여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ASEAN+3 협력체제는 ASEAN 중심의 협력구도를 유지해 왔으며, ASEAN 국가들간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을 초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체로서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은 상당 기간 동안 지역내 협력구도의 단계적 변화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무역협정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한국은 최초로 칠레와의

FTA 추진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일본과의 FTA 체결을 위한 민간차원의 검토에 들어갔었다. 2003년 12월 현재 한·칠레 FTA는 국내 비준 절차를 남겨놓고 있고 한·일 FTA는 공식 검토단계를 완료하고 2003년 말부터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밖에도 싱가포르와의 FTA도 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02년 초부터 싱가포르와 FTA를 발효시킨 데 이어 한국, 멕시코 등과의 FTA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2000년 11월 ASEAN과의 정상회의에서 FTA를 제안한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SEAN이 중국과 FTA를 체결하기로 한 배경은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회원국들이 겪고 있는 경기침체가 일차적으로 높은 대미무역 의존도에 있다고 보고 중국과의 FTA로 이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기존의 대ASEAN 무역적자 구조를 감수하면서도 WTO 가입으로 향후 중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우려를 덜어줌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오던 한·중·일 FTA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연구 검토하자는 능동적 제안을 함으로써 다소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한·중·일 3국 FTA 논의가 다소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상에서 본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의 적극적 입장 변화로 미루어 향후 수년 이내에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다수의 지역무역협정이 협상단계로 이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향한 대체적인 구도가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동아시아내 지역무역협정의 특징과 도전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한 동아시아의 변화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ASEM의 출범을 계기로 가시화되었다. 이것은 지역무역협정의 동기가 동아시아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동아시아내 지역무역협정 활성화는 범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추세에 대한 수동적 대응 의미가 강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 발전을 위해 무역과 금융부문을 망라하는 지역무역협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미약하나마 지역금융기구의 설립과 동아시아 FTA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IMF의 처방에 대한 이 지역 국가의 실망과 불안이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요구로 나타난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무역협정 논의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 일면 역내국간의 양자간, 지역 일부 혹은 지역 전체 차원의 FTA가 논의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에 의한 역외 국가와의 FTA도 동시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의 추구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많은 역내 FTA가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FTA간 대립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예컨대 ASEAN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 자세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일 FTA와 중·ASEAN FTA간의 대결 구도로의 발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동아시아 FTA를 위한 추진력이 아직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역내 양자간 FTA 네트워크는 Bhagwati 교수가 주장하는 spaghetti bowl을 형성하여 지역무역협정의 효율을 저해할 소지도 없지 않다.⁷⁾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적 효율 증진과 경제협력의 조화를 위한 범지역 차원의 협의 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7) Spaghetti bowl 효과에 대해서는 Bhagwati(1996) 참고

4.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3국간 협력 논의⁸⁾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음 해부터 정례화되면서 3국간 협력 논의도 심화되고 있다. 이후 2001년 11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간 경제협력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3국간 경제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3국의 통상장관과 재무장관이 함께 참석해 WTO 내에서의 한·중·일 공동대처 방안과 거시경제정책, 재정정책, 통상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3국간 FTA 논의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3국간 FTA 논의 자체가 3국간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제안하였다. 이후 3국의 국책연구기관, 즉 한국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의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 일본의 총합연구개발기구(NIRA)가 한·중·일 FTA에 대한 공동연구를 2003년(3년의 연구기간 설정) 초부터 시작하였다. 당시 일본은 한국과의 FTA를 먼저 추진하고, 향후 적절한 시점에 일·중 FTA를 추진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자 일본도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었다.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다섯 번째 만남을 가진 한·중·일 3국의 정상은 경제, 안보, 사회·문화를 중심으로 한 14개 분야에 대해 정상회담을 갖고 이들 분야에 대한 협력 이슈를 포괄하는 첫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중·일 FTA 체결과 무역 및 투자 촉진, 금융, IT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WTO에서 3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

8) 정인교·방호경(2003)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결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인적교류, 문화, 공공위생, 스포츠 및 지자체간의 교류 협력강화와 인신 매매, 마약거래, 돈세탁, 국제경제 및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표 2-1>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과정

일 시	장 소	주요 논의사항
제1차 1999년 11월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식 조찬모임 ■ 중국의 WTO 가입문제 등 경제협력방안 논의 ■ 한·중·일 경제협력증진에 대한 공동연구추진
제2차 2000년 11월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3국간 정상회담 정례화 합의 ■ 한·중·일 국책연구기관간 경제협력 연구 합의
제3차 2001년 11월	브루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간 경제장관회의 정례화 합의 ■ 비즈니스 포럼 개최 ■ 한·중·일 공동연구 확대 합의 ■ 테러리즘, 국제범죄, 환경 등 초국가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3국 경찰당국간 협조체제 인식
제4차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제안 ■ 한국은 동북아 3국의 연구기관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중국측 제의에 동의
제5차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공동선언문 채택(경제분야 협력, 한반도 핵문제, 사회, 문화적 협력, 초국가적 범죄 행위 단속 협력 등) ■ 한·중·일 FTA 연구결과 논의

자료: 정인교·방호경(2003)

가. 경제분야 협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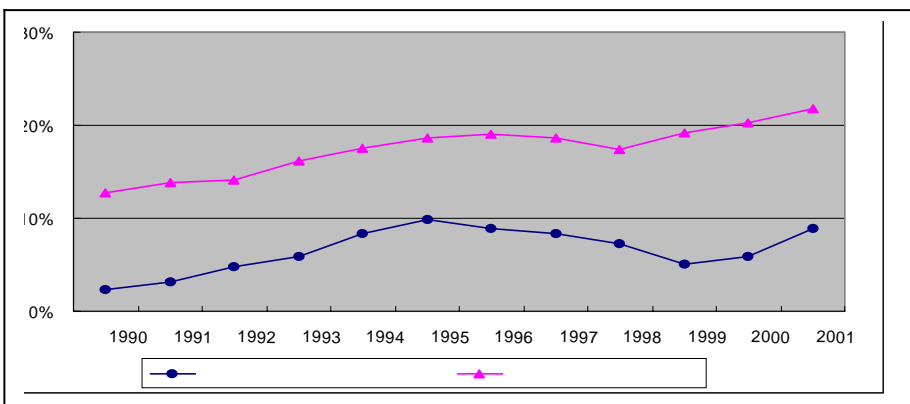
2003년 정상회의에서 3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발전연구중심(DRC),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NIRA)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2003년도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적절한 시기에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이 달성되도록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입장을 같이하였다.

3국은 역내 무역촉진을 위해 관세 및 물류·유통분야의 협력과 무역분쟁의 최소화를 위한 협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역내 물류협력의 경우, 역내에 설치된 자유무역지역, 수출촉진지역 등을 정비하고, 관련 법규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역내 주요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사실 그 동안 동북아시아는 교통·물류부문에 대한 법적·제도적·기술적 장벽이 많았다. 한·중·일 3국간 물류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면 역내 물류협력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달성에 기여하게 것이다.

또한 2003년 정상회담에서 3국의 정상은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역내 국가들간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그 동안 3국의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제기된 투자 장애요인들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BIT) 체결 방안에 대해 비공식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림 2-1>에서 보듯이 역내 직접투자가 역

<그림 2-1> 한·중·일간 역내 직접투자와 역내 무역의 비중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200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연보』, 각호; 對外貿易經濟合作部,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鑒』, 각호; China Statistics Press, *China Statistical Yearbook*, various years;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various years; IMF, *Direction of Trade*, 2002; www.jetro.go.jp/ecj/trade.

내 무역보다 부진한 편이고, 이를 통해 투자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결과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며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이룩함으로써 결국 국가경제에 이득을 가져온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 역내 직접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투자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이 요구되어 왔다.

역내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3국 정상은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Chiang Mai Initiative(CMI)를 이행하고 역내 금융안정 메커니즘 창설과 역내 채권시장 육성 연구를 포함하여 지역 금융협력을 계속 심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⁹⁾ 현재 아시아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채권기금(ABF)이 설립되어 있으며,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왑협정(BAS)이 체결되어 CMI 구상은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나. 안보 및 사회·문화 분야 협력

북한 핵문제가 동북아 안정의 위협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장애요인 중의 하나임을 감안하여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안보 대화와 함께 군축협력을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 예방, 억제 등을 위해 국제적 틀 속에서 효과적인 수출통제를 포함한 정치, 외교,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한·중·일 3국의 진정한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앞서 3국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인적교류의 확대와 역내 문화교류 증대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한·중·일 정상은 3국간 활발한 인적교류와 문화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환학생 프로

9) CMI는 동아시아 국가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조치임.

그램을 확대하고 언어교육 및 문화교류를 장려하며 관광상품의 공동개발(3국 통합관광패키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교류와 협력을 증진 시키기로 합의하였다.

5.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은 동아시아 경제 활성화 및 동북아 한·중·일 FTA에 긍정적인 요소를 줄 수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고성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대체수출시장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WTO 가입으로 중국은 통상제도를 선진화하게 되어 자국의 FTA 정책은 물론이고, 동북아 3국간 FTA 논의의 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

중국은 대외개방을 선포한 1978년 이후 2001년까지의 23년 동안 연평균 9.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GDP 규모는 2001년 기준 1조 1,558억 달러로 세계 제6위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하였다. 부문별 구체적인 생산력을 보면 2001년 현재 전세계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 100여 개에 달한다. 1차 산업에서 곡물, 면화, 과일,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생산량이 세계 1위이며, 공산품의 경우는 컬러TV, 연탄, 시멘트, 화학비료 등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개방 초기의 공급부족 상태에서 벗어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구매자시장으로 전환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양적 측면의 빠른 성장뿐 아니라 경제의 질적 구조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1차 산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는 대신 2·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

다. 1979년 당시 28.1%에 달하던 1차 산업의 비중은 2001년 15.2%로 감소한 대신,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경우는 같은 기간 각각 48.2%와 23.3%에서 51.2%와 33.6%로 증가하였다.

대외개방의 확대에 따른 중국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1978년 개방 당시 206억 달러 불과하던 무역규모는 2001년 5,098억 달러로 연평균 15%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세계 무역순위도 1978년 25위에서 2002년 세계 5위 국가로 부상하였다.¹⁰⁾ 중국경제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분야는 외자유치 분야이다. 중국의 외자유치는 1979~88년간 유치액이 122억 달러에 그쳤으나 1989~2001년 기간의 그것은 3,814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건당 외자유치 규모도 1980년대 초반의 평균 120만 달러에서 1990년대 후반에는 3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지금까지 총 4,5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왔고, 세계적인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2년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국이 되었다. 투자 영역도 농업, 제조업, 요식업 등에서 전신, 소매유통, 금융업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2002년 8.0%를 성장한 데 이어 2003~04년에도 7.5%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0년이 되면 중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지속적 고도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 또한 적지 않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금융부문의 부실채권 문제와 실업문제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중국의 국영은행들은 GDP의 50% 이상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을 부실기업에 지원하면서 동반 부실화되었는데,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이 분야의 개혁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정치·사회적

10) 2002년도 중국의 수출규모는 전세계 5위, 수입규모는 전세계 6위였음. 2003년의 경우, 전세계 제4위의 무역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측면에서는 경제적 자유화에 비해 낙후된 정치분야의 개혁 부진, 지역간 경제력의 불균형, 부정부패 만연, 불충분한 사회복지제도 및 환경 악화 등이 지속적 성장의 주요 장애로 등장할 것이다. 중국이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고도 성장을 지속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외국인투자의 활성화에 따르는 생산성 향상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제반 애로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할 것이며, 특히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본 중국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 틀림없다.

나. 중국의 WTO 가입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143번째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986년 GATT에 가입을 공식 신청한 이후 15년 만에 다자무역체제의 일원으로 정식 참여하게 된 것이다. 2002년 세계 5번째 무역국인 중국은 IMF와 세계은행 등에 이어 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거의 모든 주요 국제기구에 가입하게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곧 중국경제가 본격적으로 세계시장경제로 통합되게 됨을 의미한다. WTO 가입에 따른 세계경제에의 편입은 중국경제 및 세계경제에 대해 기회와 도전의 양 측면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그것이 가지는 구체적 의미는 중국경제의 개혁·개방 심화,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그리고 동북아시아 협력 양상의 변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첫째, 개혁·개방의 지속과 심화로 중국경제의 제반 규범, 정책 및 관행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적응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가입협상을 통해 관세, 비관세장벽의 완화, 철폐는 물론 투자와 대외무역권 제도의 개혁 및 다양한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합의하였고, 더욱이 대부분의 개혁·개방에

대한 합의사항을 WTO 가입 후 3~5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중국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가입에 따른 경제개혁의 가속화는 또한 중국 정치체제의 개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세계질서로의 편입에 기여할 것이다. 중국시장이 개방되고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무역구조도 점차 변화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 무역구조는 중국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특화에 의해 저렴한 임금을 이용한 노동집약적인 수출구조가 보다 뚜렷해질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 확대 및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무역구조도 점차 자본 혹은 기술집약적 수출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개혁·개방의 가속화에 따르는 부작용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소득불균형의 심화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확산되어 개방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개혁이 본격화되면 지역간, 업종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조업 내에서도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산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은행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실업이 급격히 상승하여 중국내 반개방 정서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WTO 가입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이다. 중국이 IMF와 세계은행에 이어 WTO에 가입하여 주요 다자간 국제경제기구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통틀어서 세계 제1의 외국인투자 유치국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국제무역 분야에서는 물론 국제자본 및 금융시장에서도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고 아직은 진정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완성된 단계가 아닐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주국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정치적 가치와 경제적 수준에서 주요 선진국과의 이질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질성 때문에 중국이 세계경제로 편입되고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범세계적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 등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시각과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이 중국의 대외관계, 특히 미·중 관계의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가입으로 WTO내 역학관계의 변화도 예상된다. 즉 이미 수적으로 월등히 우세한 WTO내 개도국들이 중국을 구심점으로 응집력을 높여갈 경우 지금까지 미국과 EU가 주도해 온 WTO 중심의 세계무역질서에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수도 있다. 지난 두 차례의 각료회의에서 이미 나타났듯이 DDA 협상의제 및 협상과정에서 선진·개도국간 입장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어 중국의 가입으로 이러한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WTO 가입의 세 번째 의미는 동북아지역의 협력 양상의 변화, 특히 지역 차원의 산업구조조정일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경제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중국과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가 경쟁적인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높아질 것이다. 한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들은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가속화를 우려하는 한편 ASEAN 국가들은 무역과 외국인투자가 이 지역으로부터 중국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경제발전의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이 가지는 성격과 지역의 대응에 따라 중국경제는 인접국가에 대한 경제적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을 전제로 이와 보완적인 산업 및 무역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산업구조 조정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 국가간 FTA 체결의 확산을 통한 지역무역협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중국은 세계의 시장으로서 그리고 제조업의 기지로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더욱이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르는 경제적 세

력구도의 변화에 세계경제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세계 각국,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경제와 보완적 산업구조의 형성을 통한 경제적 상생관계의 구축을 지속적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단·중기적 시각에서 볼 때 중국경제는 주변국 경제에 대한 위협이 되나 지역경제의 리더가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현재 과잉투자로 경제적 비효율 문제를 안고 있고 수출구조상 독립적 시장구조를 갖추지 못하여 독자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시아 성장의 견인차로서 미국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3장 한·중·일 FTA 추진 당위성

2002년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3국간 FTA에 대한 국책연구기관간 공동연구가 진행중이지만, 3국간 FTA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한국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1998년 10월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기업인회의(Korea-Japan Business Conference)에서 한국측 참가자들은 동북아 3국간 FTA 체결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처음 제안하였으며, 그 후 정부에 대해 이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에는 2003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경제심포지엄에서 한국측이 이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중국의 개방수준과 역내 정치적 어려움 등을 들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한·중·일 FTA 가능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하는 등 과거의 소극적 자세로부터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경제관계와 3국간 FTA에 대한 추진 당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은 3국간 경제관계를 고찰하고, 무역, 투자관계, 분업 및 경쟁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제2절에서는 한·중·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3절에서는 한·중·일 FTA의 무역자유화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제4절에서는 한·중·일 FTA에 대한 장애요인을 논의한다.

1. 한·중·일 3국간 경제관계

중국경제의 부상에 힘입어 한·중·일 3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면서 EU, NAFTA 등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도약함에 따라,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확대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주요 중심국가인 한·중·일 3국은 2002년 전세계 GDP의 17.7%를 점유하고 있으며, 무역량에 있어서도 13.2%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경제와 한국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왕성한 내수와 수출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 3-1> 세계경제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위상(2002년 기준)

	총인구 (억 명)		국내총생산(GDP) (십억 달러)		총무역 (십억 달러)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한·중·일	14.6	23.6	5,698	17.7	1,733	13.2
E U	3.8	6.1	8,637	26.8	4,658	36.8
NAFTA	4.2	6.8	11,809	36.7	2,672	21.1

자료: Global Insight DRI-WEPA(2003), *World Overview*
 IMF(2003),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MF(2003),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한편 직접투자의 경우, 한·중·일 3국이 2001년 전세계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EU, NAFTA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8.8% 증가한 1,016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고). 특히 2001년 전세계의 직접투자 규모가 2000년에 비해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일의 직접투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거대경제권으로서의 동북아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중·일의 전세계 직접투자 비중은 2000년 3.3%에서 2001년에는 7.4%로 크게 상승했다(그림 3-1 참고). 이를 해외 및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으로 살펴보면, 한·중·일 3국은 각각 7.5%,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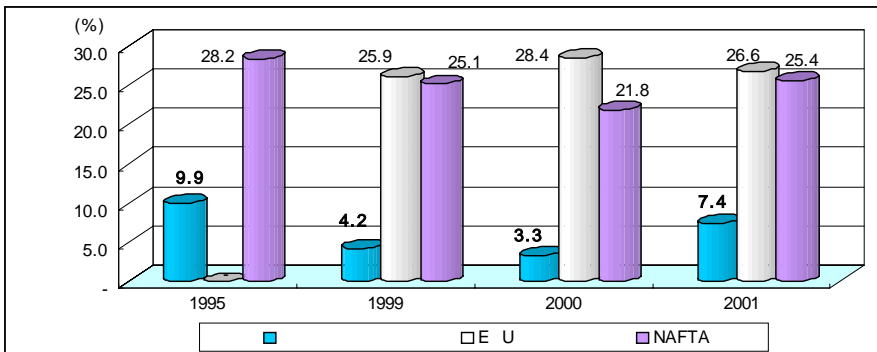
<표 3-2> 한·중·일, EU, NAFTA의 직접투자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1995		1999		2000		2001	
	해외	외국인	해외	외국인	해외	외국인	해외	외국인
한·중·일	281	377	282	604	375	559	480	536
E U	n.a.	n.a.	3,381	2,111	3,985	4,000	2,286	1,381
NAFTA	1,103	767	2,045	3,264	2,256	3,880	1,671	1,830

자료: IMF(2003),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그림 3-1> 전세계 직접투자에서 한·중·일, EU, NAFTA의 비중



자료: IMF(2003),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가. 한·중·일 3국의 무역 추이

1995년부터 2002년 기간중 한·중·일 3국의 무역규모는 1995년 1조 3,171억 달러에서 2002년 1조 6,350억 달러를 기록, 연평균 약 3.0%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3국의 무역규모 비중은 1995년 12.7%에서 2002년에는 13.2%로 소폭 상승하였다.

각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무역규모는 급속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개별 비중은 1990

년대 후반 들어 상당한 변화를 보여 왔다(표 3-3 참고). 전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1995년 2.4%에서 2002년에는 2.5%로 상승하여 큰 변화는 없지만, 중국의 경우 2.9%에서 6.0%로 급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8.6%에서 6.5%를 기록,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세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2.6%에서 2.3%로, 6.5%에서 5.0%로 하락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2.5%에서 4.3%가 높아져, 큰 폭으로 상승했다.

<표 3-3> 한·중·일 3국의 무역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출	한·중·일	7,170 (14.0)	6,918 (12.9)	7,400 (13.4)	7,038 (12.9)	7,582 (14.1)	9,008 (14.2)	8,206 (13.6)	9,537 (15.0)
	한 국	1,251 (2.4)	1,297 (2.4)	1,362 (2.5)	1,323 (2.4)	1,437 (2.7)	1,723 (2.7)	1,504 (2.5)	1,575 (2.5)
	중 국	1,488 (2.9)	1,512 (2.8)	1,829 (3.3)	1,836 (3.4)	1,952 (3.6)	2,493 (3.9)	2,667 (4.4)	3,834 (6.0)
	일 본	4,431 (8.6)	4,109 (7.7)	4,210 (7.6)	3,879 (7.1)	4,194 (7.8)	4,792 (7.6)	4,035 (6.7)	4,128 (6.5)
수입	한·중·일	6,001 (11.6)	6,384 (11.7)	6,255 (11.1)	5,141 (10.4)	5,986 (10.4)	7,461 (11.4)	7,338 (11.6)	7,794 (11.6)
	한 국	1,351 (2.6)	1,503 (2.8)	1,446 (2.6)	933 (2.0)	1,198 (2.1)	1,605 (2.5)	1,411 (2.2)	1,566 (2.3)
	중 국	1,291 (2.5)	1,389 (2.6)	1,422 (2.5)	1,403 (2.5)	1,676 (2.9)	2,061 (3.2)	2,436 (3.9)	2,884 (4.3)
	일 본	3,359 (6.5)	3,492 (6.4)	3,388 (6.0)	2,805 (5.1)	3,113 (5.4)	3,795 (5.8)	3,491 (5.5)	3,344 (5.0)

주: () 안은 세계 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Global Insight DRI-WEPA(2003), *World Overview*.

IMF(2003),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MF(2003),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02년 들어 한국은 일본의 3위, 중국의 4위 수출시장이며,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2위 수출시장, 그리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3위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한편 1995~2002년 기간중 한·중·일 3국의 상호의존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표 3-4 참고). 다만 2002년 중국의 대한·대일 의존도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 대미 의존도의 급격한 상승이 특징적이다. 한국의 대중·대일 수출비중은 1995년 20.0%에서 2002년에는 21.6%로 상승하였으며, 일본의 대한·대중 수출비중도 같은 기간중 12.1%에서 16.0%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대한·대일 수출비중은 같은 기간중 23.6%에서 17.5%로 낮아졌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대중 수출비중이 급상승한 반면, 한·일 양국간 수출비중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3-4> 한·중·일 3국의 지역 및 국가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한 국				중 국				일 본			
	1995	2000	2001	2002	1995	2000	2001	2002	1995	2000	2001	2002
한 국	-	-	-	-	4.5	4.5	4.7	3.7	7.1	6.4	6.3	6.7
중 국	7.0	10.7	12.1	12.8	-	-	-	-	5.0	6.3	7.7	9.3
일 본	13.0	11.9	10.8	8.8	19.1	16.7	16.9	13.8	-	-	-	-
합 계	20.0	22.6	22.9	21.6	23.6	21.2	21.6	17.5	12.1	12.7	14.0	16.0
미 국	18.5	22.0	20.9	21.3	16.6	20.9	20.4	28.2	27.5	30.1	30.4	29.2
E U	12.4	13.5	13.1	12.7	12.9	15.3	15.4	15.2	15.9	16.4	16.0	14.7
기 타	49.1	41.9	43.1	44.4	46.9	42.6	42.6	39.1	44.5	40.8	39.6	40.1

자료: IMF(2003),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한·중·일 3국간 무역구조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역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한·중·일 3국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한국에 대해 1992년 이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표 3-5 참고).

<표 3-5> 한·중·일 3국간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한 국		중 국		일 본	
	대중국	대일본	대한국	대일본	대한국	대중국
1990	n.a.	-5,936	-5,912	1,554	5,756	-5,912
1991	-2,438	-8,764	1,113	220	7,707	-5,643
1992	-1,071	-7,859	-185	-1,987	6,190	-5,005
1993	1,221	-8,452	-2,500	-7,521	7,450	-3,298
1994	740	-11,867	-2,942	-4,829	10,837	-8,882
1995	1,797	-15,509	-3,600	-541	13,962	-13,988
1996	2,953	-15,394	-4,957	1,698	13,389	-18,578
1997	3,625	-13,060	-5,749	2,830	11,491	-20,135
1998	5,493	-4,518	-8,755	1,411	4,576	-16,897
1999	4,813	-8,279	-9,420	-5,369	10,471	-19,620
2000	6,634	-15,002	-11,105	6,260	10,599	-24,058
2001	4,887	-10,127	-10,868	2,161	8,071	-26,832
2002	5,794	-16,601	-11,179	6,485	12,584	-22,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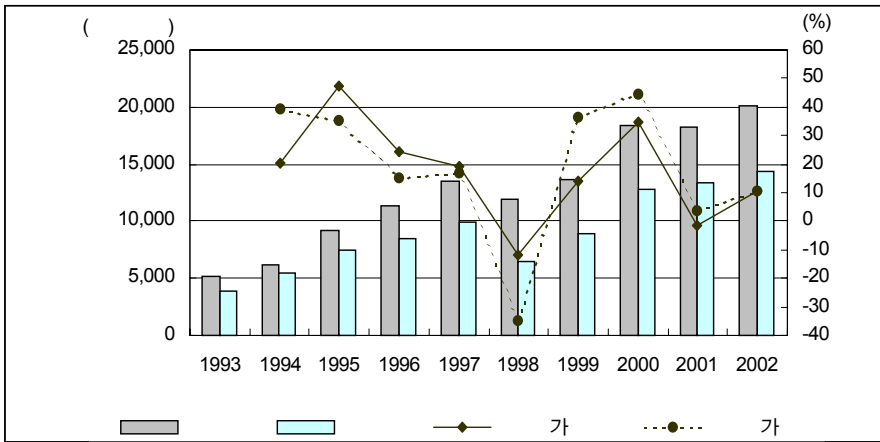
자료: IMF(2003),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한국의 대중국 무역량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1998년 급격한 감소세(수출 11.7% 감소, 수입 35.0% 감소)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02년 수출입 또한 각각 10.5%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무역량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양국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1993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고, 2002년에는 57억 9,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 현상은 양국간 국교수립과 더불어 중국경제의 부상을 들 수 있으며, 중국경제가 연평균 7%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

이면서 한국의 중간재 수입을 크게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품목은 전기전자,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및 섬유제품 등 대부분 중간재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 한국의 대중 무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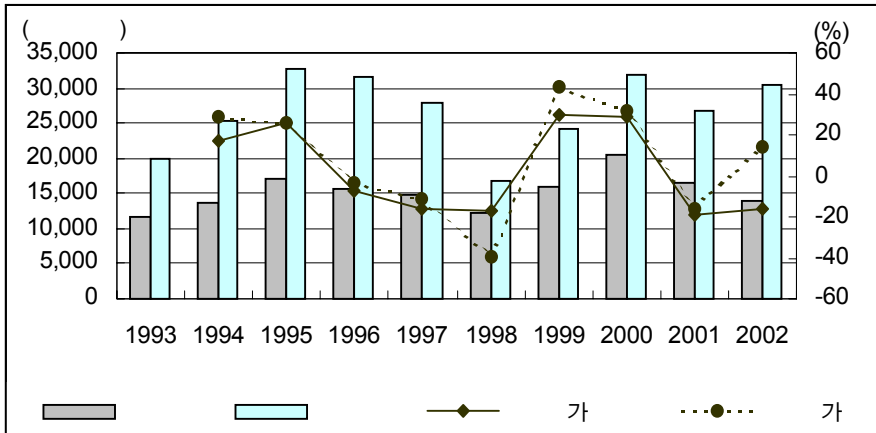


자료: IMF(2003),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는 1965년 국교수립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2년에는 166억 달러 규모의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995년과 1996년 각각 156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축소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2002년 들어 급격한 수입증가(15% 증가)/수출감소(16% 감소)로 인해 대일 적자규모를 또다시 경신했다.

이러한 한·일 무역불균형 문제는 한국의 전기전자 및 기계류 등 주요 수출산업의 높은 대일 중간재 수입의존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한국의 수출증대는 일본의 대한 중간재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한국의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간 수출입은 대부분이 동일하게 전기전자 및 기계류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양국 및 제3국시장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림 3-3> 한국의 대일 무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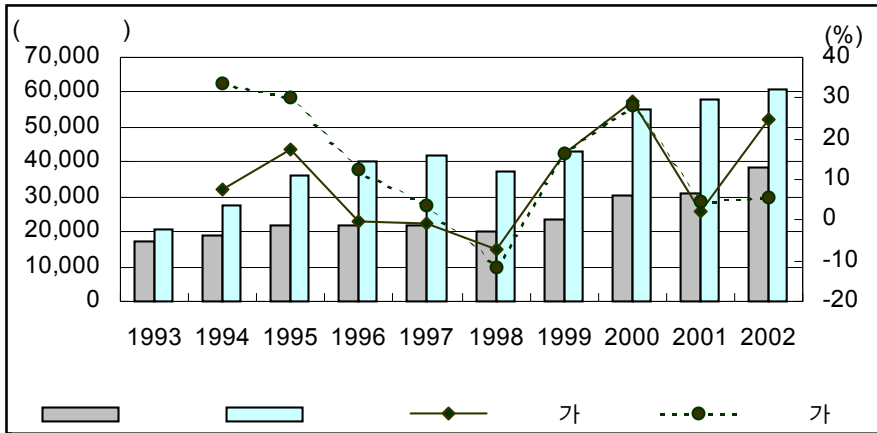
자료: IMF(2003),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1990년대 초 중국의 정치적 사건 및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에 따른 일시적 축소현상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대중 수출입 모두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양국간 무역증대의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는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 확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일본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간 무역수지는 일본의 대중 무역적자 기조가 정착된 상태이다. 일본의 대중 무역적자는 1993년 33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2년에는 무려 7배 이상 증가한 223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일본의 대중 무역역조 현상은 일본기업이 대중 투자를 통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일 역수출 무역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 따른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측의 통계는 일본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양국간 무역의 상당 규모가 홍콩을 경유하는 중개 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입은 홍콩이 아닌 원산지로부터 수입으로 계상하지만 수출의 경우 최종 수요지가 아닌 경유지, 즉 홍콩 경유로서 계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2년의 양

국간 무역수지를 예로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쌍방의 수출에 홍콩 경유부문을 포함시키면 일본측 통계로는 79억 달러의 대중 적자, 중국측 통계로 보면 43억 달러의 대일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일본의 대중 무역 추이



자료: IMF(2003),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나. 한·중·일 3국의 투자현황

한·중·일 3국간 직접투자 규모는 무역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직접투자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은 투자국임과 동시에 투자유입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투자유입국으로서의 비중이 높은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2000년 들어 다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는 1996년 8억 4,000만 달러 규모를 기록한 후, 감소세로 돌아서 3억 달러 수준까지 축소되었지만 2000년 들어 증가세로 반전되어, 2001년에는 5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2001년 한국 해외직접투자에서 대중국 투자비중은 최고 절정을 보였던 1994년 27.5%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14.2%로 상승했다.

한편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는 1995년 44억 7,000만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축소 양상을 보였으나, 2000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1년에는 14억 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2001년 일본 해외직접투자에서 대중국 비중 또한 1995년 8.8%에서 1999년 1.1%까지 급락하였으나, 2001년에는 4.6%로 상승했다.

<표 3-6> 한국과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한국의 대중국	금액	264	632	824	836	633	631	308	433	513
	비중	20.9	27.5	26.8	19.7	19.6	16.2	12.1	10.3	14.2
일본의 대중국	금액	1,691	2,565	4,473	2,510	1,987	1,065	751	995	1,440
	비중	4.7	6.3	8.8	5.2	3.7	2.6	1.1	2.0	4.6

주: 비중은 한국,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일본 재무성 통계를 기초로 작성

아울러 한·일 직접투자 관계도 양국간 무역관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통상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일 직접투자는 각각 199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후, 1999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2001년 한·일 양국은 상대국에 대해 각각 8,000만 달러, 5억 4,000만 달러 투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대일 투자비중은 최고 수준을 보였던 1995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2.2%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일본의 대한 투자비중은 2001년 1.7%를 기록하였다.

<표 3-7>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한국의 대일본	금액	6.0	58.0	105.1	80.6	63.7	22.7	48.3	62.4	80.3
	비중	0.5	2.5	3.4	1.9	2.0	0.6	1.9	1.5	2.2
일본의 대한국	금액	245	400	445	416	442	303	980	814	543
	비중	0.7	1.0	0.9	0.9	0.8	0.7	1.5	1.7	1.7

주: 비중은 양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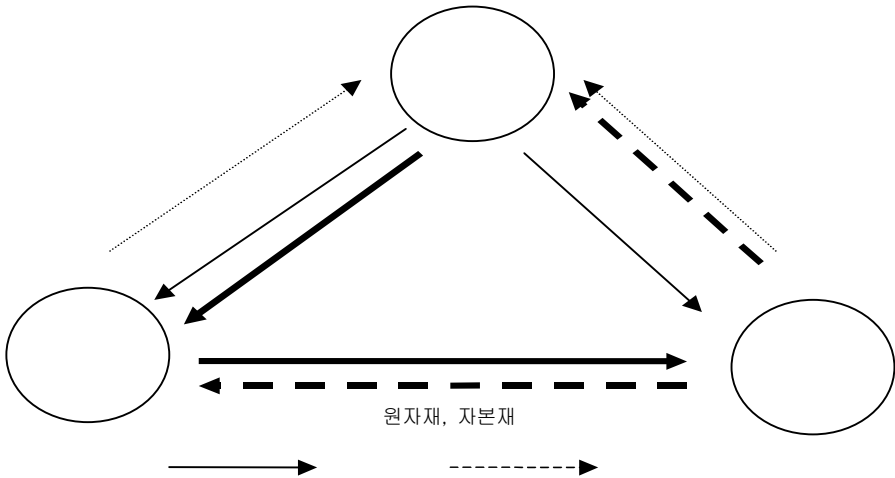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일본 재무성 통계를 기초로 작성

다. 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

한·중·일 3국은 1990년대 들어 지속적인 무역·투자관계의 확대를 통하여 상호의존 및 보완·경쟁관계를 전개한 결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수평적 분업구조의 형태는 한국이 중국에 원자재와 중간재, 중국이 일본에 소비재, 그리고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자본재와 핵심부품 및 소재 등의 원자재를 각각 수출하는 삼각형 구도로 형성되었다(그림 3-5 참고).

이러한 형태는 1990년대 한·일 양국 기업의 대중 직접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한·일 투자기업이 중국내 생산제품을 자국 또는 제3국(주로 미국, 유럽)으로 수출하는 경로를 통해 구축되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와 무역관계는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풀세트(자기완결)형 생산구조를 지향해 온 한·중·일 3국 관계는 중국경제의 급격한 부상과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등을 배경으로 수출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5> 한·중·일 3국간 분업구조



자료: 산업자원부(2003), 『한·중·일 제조업 및 부품·소재 동태적 경쟁력 비교 분석』

우선 이흥배·岡本信廣(2002)이 국제산업연관(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 모델을 활용하여 산출한 분석을 토대로 한·중·일 3국간의 분업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¹¹⁾ 동 연구는 자국 산업의 생산수요가 상대국 산업의 전체 생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후방연관효과를 사용하여, 3국간의 상호의존 및 보완·경쟁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해서는 섬유제품, 전자·전기기계, 화학제품, 수송기계, 일반기계, 정밀기계, 금속제품 등의 순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전자·전기기계, 일반기계, 섬유제품, 금속제품, 정밀기계, 수송기계, 화학제

11) 한·중·일 3국의 상대국에 대한 후방연관효과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국에 대한 의존 및 보완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이흥배·岡本信廣(2002) 참고

품순으로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전자·전기기계, 정밀기계, 일반기계, 화학제품에 대한 후방연관효과의 크기는 여전히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 산업들의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전자·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일반기계, 금속, 섬유, 화학 등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전자·전기기계, 수송기계, 일반기계, 정밀기계, 금속, 화학, 섬유순으로 후방연관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일·중간 산업의 연관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한·일간 산업의 연관관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업의 한국에 대한 의존도 하락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 상승이라는 연관관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공통적으로 섬유, 화학, 금속, 전자·전기기계, 일반기계, 정밀기계 등에서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동 산업에서의 대한·대일 의존 및 보완관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국의 중간재 수입이 한국과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의존도 비중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중·일 3국의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난 산업, 즉 3국간 분업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산업은 공통적으로 전자·전기기계, 일반기계, 화학 등이며, 이 산업들에 대한 각국의 수요는 상대국의 생산을 크게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 산업의 후방연관효과가 거의 동일 산업에서 크게 나타난 것은 동 산업의 분업관계가 그만큼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3국간 산업의 경쟁관계가 그에 못지 않게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준엽(2003)은 1990~2002년 기간 동안 HS 4단위의 산업분류를 사용하여 한·중·일 3국의 산업내무역과 수직적·수평적 무역의 추세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표 3-8 참고).¹²⁾ 동 보고서의 분석 결과, 지난 10여 년 간 한·중·일 3국간 산업내무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호의존관계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중·일 산업내무역 비중은 수직적 산업내무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수평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증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한·중·일 3국간 무역 구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한·중·일 3국간 무역은 산업내무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내무역은 1인당 소득수준과 시장규모가 크고, 무역상대국의 요소부존도가 비슷하며,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그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즉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1인당 소득수준 향상과 시장규모의 확대가 한·중·일 3국간의 산업내무역 지수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연도에서 산업내무역 지수 크기는 한·일>한·중>일·중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일·중 무역에서는 산업간무역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적은 한·중 무역에서는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한·중·일 3국간 무역에서 산업내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직적 산업내무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중 무역에서는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일 산업간의 가격, 기술수준, 품질의 차이가 비교적 큰 상품간의 무역인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12) 산업내무역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GL(Grubel and Lloyd) 지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동 보고서는 GL 지수가 해당국의 전체무역이 불균형 상태일 경우, 하향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이를 조정한 Adjusted GL 지수(산업내무역지수의 분모인 총무역량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역불균형을 차감하여 조정)를 사용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이준엽(2003) 참고

〈표 3-8〉 한·중·일 산업내무역 지수, 수직적 산업내무역 지수

	adjusted GL index			VIIT of adjusted GL index		
	일·중	한·일	한·중	일·중	한·일	한·중
1990	15.01	40.12	17.14	11.79	32.29	88.89
1991	16.56	37.21	23.35	12.69	25.69	11.67
1992	14.30	37.61	13.74	9.81	29.69	7.83
1993	12.82	39.83	17.84	11.92	30.72	15.27
1994	17.71	47.16	24.69	15.89	34.79	18.39
1995	24.28	50.50	30.52	18.31	36.85	21.82
1996	28.72	51.53	32.49	23.74	43.09	21.20
1997	32.11	54.37	30.33	29.70	42.85	20.83
1998	32.89	48.29	33.76	29.00	41.95	25.31
1999	33.30	47.67	37.19	30.60	40.09	24.12
2000	34.12	48.13	38.21	28.87	39.86	29.97
2001	33.21	50.56	38.66	24.87	34.13	25.53
2002	29.73	54.10	36.26	23.41	33.72	24.12

자료: 이준엽(2003), 『한·중·일 산업내무역구조 분석을 통한 동북아 국제분업 체계 연구』.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한·중·일 3국간 무역에서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 기간 동안 전체 산업내무역의 비중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수평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고려한다면, 한·중·일 3국간 무역이 기존의 요소부존도 차이가 주요한 결정변수인 산업간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에서 점차적으로 동일 산업의 비슷한 가격대의 상품에서 제품차별화를 중시하는 무역형태가 중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국 상품의 경우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의 고급화와 함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한 제품의 다양화에 주력해야 함을 지적할 수 있다.

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한·중·일 3국은 전세계 GDP와 무역의 17.7%와 13.2%를 보유하고 있어 FTA 체결은 당사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역내 3국간 무역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한·중·일의 총 무역 중 동북아 역내국과의 비중은 대체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의 내수시장 잠재력과 저렴한 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일본과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 투자기업은 핵심부품을 모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완제품을 모국과 제3국으로 수출함으로써 투자가 중국과의 무역확대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등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은 미국, EU 등 역외 국가와의 무역에 더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 동안 미국경제의 호황에 따라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망한 수출시장이었지만 한·중·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3국간 무역신장에 심각한 장애가 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우, WTO 가입으로 무역장벽이 상당 수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무역장벽이 높은 편이다.

3국간 FTA는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킴으로써 무역 자체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게 된다. 3국 경제가 생산자원의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상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일반기계, 화학 등 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3국간 분업구조가 확대되고 있어 FTA 체결시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들 산업은 3국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으로 무역장벽 제거시 무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내 다른 산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수입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FTA 추진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FTA로 시장여건이 경쟁지향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동중 업계내 전략적 제휴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어야만 전략적 제휴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전략적 제휴는 공동 마케팅, 공동 기술개발, 공용 부품개발 등으로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한·중·일 각국의 최대 수출상대국은 공통적으로 미국이지만, 그 뒤를 이어 3국이 각각 상호 제2위 및 제3위의 파트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¹³⁾ 그만큼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높아졌고 또한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외 통상정책으로서 지역무역협정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이고도 잠재력이 큰 협력 파트너로서 동북아 3국을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동북아 지역경제에서 어느 한 양자관계의 변화는 제3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에 있어 일본과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동시에 지역주의 확산으로 대표되는 세계무역 흐름 속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가들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적 경제, 산업 및 무역구조로 인해 3국은 FTA를 포함하는 지역무역협력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협력체는 한국, 일본, 중국의 생산요소 보완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한·중·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1)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동아시아지역은 1990년대 이후의 범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서 사실상

13) 동아시아국가의 무역파트너에 대해서는 신현수·이원복(2003) 참고

소외되어 있었다. 동아시아지역이 추진해 온 경제협력체로 APEC과 ASEM이 있으나 이들은 그 통합의 수준에 있어 무역협정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가 그 협력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이 지역은 ASEM이나 APEC을 통한 협력과정에서 통일된 입장을 도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말하자면 지역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의 역외 의존도가 높은 것이 지역무역협정의 태동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준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조차도 그 주도적 역할은 ASEAN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반면 동북아시아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ASEAN 정상회의에 ASEAN+3의 형태로 참여하면서부터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에 대한 공식적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SEAN의 경제 및 시장규모와 경제발전 수준 그리고 개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ASEAN 주도의 지역무역협정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고 이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동북아 3국의 무역 및 투자 측면에서 볼 때 ASEAN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3국의 지역무역협정의 동기를 자극한 것이 1997년의 금융위기였다. 위기에 직면하여 IMF가 내린 경제안정화대책은 한마디로 금융긴축과 재정긴축이었고 전혀 자체적 대안을 가지지 못했던 한국 등 관련국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제상황의 악화를 경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사한 위기의 재발 방지 혹은 예방차원에서 지역금융기구 설립을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지난 1994년의 멕시코 금융위기 때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목도했던 동아시아국가들로서는 그러한 역할을 가능케 했던 NAFTA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지역무역협력체의 설립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지역무역협력체 도입은 선진국이 주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일본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금융위기의 진단에서부터 대응방향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ASEAN 국가간에는 다소의 입장 차이가 노정되기도 하였다. 현재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 일본이 주도하는 지역무역협정 논의가 다소 부진한 상태에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지역무역협정의 실질적 추진은 결국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토대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 적어도 중국의 암묵적 동의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아시아통화기금(AMF) 논의 등에서 확인된 사실은 한국의 협력 없이 일본이 단독으로 지역협력을 선도할 수 없으며 중국이 반대하는 지역무역협정 또한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일본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의 금융협력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의 인식 변화, 특히 중국의 입장이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며 여기에 이르는 첫 단계로서 한·일간의 FTA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일 FTA는 동북아 FTA로 가는 중간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동북아 FTA 또한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FTA로 가는 하나의 중간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서의 지역무역협정

전후 일본경제의 성장과 1960~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그리고 1980년대부터 나타난 태국, 말레이시아 등 ASEAN 국가들의 성장이 뒤를 이으면서 동아시아경제는 오랫동안 세계경제의 주요 성장축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이후 일본경제가 장기침체로 접어들었고 1997년의 금융위기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동아시아경제는 과거에 비해 그 성장동력을 상당히 상실한 상태이다. 1990년대 말 한국 등 동아시아국가들이 금융위기로부터 비교적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초부터 10년 동안 지속된 미국경제의 유례 없는 호황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을 포함하여 유럽 및 일본경제 등 세계 주요국의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동아시아경제의 성장 동인을 외부에서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한편 역내 국가들의 경제상황을 보면 각국의 국내경제로부터 자체적인 회복의 모멘텀을 찾기도 쉽지 않다.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일본의 디플레이션 지속가능성, 한국경제의 부동산 버블가능성, 중국의 부실채권과 실업문제 심화 등으로 자체적 경제 회복 메커니즘을 상정하기 어렵다. 특히 일본경제의 회복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본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경기회복 부진과 이에 따른 동아시아경제의 부진은 일본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디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수요 또한 진작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다. 여기에 막대한 재정적자 규모와 중앙은행의 제로금리정책으로 추가적 재정·금융정책 운용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향후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엔 약세화를 용인 혹은 지향하는 정책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도 지역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우려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 및 동아시아 각국의 국내경제 상황으로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인의 주요 원천 중 하나는 지역무역협정의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와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달라진 지역경제 환경 및 거대규모의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자금의 환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FTA를 통한 무역 및 직접투자의 확대, 채권시장 육성을 통한 간접투자의 확대 등

다각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일본 경제 회생의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일본은 이를 통해 경제력에 걸맞은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경제의 막대한 성장잠재력, 역내 무역과 투자에 바탕을 둔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함께 일본의 역할 증대를 지역무역협정의 활성화로 연결시킬 경우, 이는 지역경제의 회복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출발했지만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가시적 성과는 AFTA와 일·싱가포르 FTA(EPA) 정도에 불과하지만 향후 수년 이내에 적지 않은 수의 FTA가 이 지역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경제집단으로서 개방과 FTA를 통한 허브(hub)화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ASEAN은 AFTA 결성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심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중국, CER(호주·뉴질랜드)과의 FTA는 물론 나아가서는 인도 등 남아시아, 미국 등과의 FTA도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 FTA 네트워크의 구축에 나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출발은 늦었지만 한국과 일본 또한 역내 FTA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양국은 취약 분야인 농업문제가 FTA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또 과거 경제개발의 패턴에서 벗어나 개방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취약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초기에 직면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경우 FTA 정책은 탄력을 받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지역무역협정, 특히 FTA 네트워크는 급속히 확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지역내 지역무역협정이 경쟁적으로 심화되고 복잡화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Cheong(2002)에 따르면, ASEAN 10개국간의 AFTA를 제외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FTA는 양자간 FTA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자협력으로의 발전을 상정하지 않은 소수국간의 FTA가 지나치게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 spaghetti bowl 현상에 따르는 과도한 조정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 아직은 이 지역 경제통합 움직임의 핵은 ASEAN이다. 이에 따라 ASEAN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개별 국가로 볼 때도 일본이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의 FTA를 한국 역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외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칠레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한 데 이어 일본이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멕시코와의 FTA를 고려하는 등 FTA의 도미노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지역내 한 국가가 역외 특정국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내 다른 국가들도 그 역외국과 비슷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는 것으로 경제적 동기보다는 지역무역협정 추세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는 의도 혹은 지역내 주도권 경쟁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동아시아의 지역무역협정은 원래 협력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경제적 효율의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의 범지역 FTA 형성을 저해하고 다자체제와의 정합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은 FTA 후발주자로서 무리한 경쟁을 지양하고 경제적 보완성 제고를 통한 효율의 향상을 기하는 한편, 지역무역협정의 개방성을 유지함으로써 WTO와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중·일 FTA 구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구상은 우선 역내 양자간 FTA 추세를 다자간 협력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전지역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FTA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동아시아 FTA가 다른 소규모 FTA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은 Cheong(2002)에 제시되어 있다. 경제규모나 발전 수준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동북아 3국이 FTA로 통합될 수 있다면 이는 동아시아 전체 통합을 향한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아시아 FTA가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형식으로 완성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동북아 FTA가 형성될 수 있다면 동아시아 FTA는 동북아 3국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3국간 FTA는 동아시아의 지역무역협정에 있어 역내 두 경제대국인 일본과 중국간의 관계를 경쟁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무역협정에서 일본과 중국이 상호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반면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중·일간의 양자간 FTA는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하는 3국간 FT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통합을 달성하고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 FTA로 나아가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4) 지역안보환경 개선

경제통합의 역사를 볼 때 대부분의 주요 지역무역협정은 경제적 성격 외에도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유럽통합의 출범 배경이 그러했고 NAFTA를 비롯한 미국이 주도한 대부분의 FTA 또한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동북아 3국간 FTA의 상황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것 또한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지역 패권을 두고 세계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 핵문제의 대두로 이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있다.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한편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지역경제협력과 안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군사·안보적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협력이 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특히 불행했던 과거 역사뿐 아니라 북한문제 등 지역에 있어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동북아에 있어서는 경제협력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FTA를 한·중·일 3국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이해할 때, 이것은 과거 청산에 대한 3국간 이해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향이 다자대화론로 나아가면서 일본 및 중국의 협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동북아 지역 정세의 불안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한·중·일 3국간 FTA가 논의되는 상황이 가지는 정치적, 안보적 의미가 적다고 할 수 없다.

한·중·일 3국간 FTA는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제고하고 협력의 심화를 통해 3국간에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일반적 안보 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도 일본과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인 바, FTA를 통한 협력 틀의 구축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경제협력을 통한 안보환경의 개선을 다시 경제협력 영역으로 확대하고 협력의 심도를 제고함으로써 상호 협력의 선순환구조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나.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중·일 FTA 의미

1) 동북아 경제중심 과제와 한·중·일 FTA

일본경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축은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경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는 거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과 한국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가 여전히 건실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북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성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를 갖추는 한편 이를 토대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경제의 단기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며 부품, 소재산업의 높은 의존도 등 산업구조 측면에서 한국경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향후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그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역차원의 금융협력, 투자 등의 분야에서 일본을 대신하여 지역무역협정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당분간은 없기 때문에 지역내 국가들이 원하는 원하지 않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은 불가피하다.

한편, 한국의 참여정부는 국정목표의 하나로 동북아 경제중심 과제를 설정하였다. 신 행정부는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와 대내외적 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경제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지역무역협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선진경제와 급부상하는 중국경제 사이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적극적인 지역무역협정에서 모색하겠다는 장기비전으로 볼 수 있다. 즉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 및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점진적 확대, 금융 및 외환제도의 선진화, 동북아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남북한 및 유라시아 연계 교통망의 교두보 확보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동북아 첨단산업기지로서의 역량 강화 및 동북아 IT 협력체제 구축 등과 함께 다각적 FTA 체결을 통한 역내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의 강화가 포함된다.

실제로 이 과제가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동북아 금융중심, 물류중심, IT 중심 구축을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과의 효과적인 협력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역 및 투자협력은 물론 금융협력과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는 산업구조의 조정 그리고 북한의 지역경제 편입을 유도하기 위한 한·중 협력에 이르기까지 대중국 협력분야는 매우 포괄적이다. 이러한 포괄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참여하는 협력체의 창설, 그 중에서도 FTA 체결이 긴요하다.

그러나 동북아의 경제적 환경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한국이 미래의 동북아시아대를 대비하는 데는 동북아 3국을 구성하는 일본과 중국 중 어느 한 국가에 치중하는 전략은 부적절할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투자 등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한·중 경제관계 및 협력은 심화될 것이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양국간 경제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가 약화될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하다. 양국간 경제발전 모델과 산업구조의 유사성 등으로 지난 40여 년 간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면서 상호 협력 파트너로서 일본의 중요성은 한국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일 FTA 추진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다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경제중심이라는 과제는 일본 및 중국과의 쌍무적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들을 하나로 묶는 동북아 협력체의 출범을 위해 한국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향후 한국은 한·일 FTA 및 동북아 FTA를 향한 계획을 동북아 중심과제 추진과 적절

히 연계시키는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지역무역협정의 기반

지역무역협정의 범세계적 확산 추세에 대해 한국은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 전까지는 WTO 중심의 다자체제에 참여하는 이외에 다른 적절한 대응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현재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체로는 APEC과 ASEM 정도를 들 수 있으나 이는 경제협력을 위한 협의체에 불과한 수준이며 제도화된 협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ASEAN+3 협력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6년 ASEM의 출범이 계기가 되었고 금융위기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 세계적 지역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의 공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한국도 여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역무역협정 기반으로서의 FTA는 다자적 자유무역체제인 WTO 체제와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특히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개방적 무역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안보 측면에서 대미관계의 중요성이 절대적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일본, 중국 등 동북아국가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동아시아국가는 이러한 입장을 한국과 공유하고 있다. 한국이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을 통해 2002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FTA를 제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국가 중 ASEAN과 동북아 3국은 경제규모나 발전수준의 차이가 현격하고 따라서 경제적, 비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한국과의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의 보완성과 긴밀성에 있어서도 동북아국가와 ASEAN 국가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ASEM의 틀 안에서 동아시아 협력이 활성화되었듯이 이로 인해 ASEAN+3의 동아시아 협력과정

에서는 자연스럽게 한·중·일 동북아 3국간 협력의 심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한·일 FTA는 이러한 점에서 궁극적 목표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일 FTA는 한·중·일 FTA로 가는 과정이며 한·중·일 FTA 또한 동아시아 FTA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특히 한·중·일 FTA는 역내 경제대국인 일본과 중국이 ASEAN과의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의 관계를 경쟁이 아닌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협력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일 FTA를 출발점으로 하는 동북아 3국간 FTA, 이를 토대로 하는 동아시아 협력, 동아시아 협력에 기초한 ASEM 차원의 협력 추진, 그리고 ASEM과 APEC을 매개로 하는 다자체제의 강화라는 연계시스템이 한국 지역무역협정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일 FTA는 이러한 정책의 출발점이 된다.

3) 산업구조의 고도화

동북아 경제교류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3국의 경제간에는 자연발생적인 산업간 혹은 산업내 분업구조가 정착되어 왔으며 이에 상응하는 무역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 및 무역구조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경제의 급속한 양적 성장과 질적 구조의 변화과정에서 끊임없는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동북아 3국은 이러한 변화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산업구조 조정을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 3국간의 산업 및 무역의 상호의존도는 중국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IT 산업 및 자동차, 조선, 기계류 등 중화학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어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¹⁴⁾ 더욱이 수출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정체 상태인 반면 한·일 양국의 대중 의존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받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다. 한국은 첨단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에서 단기간에 일본의 경쟁력을 따라잡지 못하면 수출과 성장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확산 추세와 함께 수출시장에 있어서 3국간 상호 의존성 증가는 동북아 지역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3국간의 경쟁관계가 심화될수록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전략적 제휴와 협력 그리고 직접투자나 기술이전을 통한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4) 역내 통상분쟁의 예방 및 효과적 대처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한·중 양국간 통상마찰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중국과의 통상마찰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국경제의 성장이 진행될수록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에 있어 한국과의 경쟁적 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T, 철강,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빠른 성장으로 말미암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쟁의 심화는 곧 통상분쟁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중국과의 통상분쟁 가능성은 이밖에도 또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무역불균형 때문이다. 대만을 제외할 경우 한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이다. 중국은 대한 무역역조 문제를 양국간 최대 통상 현안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고 이것이 각 분야에서 통상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까지 중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해 미국 혹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였던 만큼의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이지는 않았던 것이 사

14) 산업구조 재편에 대해서는 신현수·이원복(2003) 참고

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르는 대중 수입증가와 수출시장으로서의 중국의 비중 증대가 예상되면서 원만한 한·중 통상관계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한·중 통상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중 양국간 통상관계 및 분쟁해결을 위한 양측의 접근방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중국과의 분쟁해결을 WTO 다자통상규범의 틀 안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값싼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 등 한국의 대응조치를 제약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서 지적했듯이 증가하는 산업구조의 경합도, 산업내무역의 증대 등 무역구조의 변화와 3국간 상호 맞물려 있는 무역수지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한·중 양국간 통상문제는 양국간 접근을 통한 해결보다는 3국간 협력을 통한 해결 모색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홍콩을 포함할 경우 이미 2002년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면서 동시에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직접투자대상국으로 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역과 투자를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분쟁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통한 통상관계의 정립을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일 FTA는 동북아경제가 가지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유력한 수단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3. 한·중·일 FTA의 무역자유화 예상효과

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동북아에서는 냉전체제의 장기간 존속, 경제발전상의 격차 등 정치경제적인 장애요인으로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금융위기 이후 역내 FTA 추진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특정 지역경제간 협력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대표적인 협력 논의로는 두만강유역 공동개발 프로젝트, 환발해만(한국, 중국, 러시아)지역의 개발을 의미하는 성장삼각지대 협력, 환황해권 협력, 일본 규슈와 한국의 동남부지방간 환동해 협력, 주요 거점 도시간 협력을 의미하는 선형자유무역지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GATT 제24조 등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기 이후 동북아 경제협력의 논의는 다자규범과 부합될 수 있는 FTA의 체결로 발전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학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3국간 FTA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 중의 하나는 중국이 시장경제지향적인 경제정책을 꾸준히 실시하는 가운데,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 및 통상제도 선진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1998년 이후 한국과 일본이 양자간 FTA 추진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ASEAN+3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FTA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중국으로서도 동아시아 내에서 일고 있는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한·중·일 3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을 미루어 볼 때 동북아 3국은 경제협력 강화로 높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동북아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고, 전세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 경제

적인 측면에서 보면, 3국간 FTA 추진시 한국과 일본의 중국산 농산물 문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 중국의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예상할 수 있으나 한·중·일 3국 경제의 긴밀도, 지리적 인접성, 상호보완적인 부존자원 등으로 3국간 FTA 체결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국간 FTA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심각한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가능하면 동시 추진 쪽으로 여론 수렴이 쉬울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는 3국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3국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 제조업에서 세계 10위권내 생산국으로 이들 3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3국 업계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갈 때 이 산업들은 세계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산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공동의 연구 및 개발, 공용 부품조달 확대, 마케팅망 공유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국간 경제발전 단계 및 인적·물적자원의 차이에 따른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상호간의 무역장벽 철폐는 역내국간 무역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다. 또한 동북아를 세계경제 3대 축의 하나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치적 안정 및 외교적 유대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국간 FTA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국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될 수 있다. 금융부문의 부실, 국영기업의 개혁 지연, 지역간 경제격차 등 불안 요인도 있으나, 중국경제는 베이징올림픽 및 세계박람회 개최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최근 본격화된 서부대개발 사업 추진, WTO 가입으로 인한 최혜국대우(MFN) 확보, 통상제도의 개선 및 무역자유화 추진, 소득증가로 인한 내수의 성장 지속,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확대 등 성장요인을 두루 갖추고 있다. 향후 20년 동안 중국경제는 세계경제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 3.9%의 거의 두 배가 되는 7%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고, 구매력평가(PPP)를 기준으로 할 때 2020년 중국의 GDP

규모는 19조 6,000만 달러로 일본(6조 달러), 미국(17조 달러)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증가 추세를 유지했지만, 중국내 시장점유율은 1998년 10.7%에서 2002년에는 9%대로 오히려 하락했다.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

급변하는 세계경제 질서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무역협정이 확산 및 심화되는 추세에서 제외됨으로써 초래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WTO 등 다자체제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통합의 이익은 매우 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3국의 관세율이 아직도 높은 편이어서 무역자유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클 전망이다. WTO 가입 조건에 따라 중국은 관세를 인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2~3%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도 품목에 따라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전반적인 관세율에 있어서는 일본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는 한국, 중국의 순이다. 또한 비관세장벽에 있어서도 한·중·일 3국이 모두 무역제한적인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와 낙후된 경제체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아직도 비관세장벽이 높다.

지금까지 한·중·일 FTA 가능성에 대한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다. 정인교 외(1999), Sohn and Yoon(2001), Japan's Cabinet Office(2001), Scollay and Gilbert(2001), Cheong(2002), 박인원(2003) 등 여러 논문에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논문 모두 한·중·일 FTA는 3국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표 3-9> 한·중·일의 관세구조

산업/국가	한 국	중 국	일 본
농산물	49.18	27.72	37.16
임산물	2.01	2.51	0.24
수산물	13.64	12.46	4.66
에너지	3.8	0.22	0
가공식품	29.21	28.28	31.74
섬유	7.6	20.06	7.83
의류	6.65	16.91	11.79
화공	6.53	11.21	2.26
금속, 철강	4.70	8.82	0.99
자동차 및 부품	7.59	25.61	0
기타 수송장비	6.21	0	6.21
전기·전자제품	10.65	0	10.65
기계류	11.90	0.27	11.90
기타 제조업	12.86	1.90	12.86

자료: GTAP(2001)를 사용하여 계산

흔히 경제통합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만을 달성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경제통합의 형태는 협정마다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경제통합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다만 대부분의 경제통합체에서 무역자유화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역내 3국간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경우 예상되는 무역 확대의 규모를 사전적으로 추정해 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동북아 3국의 시장접근확대가 역내 수출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교 외(1999)에 의하면, 한·중·일 3국이 관세를 철폐할 경우 한국, 일본 및 중국은 역내 국가에 대해 각각 227억 달러, 606억 달러, 240억

달러의 신규 수출을 발생시켜 총 1,073억 달러의 무역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후 경제통합이 달성되면 역내국간 수출액이 현재 수준의 2배 정도로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Sohn and Yoon(2001)은 동북아의 미실현된 무역(missing trade)을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통해 예측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무역은 추측량의 86%, 대일 무역은 67%밖에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3국간 FTA가 체결되면, 무역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내각부(Japan's Cabinet Office 2001)는 3국간 FTA가 체결되면 3국의 실질 GDP가 증가할 것이며, 그 증가율은 한국 3.2%, 중국 1.3%, 그리고 일본 0.2%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heong(2002)의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북아 3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이 가장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최고 2.45%의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collay and Gilbert(2001)는 중국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며, 한국과 일본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인원(2003)은 동북아의 3국 모두 3국간 FTA 체결로 이익을 보겠지만, 역내 무역비중이 높으면서 역내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한국이 더 높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동북아내 양자간 FTA보다는 3국간 FTA가 파레토 체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임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Hu(2001)는 중국의 WTO 가입 후 중국, 홍콩, 일본과 한국을 포함하는 FTA가 중국경제의 세계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역경제협력과 중국의 시장개방에서 FTA의 순기능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 2003년 한·중·일 FTA 공동연구 결과

중국의 공식제안으로 시작된 한·중·일 FTA 공동연구는 향후 3국간 FTA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이후 한·중

· 일 3국의 연구기관들은 3국간 FTA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2002년 11월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3국간 FTA 검토를 제안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국이 선정한 공동 연구기관은 2003년 2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공동연구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3년 8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2003년도 연구결과를 검토하였으며,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 일부는 중국, 일본 등의 연구진과 함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였다. 발리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가장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의 GDP는 1.29~4.73% 성장 가능하며, 이 경우 한국의 농업분야는 8~10% 축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박인원(2003)의 연구도 한·중·일 중 2국간 양자간 FTA보다는 한·중·일 3국간 FTA가 경제적으로 더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10> 한·중·일 FTA의 GDP에 대한 영향

	GDP에 대한 영향(%)
중 국	0.03 ~ 1.05
일 본	0.03 ~ 0.16
한 국	1.29 ~ 4.73

무역자유화보다는 자본축적(FDI 포함)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DI 유입 및 내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통상제도의 개선

15) 자세한 내용은 한·중·일 FTA 공동연구 한국측 발표자료인 Cheong(2003) 참고

및 투명성 강화 등 투자환경의 개선이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영향을 고찰하여 보면, 중국의 경우 자동차, 섬유 등에 대한 생산이 축소되는 대신 의류, 농업, 전기전자 등의 산업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본과 한국의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이나 다수 제조업의 생산은 확대될 전망이다.

<표 3-11> 한·중·일 FTA의 산업별 영향

	중 국	일 본	한 국
생산확대	의류, 농산물, 전기전자, 가공식품	기계류, 섬유,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가공식품, 섬유
생산축소	자동차, 섬유, 금속	농산물, 의류, 수산물	기타 수송장비, 자동차, 전기전자

한·중·일 FTA로 역내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의 경우 대일 수출은 2002년보다 50% 내외 증가할 수 있고, 대한 수출규모도 거의 2배로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대중 및 대한 수출을 각각 188~316억 달러, 90~194억 달러 증가시켜 2002년 기준 55~75%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의 대중 및 대일 수출은 각각 85~121억 달러, 83~10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3국간 FTA로 중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품목은 주로 의류, 농산물, 가공식품, 전기전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본은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 등에 대한 수출증가가 두드러질 전망이며, 한국의 주요 수출증가품목은 섬유, 석유화학, 전기전자, 가공식품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12〉 한·중·일 FTA의 3국간 무역에 대한 영향

(단위: 백만 달러)

수출국/수입국	중 국	일 본	한 국
중 국	-	20,473~25,386	12,511~15,118
일 본	18,787~31,644	-	9,040~19,445
한 국	8,479~12,139	8,305~10,271	-

〈표 3-13〉 한·중·일 FTA하에서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

수출국/수입국	중 국	일 본	한 국
중 국	-	의류, 농산물, 가공식품, 섬유, 기계류	농산물, 가공식품, 섬유, 의류, 전기전자
일 본	자동차, 기계류, 전기전자, 섬유, 철강	-	기계류,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한 국	섬유, 석유화학, 의류, 기계류, 전기전자	가공식품, 농산물, 섬유, 의류, 석유화학	-

한·중·일 FTA로 3국은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역내 무역 자유화가 투자환경 개선과 연계될 때 그 이익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는 투자와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comprehensive) 협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FTA는 국내 이익집단간 이해 상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FTA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이념문제와 경제적 격차가 큰 한·중·일 3국이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3국간 정치적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한·중·일 FTA의 선결과제 중 회원국간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정치외교적인 분야에 대한 3국간 공동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

앞서 제2절과 제3절에서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FTA가 추진되지 않는 것은 이에 대한 장애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한·중·일 3국의 일괄생산체제,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관계, 경제규모와 정치·경제체제의 차이, 중국과 일본간의 뿌리 깊은 경쟁구도, 남북한 분단상황의 지속, 상호 교류와 국민적 이해부족 등의 장애요인들을 차례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한국과 일본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체생산·공급하는 소위 일관생산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시폐쇄경제가 아니고서는 완전자급자족의 일관생산체제가 존재할 수 없지만 국내수요의 국내생산 충당 비율을 나타낸 자급률을 계산한 <표 3-14>를 보면 양국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은 1993년에 이미 100% 이상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도 1998년에는 자급률이 100%를 상회하게 되었다.¹⁶⁾ 한국, 일본과 달리 중국은 아직까지 여러 분야에 있어 생산설비가 미비한 상태이며 따라서 필요한 물자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산업의 자급률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 일본과 유사한

16) 산업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한국과 일본의 자급률은 산업별로 보아도 여전히 높은 것은 확인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 1998년 4월호 참고

생산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표 3-14> 한국과 일본의 자급률 추이

(단위: 10억 원, 10억 엔, %)

국가	한 국				일 본	
	1985	1990	1995	1998	1993	1995
국내산출	190,664.2	416,965.1	841,518.6	1,062,958.1	907,405.6	956,520.0
국내수요	192,034.2	421,739.7	855,409.8	1,019,402.6	898,728.3	953,434.6
자급률 ¹⁾	99.3	98.9	98.4	104.3	101.0	100.3

주: 1) 자급률=(국내산출÷국내수요)×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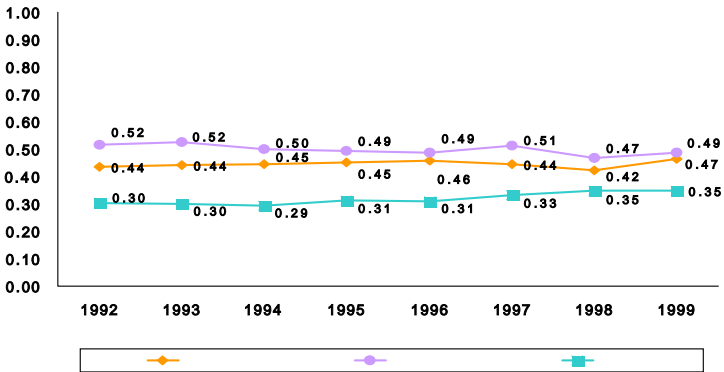
자료: 한국과 일본의 산업연관표에서 계산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국가가 자국 내에 필요한 모든 생산설비를 갖춘다면 그만큼 국가간의 무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국내에서 생산하여 소화하지 못한 생산물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과정을 통해 제3국 시장에서의 상호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측은 세계수출시장에서 한국, 일본, 중국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6>은 세계 30개국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수출유사성지수(ESI)¹⁷⁾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ESI는 0.5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ESI가 0.5 이상이면 수출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한국과 일본의 수출시장 경쟁은 여전히 치열함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ESI가 점차 높아져 0.5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도 양국의 경쟁이 점차 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의 ESI는 아직 0.3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직까지는 양국간 경쟁이 크게 심하지는 않지만 ESI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만

17) 수출유사성지수(ESI)가 1에 가까우면 수출구조가 유사하여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한 상태를 나타내며, 0에 가까우면 그 반대임.

간 중·일간의 수출시장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¹⁸⁾

<그림 3-6> 한·중·일의 수출유사성지수(ESI)의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유사한 발전전략에 의한 성장경로를 거치면서 자급자족형 일괄생산체제를 갖추고 세계 시장에서도 유사한 수출상품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유사한 생산체제와 유사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은 한국, 중국, 일본이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경제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데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즉 한·중·일 3국의 경제구조가 상호협력보다는 경쟁을 통해 상대방 국가에 대한 우위를 지켜 나가야만 자국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1957년 출범한 EC의 초기 회원국인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의 경제수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1989년 미국·캐나

18) 산업별로 보면 3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권영민(1999) 참고

다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한 당시에도 양국은 동일한 경제수준에 있었다. 1950년대나 1980년대의 경제개방 정도는 현재와 비교하여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상에서 언급한 국가들간의 개방정도가 크게 차이가 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EU나 NAFTA의 출발은 경제규모나 수준 그리고 개방의 정도에 있어서 서로 비슷한 위치의 국가들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3-15> 한·중·일의 경제규모 비교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1990	2000	1990	2000	1990	2000
GDP(억 달러)	2,525	4,617	3,877	10,800	30,521	47,636
1인당GDP(달러)	5,883	9,822	370	852	25,430	37,578
수출액(억 달러)	678.12	1,722	627.60	2,494	2,876.78	4,781.56
수입액(억 달러)	744.05	1,605	538.09	2,251	2,353.07	3,795.30
FDI유치액(억 달러)	7,885	92,834		420.90	27.943	289.97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중·일 FTA를 비롯한 3국의 경제통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GDP 규모 면에서 보더라도 일본과 중국의 GDP 규모를 2000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4조 7천억 달러와 1조 8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GDP 4,600억 달러의 각각 10배와 2배를 상회하는 규모이다. 즉 전체 경제규모 면에서 볼 때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인당 GDP 측면에서 볼 때는 일본이 3만 7천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이 9,800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은 852달러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즉 인구 12억 명의 중국은 전체 경제규모는 클지언정 개개인의 생활수준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하게 떨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경제의 발전단계가 아직 한국이나 일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경제수준의 차이는 한·중·일 경제통합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무역규모 측면에서 한국을 넘어서 무서운 속도로 일본을 추격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최대의 외국인투자유치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중국이지만 중국의 경제체제는 아직까지 완벽한 의미의 시장경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중국이 WTO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개혁과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시장개방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¹⁹⁾ 따라서 중국은 시장을 개방하여도 한국이나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까지는 한국, 일본과의 지역경제통합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중국의 전체 경제규모나 무역규모는 이미 한국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큰 경제규모로 발전될 때 한국은 물론 일본도 중국과의 통합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와 수준 그리고 경제체제의 차이는 3국간 FTA 등 경제통합의 조기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국이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상황은 별로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다.

다. 중·일간 패권경쟁

앞에서 지적한 경제규모나 수준 그리고 개방정도의 차이는 상호 경제 교류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 물론 한국과 일본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시장구조를 가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중국에 비해서는 개방된 경제로 볼 수 있음.

한·중·일 경제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은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비경제적인 측면도 많이 있으며 어쩌면 이러한 비경제적인 요인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경제적인 측면의 요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도 중국과 일본간에 이어져 오는 뿌리 깊은 반목일 것이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중심을 자부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19세기 말 근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중국이 서구열강에 유린당하면서 동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지위도 잃게 되었다. 여기에는 중국보다 앞서 개방을 추구한 일본의 역할도 컸으며 결국 일본은 한반도를 거쳐 중국을 침범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동아시아를 무력으로 지배하는 불행한 역사를 남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에서 일본에 대한 경계의 태도와 좋지 않은 감정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중국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차대전 이후 공산체제를 거치면서 중국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기도 했지만 1970년대 이후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력을 회복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력 측면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중국으로서는 자존심을 회복하고 과거 동아시아 중심의 지위를 되찾고자 하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중국이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합의한 것도 중국의 이러한 의도가 담긴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에야 WTO에 가입한 중국은 사실 FTA 등 지역주의의 논의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지역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배경에는 WTO 가입을 위한 ASEAN으로부터의 지지 확보 외에 일본에 의한 동아시아지역의 통합 논의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은 일본이 싱가포르와의 FTA를 체결한 데 이어 한국과의 FTA 논의에 상당한 적극성을 띠고 있음을 주목하였을 것이다. 한국도 나름대로 지역주의의 수용의사를 밝히고 칠레와의 FTA를 체결한 데 이

어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는 현실도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즉 중국은 한국과 일본간 FTA가 조기에 체결될 경우, 예상되는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에 있어서의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ASEAN과의 FTA를 실제로 체결할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의사표명은 이미 동아시아의 지역 통합논의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전략은 이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FTA 체결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상호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불리 어느 일방에 치우친 결정을 내려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일본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한국과의 FTA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일정을 더 앞당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체 내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던 ASEAN도 중국의 의사표명에 고무되었는지 그 이후 한국과의 FTA를 제의하는 등 지역통합에 있어 어느 정도의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조용히 진행되던 동아시아의 지역통합 논의에 중국이 뛰어들면서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보이지 않는 경쟁은 향후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라. 남북한 대결구도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을 저해하는 비경제적인 요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남북한간의 대결구도이다. 이는 남북한 두 당사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둘러싼 주변 관련국 전체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며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직

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데 있어, 남북한의 대결상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안위와도 직결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대결구도를 종식하고 통일은 어려울지라도 상호평화를 보장하며 경제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한이 함께 발전해 나간다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훨씬 자유로운 위치에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을 보다 수월하게 이끌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와 같은 시나리오는 한국의 희망 섞인 바람일 뿐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선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질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체제가 붕괴되어 냉전체제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싸고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더욱 정당화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사실 미국의 동의 없이 동북아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문제는 미국이 동북아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연결고리이며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된다면 동북아 경제통합은 그만큼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순수한 의미의 경제적 측면만을 보더라도 북한의 존재는 이 지역의 경제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항공이나 해운 등의 운송수단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철도나 도로를 이용한 육상운송에

비해 경제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남한을 통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육상교통로를 차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물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차단된다는 의미를 넘어 에너지 개발 등 동북아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협력 가능성을 제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마.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한국, 일본, 중국을 가리켜 유교문화권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동양적 가치관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러한 유교적 전통에 대해 3국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한·중·일 3국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3국간에 공통된 문화적 유산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과거의 폐쇄적인 사회상을 감안할 때 당시의 사회적 교류는 오히려 일부 계층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일반계층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서구사회의 경우에도 일반계층의 교류가 오늘날과 같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적 국가체제가 확립되고 교통·통신수단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된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계층간의 상호교류가 증대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이 깊어지면서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기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국가들간의 사회·경제적 통합은 비교적 순조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EU가 경제적 통합을 넘어 정치와 행정 분야에까지 통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일반 계층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가진 유럽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우는 이러한 서구에 비해 출발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교류를 하기에 여러 가지로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선 동아시아 각국은 서로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여 상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서구의 국가들도 각기 자국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알파벳을 쓰는 라틴계통의 언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과 비교할 때 동아시아는 그만큼 어려움이 따른다.²⁰⁾ 언어문제 이외에 유럽 등 서구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한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열강 또는 일본에 의한 무력지배에서 새롭게 독립한 국가가 상당수인 동아시아에서 일반계층간의 해외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 가까이 지속된 냉전체제는 서로 다른 체제에 속한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간의 외교관계 수립도 상당기간 지연시켰으며 이 때문에 일반계층의 교류는 더욱욱 힘들었다. 특히 앞서서 언급한 북한의 존재를 생각할 때 한·중·일 일반계층의 교류가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10년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의 국가들 사이의 일반 교류의 역사는 극히 짧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한·중·일 3국의 일반 국민들은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상대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기회가 주어진 적이 별로 없다. 이와 같은 상호이해의 부족과 의사소통수단의 부재는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20) 물론 한국, 중국, 일본은 한자문화권으로 동일문자를 쓰기는 하지만 발음이 전혀 다르며, 특히 중국에서 간자가 사용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문자를 중국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을 돕는 기능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

제4장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과 한·일 FTA와의 관계 설정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한·중·일 3국은 FTA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역주의의 확산을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WTO내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가 지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할 정도였다. 그 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국가들은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가져 올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지역주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도 적극적으로 FTA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초 싱가포르와의 첫 FTA를 발효시켰고, 지역주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도 2004년까지 ASEAN과의 FTA 협상을 타결한다는 입장이며, 한국도 2002년 10월 칠레와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표 4-1> 한·중·일의 FTA 추진 동향

협정 대상국	진행 상황
한국·칠레	2003년 11월 협정문 국회 상임위(통일외교통상위원회) 통과
한국·일본	2003년 말 공식협상 개시
한국·싱가포르	2004년 초 공식 협상 개시 합의
한국·뉴질랜드	양국간 FTA 효과 공동연구 완료
한국·태국	양국간 FTA 효과 공동연구 완료
한국·멕시코	멕시코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논의 진전 없음
일본·싱가포르	2002년 1월 FTA(EPA) 발효
일본·멕시코	정부간 공식적인 협상 진행중
일본·캐나다	양국간 FTA 효과 공동연구 논의중
일본·칠레	양국간 FTA 효과 공동연구 진행중
중국·ASEAN	정부간 공식 협상 진행중
한국·중국·일본	2003년도 한·중·일 FTA 공동연구결과 발표

주: 2003년 12월 현재 상황임.

한국, 중국 및 일본이 FTA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기극복과 또 다른 위기의 방지를 위해서 인근 국가간 경제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FTA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확보, 구조조정의 가속화, 새로운 동맹관계의 확보 등을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한·중·일 3국의 FTA 추진배경을 고찰하고, 향후 추진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한국, 중국 및 일본의 FTA 추진현황

가. 한국

1) 추진현황

한국 FTA 정책의 기본방향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2002년 10월 타결된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소형 거점국가와의 FTA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연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정밀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칠레는 1999년 12월부터 2000년 말까지 네 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농산물 부문에 대한 이견으로 2001년 한해 동안 협상이 중단되었다. 2002년 들어 농산물 개방에 대한 칠레의 입장 완화로 2002년 8월 5차 협상이 개최될 수 있었고, 농업개방안에 대한 양국의 합의로 3년간 지속되었던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3년 2월 칠레의 라고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동 협정은 공식 서명되었으며, 2003년 11월 1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동 협정을 심의 통과시켰고, 2003년 12월 현재 국회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칠레와의 FTA 논의가 개시되었던 1998년 말에 한국은 일본과의 FTA 논의를 시작하였다. 당초 한·일 FTA는 일본의 낮은 관세와 산업의 높은 국제경쟁력으로 한국이 불리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 대한 투자의 확대, 규모의 경제 실현 등 동태적 이익이 가시화될 경우, 한국도 일본과의 FTA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1999년과 2000년 한국과 일본의 민간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양국간 FTA 체결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였고, 2000년 9월 한·일 양국 업계가 중심이 된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이 결성되었고, 동 포럼은 2002년 1월 양국간 FTA를 지지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양국은 2002년 3월 정부가 참여하는 한·일 FTA 공동연구회를 발족시켰다. 6차까지 진행된 동 연구회는 2003년 7월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6차회의에서 한·일 FTA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양국간 FTA 논의는 2003년 10월 방콕 한·일 정상회의의 공식협상 개최 합의에 따라 정부간 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이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FTA 체결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80년대 시작되었으나,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은 이를 구체화시키지 못했다. 한국은 수출지향적인 성장정책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블록 확산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지역무역협정하의 국내시장 개방 반대에 부딪혀 미온적인 수준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정부는 특혜적인 무역자유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제도개선, 다양한 동태적 이익 등을 재평가하여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지속적인 개혁 및 자유화정책이 대외 국가신인도 향상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위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위기극복 이후에도 이런 정책을

지속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또한 한국은 자본수지 개선뿐 아니라 외국기업의 선진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FTA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는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국내시장의 규모와 투자규제 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에 대한 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의도였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특혜원산지규정을 만족시키는 경우 한국의 FTA 회원국으로의 수출에 대한 관세철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Booz, Allen & Hamilton(1997)은 한국이 중국의 저비용과 일본의 첨단 기술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 주요 산업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못할 것이므로, 경영과 기술 면에서 전세계적인 제휴를 확대해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다. FTA는 역내 시장 확대와 경쟁 심화를 의미하고, 이로 인해 역내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기술이전을 동반하게 된다. FTA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선진 기술을 도입을 가능하게 해 한국 기업들의 생산과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의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수출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의 FTA 정책은 안보와 군사적인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안보와 군사력과 더불어 경제적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통합으로 지역무역블록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통합은 다자간으로는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보다 쉽게 해결하는 열쇠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EC를 통해 유럽내 무역증가와 경제통합이 이루어졌고, 정치면에서 유럽 대륙 전쟁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남북대치 상태인 한국으로서는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우방국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의 FTA 정책에 대해 국내의 반발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 취약산업인 농업 관계자들은 칠레와의 FTA 비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농업계는 칠레가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고, 계절이 반대이더라도 과일에 대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비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농업에 대한 손실이 아주 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칠레와의 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농업계의 우려는 칠레와의 FTA가 타결되면, 향후 다른 지역과의 FTA가 연쇄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 경우 농업분야의 대폭적인 자유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과 연관되어 있다. 농업계는 현재 WTO하에서 DDA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DDA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라도 농업분야를 자유화 대상으로부터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03년 2월 출범한 한국의 신정부(참여정부)는 지난 정부인 국민의 정부에서 공식서명한 한·칠레 FTA를 발효시켜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정권인수팀은 한·칠레 FTA 협정문과 이행법에 대한 국회 비준을 조기에 처리하는 방침을 정했다. 참여정부도 FTA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국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도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지 않고 있다. 집권 초기 노무현 대통령도 FTA 등 개방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개방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배려도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참여정부가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한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물류, 금융, IT, 에너지, 환경 등에서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경제체도가 선진화되어야 하고, 대외개방이 필수적이다. 또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이 보장되어야만 외국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와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면, 개혁 및 개방과 정치적인 안정은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한·중·일간 경제협력을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도모하는 FTA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국간 FTA와 경제공동체 건설

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과제이지만 지금부터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한·일, 한·중·일, 한·중 FTA 체결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다.

참여정부의 FTA 추진 방향은 포괄적인 협정을 추구하되,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하며, 가급적 국민적 합의하에 FTA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칠레 FTA는 기존 FTA 포괄범위를 넘어 훨씬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다. 관세철폐 등 무역자유화 사항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무역규범, 정부조달, 경제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상반기에 피해 예상품목에 대한 생산자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FTA이행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였다.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 운영하되 재원은 정부재정, 기부금 등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2) 향후 전망

경제 및 무역규모가 작아 FTA 체결에 큰 애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칠레와의 FTA 협상 타결에 3년이 소요되었고, 국회비준 과정에서 적지 않은 파란이 제기됨에 따라 참여정부는 향후 추진하는 FTA에서는 가급적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협상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또한 다수국과의 FTA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FTA 추진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면서, 속도조절 등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의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2003년 말 현재 한국정부는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양자간 FTA 체결을

위해 정부간 협상을 진행·준비중에 있다. 2003년 10월 방콕에서 개최된 한·일 양국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에 대한 정부간 협상 조기 개시에 합의함에 따라 2003년 말부터 공식협상이 개최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2003년 3월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발족하고 6개월간 일정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2003년에 발생한 SARS의 영향으로 정부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양국간 FTA는 민감한 농업문제가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2004년초에 시작될 FTA 협상이 예상보다 빨리 타결될 수 있다.

현재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검토대상국으로는 멕시코, ASEAN, 태국 등을 들 수 있다. 멕시코는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수출시장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업계를 중심으로 FTA 추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는 세계 12위 경제규모(4,814억 달러)로 한국의 1.1배 수준이며, 멕시코는 현재 3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멕시코 내에서 한국기업의 불이익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FTA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멕시코는 한국과의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국은 ASEAN 전체와의 FTA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2001년 11월 및 2002년 11월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측이 한·ASEAN FTA 추진을 강하게 요청하였고, 한국으로서는 FTA 체결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한·ASEAN FTA 검토를 제안했다. ASEAN 회원국간 경제체도의 다양성 및 발전 격차로 인해 단기간내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의 일부 산업분야(1차 산업, 가공식품 등) 및 농업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SEAN과의 FTA 추진에 있어 한국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ASEAN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배제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ASEAN과의 FTA를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향후 한국정부는 ASEAN 전체와의 FTA 외에 태국, 필리핀 등 ASEAN

개별 회원국가와의 FTA도 추진할 수 있다. 태국과는 2000년 양국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두 차례 진행하고, 2001년 3월 동 연구결과를 교환하였으나, 한국측에서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로 더 이상의 진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측은 양국 산업이 보완적 구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FTA 체결이 바람직하며, 한국측의 민감품목에 대하여 신축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바 있다. 필리핀도 한국과의 FTA 체결을 제의해 온 바 있다.

참여정부는 한·일 FTA 외에 한·중·일 FTA도 비중 있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국의 경제연구기관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타당성과 추진전략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다. 한·중·일 3국은 세계 GDP의 20%, 무역의 13%를 차지함에 따라, 3국간 FTA는 높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북한개방 및 한반도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업계도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제적 실익 및 전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 관련국들의 추진의지가 확실하지 않고, 한국도 농업분야 등에 있어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간 FTA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으나 업계 및 학계 일부에서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는 경제적 실익 및 전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20배가 되는 경제규모(GDP 10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제1위 무역대상국(530억 달러)이다. 2001년 10월 발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한·미 FTA 타당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21%(100억 달러), 미국의 대한국 수출 54%(19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섬유, 의류, 화학, 전자제품에서, 미국은 쌀, 유가공품, 육류의 수출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소극적 입장 및 한국 농업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 추진은 곤란한 상황이다. 미국은 한·미 FTA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한·미 BIT 협상의 지체, 한국의 농업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의 FTA 추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정부는 타당성이 확인되었거나 업계의 지지 등으로 국내적인 협상 개시 여건이 성숙한 경우에는 협상단계로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즉 현재 정부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 싱가포르 외에, 한·ASEAN FTA, 한·중·일 FTA 등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나 국내적인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논의 진전에 대비하면서 국내적인 컨센서스 형성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인 FTA 대상국 모색 차원에서 미국, EU 등 유망한 추진대상국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중국

1) 추진현황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은 GATT/WTO 가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정부는 2000년 말 처음으로 FTA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1999년 한국과 일본이 FTA 공동연구회를 발족시키는 한편 칠레, 싱가포르, 멕시코 등과의 양자간 FTA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고,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이 동아시아 FTA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비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중국은 FTA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WTO 가입에 대한 통상외교 노력 집중의 필요성, 사회주의체제의 고수, 높은 대외무역장벽과 낙후된 경제시스템, 그리고 중국 서부 내륙 개발의 필요성 등으로 중국은 FTA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입장이 못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중국은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

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중국의 연구기관은 1999년에는 한·중·일 FTA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완료하는 등 FTA 정책을 검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중·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과의 FTA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FTA 창설 연구 제안은 중국정부 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고, 단지 중국의 WTO 가입을 우려하는 ASEAN으로부터 지지를 받아내기 위한 중국의 외교성 제안일 것이란 점을 들어 막상 중국이 WTO를 가입하게 되면, ASEAN과의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중국의 FTA 추진 정책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왜 ASEAN을 첫 FTA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ASEAN FTA 초기 논의에 참여했던 Zhang(2003)은 “중국학자로서의 나의 대답은 항상 간단하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과의 FTA보다) 더 쉽기 때문이다”고 답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간단한 답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현재의 여건 하에서 동아시아 협력을 전망할 때, 단기간내 동아시아 FTA를 실현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비록 동아시아 FTA가 중·ASEAN FTA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지라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단기간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중·ASEAN FTA가 중국에게는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ASEAN과의 FTA가 동아시아 FTA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중국과 ASEAN은 무역과 투자 등에서의 경제관계가 심화되어 있으며, 양 지역간 FTA는 이러한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고, 이로 인한 큰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중국과 ASEAN은 경제통합과 지역협력에 있어 유사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 양측간 협상 타결도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ASEAN FTA는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양측은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협력 강화를 리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Cao(2002)는 중국의 FTA 정책 목표를 잘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적인 경제블록화 확산에 대응해야 하고, 다자간 협력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FTA의 순기능, 즉 FTA 체결로 무역 및 투자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고, 경제위기시 회원국간 협력으로 조기 위기극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그는 중국의 FTA 정책이 일본을 견제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과 같은 개도국은 경제능력, 발전단계 및 정책목표 등을 기초로 무역과 투자 확대 및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FTA를 추구하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들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경제패권, 주도권을 획득하는 데 보다 큰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 10위 무역대국이면서 높은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20~30년 후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중국은 지역주의 확산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음으로 동북아에서 중국만 고립되는 상황을 통상정책 수립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경제적 동맹관계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WTO 가입 후 지역적 통합과 협력에 참여하는 실험이 필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ASEAN이 그 대상지역으로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또한 중국 지도부는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경제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경제개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FTA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중국은 세계 주요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02년 현재 세계 제5위이며, 총 대외무

21) WTO 가입은 중국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가입협상에서 중국은 시장 개방을 약속했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005년까지 관세인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음. 쿼터, 수입허가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2005년까지 철폐되며, 정보통신협정(ITA)에 따라 컴퓨터, 정보통신장비 등 IT 장비에 대한 관세가 2003년까지 철폐됨. 서비스부문에 대한 자유화도 실시되는데, 법률, 회계 등 전문적 서비스, 통신서비스, 시정각서비스, 유통서비스, 교육서비스, 건설서비스, 금융서비스(보험, 예금, 보안), 운송서비스도 일정 요건하에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됨.

역 규모는 1986~2002년 사이에 1,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무역의 성장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가능했다. 중국 지도부는 개방과 성장 사이에는 명백한 연계가 있다는 점과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이익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향후 전망

그러면 향후 중국은 어떤 방향으로 FTA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 중국이 한·중·일 FTA 검토를 제안한 배경의 분석을 통해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FTA 체결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한·중·일 FTA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내부의 문제로 인해 그 추진 시기를 향후 10년 정도 이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한·중·일 FTA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선 한·일 FTA 체결로 중국이 동북아 경제통합에서 소외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만 중국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중국은 점진적으로 FTA를 확대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SEAN과의 FTA 논의를 진행시키면서, 중국은 2001년 11월 말에 특별행정구인 홍콩 및 마카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계획을 밝혔다.²²⁾ 이어 중국과 홍콩은 2003년 6월 양 지역간 FTA인 『경제·무역 관계 긴밀화 협정(CEPA)』을 타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중국이 WTO 가입시 약속한 관세인하보다 진전된 자유화 조치를 홍콩측에 제공하고, 비관세 장벽 및 투자환경 개선으로 양 지역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며, 분쟁해결

22) 『人民日報』 2001년 11월 29일에 따르면, 2001년 11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10차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에 참석한 중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 부부장 룡융투(龍永圖)가 처음으로 공식언급함.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통관수속 간소화, 통상제도의 투명성 제고, 전자상거래 확대, 검사·검역과 품질인증 인정,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도 동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 CEPA 협정은 관세인하 등 현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규제조치 완화 등 다른 부문과 연계되어 있어 실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후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비록 2002년 11월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한·중·일 FTA 검토를 제안했지만, 3국간 FTA에 대해 중국정부가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 그러나 중국의 학자들은 2001년부터 한·중·일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Hu(2001)는 한·중·일 및 홍콩의 FTA를 주장하였고, Hai and Zhang(2001)도 장기적 관점에서 한·중·일 FTA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²³⁾ 서장문 외(2002)는 중국이 동아시아 내에서 조성되고 있는 지역주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는 중국경제의 국제화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중·일 FTA는 중국의 수입증가, 경제적 격차로 인한 문제, 협상비용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중국 산업구조 조정, 국제경쟁력 제고, 정치적 우호관계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3국간 FTA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과거 중국 통상관계자들의 입장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것이며, 주룽지 총리의 한·중·일 FTA 검토 제안도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FTA 추진에 장점과 취약점을 들 수 있다. 장점으로는 정부 지도자의 강한 리더십과 일사불란한 행정체계를 들 수 있으며, 농업을 비롯한 NGO 등의 반FTA 활동이 거의 없어, 정부(당) 차원의 방침만 결정되면,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취약점으로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WTO 가입 이후 개선되

23) 발전연구중심(2002)도 한·중·일 FTA에 대해 Hai and Zhang(2001)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함.

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 통상제도가 국제적 수준에 뒤져 있다는 점, 중국 내 지역간 발전격차가 심각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FTA에 대해 중국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 거의 대부분을 이행하게 되고, 대외통상정책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2004년 ASEAN과의 FTA 타결로 경제통합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어 FTA 추진에 보다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한·일 FTA 협상이 진행되고, 범미주지역 FTA인 FTAA가 출범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비 차원의 정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DDA 협상 부진에 따른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일본

1) 추진현황

동아시아의 NIEs와 더불어 일본은 전후에 형성된 다자체제의 최대 수혜국가 중의 하나이다. 수출증가와 높은 경제성장으로 일본은 지역주의에 참여할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으며, 1980년대 이후 확대되었던 배타적 지역주의를 비난하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동아시아에서의 최대 경제규모와 외국인직접투자규모를 가진 일본은 지역주의를 통한 형식적인 경제통합보다는 시장주도 경제통합을 지향해 왔다. 일본은 전후 동남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했다. 1960년대부터 투자를 통해 동남아를 생산기지로 삼았고 ASEAN과의 경제협력 논의를 양자대화에서부터 시작하였다.

GATT/WTO 다자체제의 지지를 강조하던 일본은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역주의에의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日本經濟新聞社(2002)는

일본의 FTA 정책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지역주의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국제적인 요인과 국내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국제적인 요인으로는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다자체제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의 지역주의 추구, WTO 체제의 한계 등을 들고 있으며,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무역자유화를 통한 소비자의 이익의 중시, 비통상부처의 FTA에 대한 관심, FTA를 통한 경제개혁 추진 등을 들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이 지역주의를 추구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역사적 과오를 들 수 있다. 특히 인근 국가에 대한 침략행위로 인해 FTA와 같은 협정을 통한 국가간 블록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일본은 전후 세계무역체제 형성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냉전시대 동안 일본은 미국의 보호 아래 경제 재건에 집중하며 국제체제에는 수동적으로 참여했을 뿐이었다. 1990년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EAEC를 제안했을 때 동아시아의 최대 경제국인 일본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에 대한 취약성으로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내의 저항이 적지 않았다. 2002년 초 발효된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도 이러한 국내 상황이 반영되어 농업분야가 실질적으로 제외되었다. 즉 현재 무관세품목인 농산물만이 자유화대상에 포함되었을 뿐 금붕어, 난초 등 현재 양국간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수산물은 제외되었다.

일본은 1999년 한국과의 FTA를 위한 민간연구그룹을, 2000년 싱가포르와의 FTA를 위한 관료, 학자, 기업인으로 구성된 정부주도 연구그룹을 구성했다. 이 즈음 일본 외무성이나 경제담당 부처들도 다자무역체제 발전에의 기여, 시장 확대로부터의 이익 등의 이유로 지역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일본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동

시에 지역주의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전후 형성된 다자무역체제의 안정된 환경을 활용해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즉 WTO만을 통한 무역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수 회원국과의 다양한 통상현안을 WTO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양자간 FTA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안이라는 인식을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특히 日本貿易振興會(JETRO, 2001)는 FTA가 다자체제를 방해한다는 기존의 견해로부터, FTA가 다자체제 원칙을 세우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일본기업의 무역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FTA가 국내 경제구조 개혁에 불을 당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FTA와 양자간 투자협정(BITs)을 통해 무역장벽이 철폐되어 외국의 모범적인 통상체도가 유입되어 국내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다른 국가의 개혁사례를 인지하게 됨에 따라 일본의 공기업 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JETRO는 일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웃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0년 이후 일본정부와 JETRO와 같은 경제단체들이 적극적인 FTA 체결을 검토하는 가운데, 일본과 싱가포르를 양국간 FTA에 대한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협상에 돌입했다. 2001년 네 차례의 공식협상을 통해 양측은 FTA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2002년 1월 고이즈미 총리의 동남아 순방시 일본은 첫 FTA인 싱가포르와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FTA를 계기로 동남아와의 경제협력 강화 입장을 밝히면서, ASEAN과의 FTA에 대한 공동연구그룹의 설치를 ASEAN에 제의하였다.

한편 일본은 2002년 3월 한국과의 FTA 논의를 한 단계 더 전진시키기 위한 한·일 FTA 산·관·학공동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한국과 합의하였다. 동 연구회는 양국의 정부관료, 학자와 업계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양국간 FTA 추진의 경제적 효과, 추진상의 애로사항, 협정문의 주요 내용

등을 연구하였다.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은 2003년 10월 FTA 공식 협상 개시를 결정했다.

2) 향후 전망

최근 일본의 적극적인 FTA 추진 이면은 중국의 부상과 관련이 있다.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하였고, 2008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그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2000년 11월 이후 중국이 ASEAN과의 FTA 논의를 가속화시켜 나가자 일본은 지금까지 누려 왔던 동아시아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손상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일본의 FTA 추진은 경제적 이익 외에도 중국과의 동아시아내 주도권 쟁탈에 대비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총리관저 발행 자료에 따르면,²⁴⁾ 일본은 경제적 기준, 지리적 기준, 정치외교적 기준, 현실적 가능성에 의한 기준, 시간적 기준 등을 토대로 FTA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총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동아시아, 북미, 유럽의 경제관계 강화가 필요하나, 대체로 관세율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현실적 가능성에 의한 기준과 정치외교적 기준에 근거하여,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 및 ASEAN을 우선 교섭 상대지역으로 보고 있다. 또한 NAFTA 및 EU와의 FTA 체결로 일본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여건에 놓인 멕시코와의 FTA 타결도 서두르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FTA는 정치적 중요성, 폭넓은 양국간 교류,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 등을 근거로, 2003년 2월 한국의 신정부 출범 후 가능한 한 조기 협상 개시를 목표로 설정했었다. ASEAN과는 궁극적으로 ASEAN 전체와 FTA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양자간 FTA에 적극적 관

24) 자세한 내용은 日本首相官邸(2003) 참고

심을 보이고 있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의 FTA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2003년 12월 11~12일 동경에서 개최된 일·ASEAN 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되었다. 일본은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EPA)를 근간으로 한 협정을 추진하고, 국가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양자간 FTA 협상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시점에 ASEAN 전체와의 FTA를 완결한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다. 당분간 WTO 협정 이행 상황, 중국 경제의 동향, 중·일 관계의 진척 상황, DDA 협상, 동아시아내 FTA 추진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과의 FTA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만과의 FTA도 검토할 수 있으나,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이미 실익이 없다는 평가이다. 경제적 이유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대만과의 FTA 추진을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는 농산물이 민감할 수 있으나, 지하자원 공급선의 안정적 확보, 양 지역간 관심분야에 대한 이익 확대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EU와의 FTA는 농업문제를 들어 단기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면서, 중남미의 MERCOSUR와의 FTA는 FTAA 체결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는 FTA보다 양국간 이해관계를 개선하는 조치가 선결되어야 하며, 인도 등 남아시아 지역도 중장기적인 FTA 추진대상 지역임을 밝히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 FTA를 중장기적 추진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한국 및 ASEAN과의 FTA를 추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 FTA를 창설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FTA는 동아시아 전체의 단일 시장이 아니고, 일본이 허브가 되는 복수의 양자간 FTA를 의미한다. 즉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거대 FTA보다는 일본 중심의 FTA 허브 구축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나타난 농업 제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당분간 이러한 입장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2003년중 타결하기로 했던 멕시코와의 FTA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한국, 태국 등과의 FTA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

가. 3국 정부의 입장

한·중·일 FTA에 대한 3국 정부의 입장은 ‘중국 적극적, 일본 소극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2002년 11월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나타났다. 1년 뒤인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유사한 입장이 재현되었는데, 중국은 한·중·일 FTA 논의를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중국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한국의 경우, 아직 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에는 중국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2004년 상반기에 한·중·일 FTA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와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일본과 리더십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한·일 FTA의 진전을 우려하여 한·중·일 FTA 검토를 제의하였고, WTO 가입 이후에도 ASEAN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제조업이 취약하고, 금융부문의 부실로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정치적인 요인을 중시하여 한·중·일 FTA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금 당장 3국간 FTA를 정부차원에서 검토하더라도 실제 협상은 3~5년 후 가능할 것이란 추정도 중국이 한·중·일 FTA 검토를 제안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FTA 정책을 연구하는 중국 학자들은²⁵⁾ 만약 한국과 일본이 예정대로 FTA 협상이 진행되고 한·중·일 FTA 논의가 부진할 경우, 중국은 인도, 중남미 등과의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중·ASEAN FTA의 조기 구축으로 한·일 FTA에 대응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의 FTA를 통해 일본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전략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 낙후된 통상제도, 높은 무역장벽, 낮은 협정 이행의지 등을 내세워 중국이 참여하는 FTA는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신과 경쟁의식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과의 FTA에서는 농업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고, 일본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다. 한편 이미 협상단계로 접어든 한국과의 FTA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다는 전략도 내비치고 있다. 그렇다고 한·중·일 FTA를 계속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FTA를 추진하더라도 일본이 FTA 허브가 되도록 한다는 구상을 보이고 있다. 즉 중국과의 양자간 FTA를 통해 동북아에서 한국과 중국을 FTA의 주변으로 남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 양자간 FTA를 추진할 경우, 일본이 한·중·일 FTA 추진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일본과의 양자간 FTA보다는 한·중·일 3자간 FTA가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동북아경제중심 구축을 국정운영지표의 하나로 설정한 참여정부는 한·중·일 FTA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3자간 FTA에 대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농업개방

25) FTA 정책에 대해 언급한 중국 학자들은 익명을 요청하므로 여기서는 실명을 밝히지 않음.

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중·일 FTA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3자간 FTA에서는 농업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비록 중국 농산물로 인해 한국의 농업이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일본에 대한 수출 증가로 피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FTA 협상을 먼저 타결하고, 한·중·일 FTA는 그 이후 추진할 과제로 보고 있다. 2003년 9월 확정된 한국의 중장기 FTA 추진 로드맵에도 이러한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한국은 일본에 대한 견제, 중국시장 접근성 제고로 인한 경제적 이익, 안보적 측면 등을 근거로 한·중 FTA 검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나. 3국 기업의 입장: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²⁶⁾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 총합연구기구(NIRA), 중국 발전연구중심(DRC)은 2003년 한·중·일 FTA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3국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한·중·일 FTA에 대한 공동설문조사를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동 조사는 한·중·일 FTA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 예상효과, 지역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²⁷⁾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85.3%로 한·중·일 3국간 FTA 체결에 가장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이 78.7%, 한국이 70.7%순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3국간 FTA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제6장에 제시된 설문조사는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른 국내 대책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임.

27) 설문조사는 현지 언어로 실시되었음. 동 조사의 주요 내용은 2003년 10월 발리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된 자료(Trilateral Joint Research, 2003)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표 4-2> 한·중·일 FTA에 대한 3국 기업의 입장

(단위: %)

	중 국	일 본	한 국
찬 성	85.3	78.7	70.7
반 대	1.5	5.9	13.3
조건부 찬성 또는 반대	13.2	14.2	15.8

자료: Trilateral Joint Research(2003)

또한 한·중·일 FTA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3년 이내 추진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3국 중 중국 기업들은 즉시 추진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일본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기업 응답자의 46.7%가 즉시 추진을 희망하였다. 한편 한국기업들은 즉시 추진보다는 단기(3년내) 추진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FTA 추진시기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은 3국 정부보다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4-3> 한·중·일 FTA 추진시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중 국	일 본	한 국
즉시 추진(가급적 조기)	47.4	46.7	23.7
단기(3년내)	35.9	32.5	45.8
중기(5년내)	14.6	18.0	25.7
장기(10년내)	2.1	2.0	4.9

자료: Trilateral Joint Research(2003)

기업의 한·중·일 FTA는 지지배경으로는 다른 체약국에 대한 수출증가와 통관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무역 관련 경비의 절감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한편 3국간 FTA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심화(중국, 한국), 산업공동화(일본)를 주요 반대이유로 들고 있다. 본 조사는 기업인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향후 보강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3. 한·일 FTA와의 관계 설정

본 장의 제2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은 한·중·일 FTA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중·일 FTA보다는 한·일 FTA를 먼저 체결하고, 중국이 포함된 FTA는 향후 검토할 과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한·일 FTA의 진전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면서, 현재 진행중인 한·중·일 FTA 공동연구에 정부관계자를 포함시켜 논의의 위상을 정부차원으로 격상시키자는 입장이다. 이는 중국과 일본간 리더십 경쟁과 관련이 있으며, 한·중·일 FTA의 판도는 중국과 일본의 입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중국 및 일본간 리더십 경쟁관계를 고찰하고, 한국과 일본간 FTA 논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한·일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한국과 중국간 FTA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한·일 FTA와 한·중·일 FTA간 관계설정(sequencing)에 대해 논의한다.

가. 일·중간 정치적 경쟁관계

오늘날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관점은 다양할 수 있으나, 국가간의 관계 내지 국제관계 측면에서 보면, 소위 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 현상이 병존하고 있다. 즉 정보화의 빠른 진전으로 촉진되는 범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으로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범세계사회(global society)’, ‘글로벌 가버넌스(global governance)’와 같은 개념이 자리잡는 동시에, 지역공동체나 FTA와 같이 서로 유리한 국가간

의 연합이나 통합으로 지역주의가 촉진되는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세계주의와 지역주의는 상이한 논리이지만, 범세계화의 시대적 흐름하에서 함께 병존하면서, 일종의 변증적인 결합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현상인 FTA는 세계주의의 대표적인 메커니즘인 WTO 규율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에 유리하다.

탈냉전시기에 동아시아에는 몇 개의 지역주의 세력이 서로 견제하며 발전하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태주의’, ASEAN 10국이 형성한 ‘ASEAN주의(Aseanism)’, 일본과 중국이 각기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동아주의’가 병존하고 있다.²⁸⁾

일본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정치·경제질서 재편과 관련된 역내 헤게모니 전략차원에서 역내 국가와의 경제통합을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자간의 경쟁은 특히 최근 중국 경제대국화의 빠른 진전으로 촉진되고 있다. 본래 중국경제의 양적 고도성장 지속 가능성이 큰데다가,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경제는 질적인 측면에서 개혁·구조조정의 심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성장방식의 전환²⁹⁾ 등을 촉진하는 데 탄력을 얻고 있다. 또한 수출증대와 해외진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세계적 흡입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일층 강화할 것이며, 높아진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역내 경제질서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ASEAN, 한·중·일, 인도 등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는 배경에는 장차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주의’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미국과 함께 ‘범세계화’를 주도하는 입지와 위상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장기적인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28) 자세한 사항은 이영명(2001) 참고

29) ‘투입확대’ 위주에서 ‘투입확대와 효율의 결합’으로 성장방식을 전환

데 반해 중국의 부상이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최근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위상이 중국에 비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002년 12월에 출간한 ‘아시아를 변화시키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일본의 생존전략’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부상은 동아시아의 산업지도를 바꿔가면서 역내 경제구조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고, 동아시아의 경제·무역 지위에서 일본은 저하되는 반면, 중국은 상승하고 있고, 급속히 확대·심화되는 한·중 경제관계와 중국·홍콩·대만의 경제통합 진전, ASEAN과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있어 역내에서 일본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ASEAN과의 FTA 구상은 동아시아에서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일본의 새로운 아시아전략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 전략의 핵심은 역내 FTA를 지렛대로 삼아 일본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과 중국은 역내 리더십을 둘러싸고 동아시아 제국과의 FTA 추진에 있어서 주도권 경쟁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 이미 중국은 ASEAN과 FTA 전 단계로 선자유화조치(Early Harvest Package)를 이행중에 있고 2004년까지 ASEAN과의 FTA 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예컨대 2003년 6월 18일 중국과 태국은 선자유화조치에 근거해 2003년 10월 1일부터 양국간 과일, 채소 상품무역에 무관세를 적용키로 하는 합의에 서명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2003년 6월 29일 홍콩과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은 시장개방 혜택³⁰⁾을 홍콩에게 제공키로 약속하였다.

30) 상품무역 측면에서는 2004년 1월 1일 이전에 홍콩 원산지 상품 27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홍콩 원산지의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늦어도 2006년 1월 1일 이전에 관세를 철폐하며 중국·홍콩 양자간에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약정함. 서비스무역 측면에서는 17개 서비스업종에서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홍콩기업에 시장개방, 즉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양허 시간표에 앞선 개방을 홍콩기업에 약속했음.

반면에, 일본은 2002년에 싱가포르와 FTA를 발효시켰고, 현재 한국, ASEAN, 태국, 필리핀 등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나. 한·일 FTA 추진 동향

한·일 FTA에 대한 논의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98년 9월 오구라(小倉) 주한국 일본대사가 한·일 FTA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1998년 10월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의에서 한국측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한·일 FTA 공동연구 추진을 제의하였다. 1998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IDE)가 공동연구를 시행하였고, 연구 결과는 2000년 5월과 9월 각각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되었다. 2000년 9월 23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양국 경제인들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한·일FTA비즈니스포럼’ 설치에 합의하고, 2002년 1월 25일 제2차 양국 비즈니스 포럼 합동회의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이후 양국의 경제인들은 양국간 FTA의 조기 실현 필요성을 천명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2002년 3월 22일 양국 정상회담시 경제계, 학계,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의 정부관계자, 업계 대표 및 전문가들이 2002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총 8차례의 공식회의를 갖고 최종보고서를 양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FTA 공식협상을 조기에 개시해야 함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양국의 정상은 2003년 10월 방콕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의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2003년 7월 23일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국 정부의 FTA 정책 추진 로드맵을 논의하였고, 이후 관련 정부부처, 학계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FTA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8

월 27일 회의를 갖고 FTA 추진 로드맵을 협의하였으며,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정부의 추진안으로 확정되었다. 동 로드맵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및 싱가포르를 단기적 FTA 추진 대상지역을 설정하였고, 정부는 해당 국가와의 정상회의를 통해 공식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4-4> 한·일 FTA의 추진경과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1998년 9월, 서울	오구라(小倉) 주한 일본대사 한·일 FTA 검토 필요성 제기
1998년 10월, 도쿄	김 대통령 방일시 한·일 FTA 공동연구 추진 제의
1999년 3월, 서울	Obuchi 총리 방한중 한·일 경제협력의제 21 제의
2000년 5월, 서울	KIEP와 IDE 한·일 FTA 공동연구결과 발표
2000년 9월, 도쿄	김 대통령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 개최 제안
2002년 1월, 도쿄	한·일FTA비즈니스포럼 양국간 FTA 추진 건의
2002년 3월, 서울	양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FTA산관학공동연구회 설치 합의
2002년 7월, 서울	한·일 FTA산관학공동연구회 1차회의 개최
2003년 6월, 서울	한·일 정상회의 FTA 협상 조기 개최 노력 합의
2003년 10월, 서울	한·일 FTA 산관학공동연구회 8차회의 최종보고서 채택
2003년 10월, 방콕	한·일 FTA 공식협상 개시 합의

자료: 정인교(2003)를 수정 보완함.

일본이 단기적인 FTA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그 동안 연구기관, 민간업계 협의기구, 산관학공동연구회 등을 통해 FTA 추진에 대한 양자간 협의가 상당 수준 진행되었고, 한국 업계가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농업에 대한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FTA는 유리한 점과 더불어 불리한 점도 있으나, 한국은 양국간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먼저 한국의 FTA 추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농업문제가 일본과의 FTA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농업계는 일본과의 FTA를 긍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일본과의 FTA 체결은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국간 관세구조 및 산업경쟁력 차이를 바탕으로 차별적인 무역자유화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양국 업계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고, 양국 통상제도의 선진화 및 조화를 통해 무역 관련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는 한국 기업의 대일본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일 FTA는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양국의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경쟁지향적인 비즈니스환경 조성으로 양국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선진국과의 FTA로 한국은 폭과 깊이 측면에서 수준 높은 FTA를 달성할 수 있으며,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주요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생산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FTA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산업구조 조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인건비, 지가 등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투자여건과 FTA하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확대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조업 생산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공동화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양국의 연구기관들이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분석한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뿐 아니라 대세계 무역수지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외국인투자 증가 등의 효과로 대세계 무역수지가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일본기업의 경쟁력 우위, 한국의 높은 관세 등으로 급격한 시장통합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 한국 산업에 대한 산업구조 조정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한국측 관심 사항 미충족시 한·일 FTA는 한국 산업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양국간에 거의 무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농업, 의류, 일부 석유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은 일본과의 FTA에 소극적이다.

양국간 FTA가 상호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대한 부품, 소재산업 투자 확대, 비관세장벽 완화, 대한 기술협력 강화 등을 통한 동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FTA로 확실히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구조조정 비용, 동태적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한·일 FTA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확신이 높지 않다는 점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FTA 체결로 무역수지 적자 확대라는 부담이 있으므로 한국 업계(특히 자동차, 기계, 전자분야의 부품·소재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 축소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민감 분야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일본과 지역적 리더십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홍콩 포함시)이면서 동시에 투자지역으로 부상한 중국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향후 한국 통상정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다. 한·일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일본이 동아시아에서의 FTA 추진에 있어서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역내 FTA 추진에서 일본에 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趙晉平(2003)에 따르면, 중국은 한·중·일 3국 중 일본의 FTA 행보가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2000년을 전후하여 일본정부가 대외경제정책을 전략적으로 전환하여 단순히 WTO의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던 데서 양자간의 FTA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일본이 불과 2~3년 사이에 싱가포르와의 FTA를 발효시켰을 뿐만 아니라 ASEAN, 멕시코, 칠레, 한국 등과의 FTA 연구 및 협상, 심지어 민간기구를 통해 대만과의 FTA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중국은 주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일본의 FTA 전략에서 볼 때 양자간 FTA의 우선적 고려대상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의 FTA 추진방향에 있어서 상당히 모순적인 접근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일본은 한·중·일 FTA 구상 자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한·일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일 FTA 추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趙晉平(2003)의 논문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 일본이 싱가포르와 멕시코에 이어 한국을 FTA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선택한 주된 이유는 무역·기술상의 비교우위를 발휘해 경제 이익을 획득하는 동시에 중국의 영향을 억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한·일 FTA 성립시, 중국경제가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劉昌黎(2001)는 한·일 FTA로 양국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일본의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대신에 중국의 대한 수출이 불리해지며, 한·일 양국 산업간·산업내 분업이 발전하고 일본의 자본·기술의 대한 이전이 촉진되어 중국의 일본 자본·기술 유치도 불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2002년 11월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FTA 검토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최근 빠르게 진전되는 한·일간의 FTA 논의를 견제하면서 동북아지역의 FTA 논의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02년 12월에도 외교부 왕이(王毅) 부부장이 주중 한국대사에게 2003년 10월 한·중·일 정상회의 시 ‘3국간 전면적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기본협정’ 서명을 제의했고, 이 제안에 대해서 2003년 4월 3국 고위급회담에서는 2003년 10월에 3국간 협력에 관한 정상공동선언을 발표기로 합의했다. 2003년 7월 초 노무현 대통령 방중시 발표된 양국간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중·일간 협력 강화가 동아시아 협력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 3국의 경제연구기관간에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가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했

다”는 문구 역시 중국측의 한·일간 FTA에 대한 견제와 한·중·일 FTA 주도권 확보를 추구하는 중국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제후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武心波(2002)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부시 미 행정부가 ‘신아·태전략’ 아래 중국에 대한 방비와 억제를 전략적 목표의 하나로 삼고, 나아가 중국을 미래 가상의 적(敵)으로 간주하면서, ‘일본·한국·대만·필리핀·싱가포르’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대중국 포위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국은 한·일 FTA에 대해 견제할 필요성을 안고 있다.

향후 중국은 한·중·일 FTA를 회피하려는 일본에 대해 3국간 FTA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에 대한 외교적인 명분상의 공세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중국은 CGE 모델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해 역내에서 가능한 다양한 FTA 조합 중 경제성장을 증진 효과가 최대인 조합은 한·중·일 FTA가 성사되는 경우임을 강조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최근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한·일 FTA를 견제하기 위해, 한·중간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은 한·중·일 3국간 FTA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그 추진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3국간의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제도발전 격차가 작지 않은데다가 역사적 갈등요인도 남아 있으므로, 3국 모두를 만족하는 FTA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일 3국간 FTA를 장기적으로 추구하되, 우선 2국간의 FTA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¹⁾ 중국이 동북아에서 2국간 FTA 추진할 때 그 우선적 대상은

31) 이 같은 판단은 최근 ASEAN과의 FTA 추진에서도 적용되고 있음. 즉 중국은 ASEAN 10국은 각 국가간의 발전격차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단기간에 개별국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10개국 모두를 포괄하는 FTA를 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ASEAN 전체와의 FTA는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되, 우선 ASEAN 10국 중 개별 국가와의 FTA 추진을 진전시켜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본이 아닌 한국이 될 것이다. 특히 Xie(2003)는 동북아에서 2국간 FTA 중 가장 추진이 용이한 것이 한·중 FTA이고, 동 FTA가 한·중·일 3국간 FTA의 핵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중·일 FTA는 양국간의 경제·제도 발전 격차가 큰데다가 양국간의 정치적 경쟁의식도 결핍들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술했듯이 중국은 일본측의 쌍무적 FTA 우선추진 대상국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과의 양자간 FTA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중국이 동북아 3국의 FTA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이상, 중·일 FTA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학자 일부는 일본과의 FTA 추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으며, 2003년 11월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 참가한 중국측 학자들도 중·일 FTA 추진 필요성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다.³²⁾

상술한 바를 종합할 때, 즉 일본이 한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 현재 일본이 한·중·일 FTA나 일·중 FTA를 회피하는 점, 한·중·일 FTA는 3국간의 경제발전 격차나 역사적 갈등요인 등으로 단기간에 성사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중국이 한국, 일본과 FTA 추진시 그 우선순위 내지 관계설정(sequencing)에 있어서 중·한 FTA→ 중·일 FTA→ 한·중·일 FTA 순서를 상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 한·일 FTA가 먼저 성사됨으로써 자국이 역내 FTA 추진과정에서 피동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한 FTA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趙晉平(2003)은 2020년까지 중국이 취해야 할 FTA 전략의 단계적 목표를 대ASEAN FTA 및 대홍콩 CEPA의 조속한 발효→ ASEAN 주요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협상 추진→ 중·일·

32) 일본 와세다대학 현대중국종합연구소 주최 'East Asian Economic Zone' 국제세미나

한 FTA 혹은 중·일, 중·한 양자간 FTA 공식협상의 조속한 추진→ 기타 지역과의 양자간 FTA 및 ASEAN+3 FTA 추진→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FTA 추진 등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이것을 중국정부의 FTA 로드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국정부가 동북아 FTA보다는 ASEAN과의 FTA를, 다자간 FTA보다는 양자간 FTA를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劉昌黎(2001)는 ASEAN 주요국과의 쌍무적 FTA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중국에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며, 2국간의 FTA에서 일정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한 후에야 점차 한국, 일본 및 기타 선진국과의 양국간 또는 다국간 FTA를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중국에 있어서 한·중·일 FTA는 우선적인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은 한·중·일 3국간 FTA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모순적 접근에의 이면에는 아마도 한·일 FTA의 타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 한·일 FTA와 한·중·일 FTA 관계 설정

한·중·일 3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북아에서 양자간 FTA보다는 3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한·중·일 FTA가 3국 모두에 유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³³⁾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간 대립관계로 인해 단기적으로 이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한 장애요인은 중국의 정치체제와 낙후된 경제시스템이다. 여기서는 중국의 이러한 장애요인을 먼저 검토하고 한·중·일 FTA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세계주의와 지역주의가 변증법적인 결합을 통해

33) 이에 대해서는 박인원(2003), Cheong(2002), 오웅탁·정인교(1998) 참고

발전하는 세계경제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국은 비단 다자간 무역자유화 등 세계경제체계에 적극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역경제 통합 추세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동아시아 역내 국가와의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이 최근 비록 ASEAN 등과의 FTA 추진에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지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술했듯이 중국은 역내 리더십을 놓고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비교할 때 자국의 FTA 행보가 일본에 뒤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FTA 정책에서 현재 개선 내지 해소해야 할 문제점으로서, 趙晉平(2003)은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현재 중국은 ASEAN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제외하면 아직 종합적이고 투명하며 장기적인 FTA 전략과 우선순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둘째, 국가 차원의 FTA 전략 실행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특히 FTA 추진에 관계하는 여러 국가부문, 즉 외교당국, 대외통상당국, 국내산업정책당국간의 공동참여와 통일협조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셋째, FTA 전략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미흡한데, 앞으로 관계·학계·업계 대표들이 공동참여하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국가의 총체적인 FTA 전략 구상과 단계적 실행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개별 FTA 협상 개시 전에 충분한 타당성 연구를 선행해야 한다. 넷째,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FTA 관련 지식의 선전과 보급, 교육이 크게 부족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FTA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향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FTA 추진체계, 정부 관련기관간 공조체제, 민간기구의 역할, 대국민 홍보 등은 단기간내 정비 및 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중국도 FTA 추진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WTO 가입에 따른 국내 통상제도 개선 및 관세인하를 2005년이면 거의 완료하게 되어 대외

통상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2004년 중반경 ASEAN과의 FTA를 타결하게 되면, 국내 제도를 동 FTA와 일치하게 개선해야 하므로 전반적으로 통상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ASEAN과의 FTA 타결로 FTA 추진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므로써 FTA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FTA에 대한 국내적 기반 조성이 강화되고,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대비하고 동아시아내 리더십 강화를 위해 인근 국가와의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정치체제가 FTA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³⁴⁾ FTA는 산업에 따라 비대칭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취약산업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추진하기 어렵다. 농업개방으로 FTA 추진이 부진한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중국의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방식은 FTA 추진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³⁵⁾ 따라서 동아시아 및 동북아 경제통합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기로 중앙정부가 결정하게 되면, 중국은 FTA 추진을 무리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역자유화로 농업과 일부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더라도 대내적인 정책수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외적으로는 FTA 협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34) 趙晉平은 중국에서 민감한 정치체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진정한 시장경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민주화도 필요할 것임. 그러나 중국 정치체제의 변화까지 논의하는 것은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함.

35) 중국의 정책이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로부터의 결정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중·ASEAN FTA는 내부의 충분한 공개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경제적 여건, 논의의 진행정도 등으로 볼 때 한·중·일보다는 한·일 FTA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이 이미 FTA 공식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이상 한·중·일 FTA보다는 한·일 FTA가 먼저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일 FTA를 추진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일 FTA와 한·중·일 FTA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 입장에서는 한·일 FTA에 향후 중국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협정의 기본정신을 규정함에 있어 한·일 FTA가 동아시아 및 동북아국가들이 향후 동 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수 있다. 또한 농업 분야 자유화를 협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중국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일 FTA 이후 FTA 추진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 한·일 FTA는 그 자체로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동아시아내 선진경제권간 협정이기 때문에 동아시아내 가장 모범적인 내용의 FTA를 규정할 수 있고, 경제규모 등으로 볼 때 향후 동북아 및 동아시아 FTA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추진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ASEAN+3 정상회의를 통해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활동을 주도하였고, 이 그룹들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FTA를 동아시아 중장기 협력과제로 설정하였다. Baldwin(2002)의 지적과 같이 동아시아의 선진경제권인 한·일간 FTA는 동아시아 FTA의 핵심(core part)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중·일 및 동아시아 FTA에 대한 기본입장과 추진전략을 가급적 빨리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일 FTA도 이러한 대형 FTA의 구축과 그 궤를 같이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중국이 제안한 한·중·일 FTA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중·일 FTA 추진 분위기를 개선시킬수록 일본은 한국과의 FTA 타결에 주력할 것이고,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한국이 수용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므로 한·중·일 FTA는 일본과의 FTA 협상 타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일본이 현재와 같이 한·중·일 FTA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면, 중국은 한·중 FTA 추진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제안의 수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FTA 추진시 한국의 취약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일본과의 경쟁의식이 강한 중국은 한국과의 FTA 조기 추진을 위해 농업자유화에 대한 신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FTA가 협상 중인 가운데 한·중 FTA가 추진되면, 일본은 한국 및 ASEAN과의 FTA 조기 타결로 중국에 대응하거나, 일·중 FTA를 검토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응은 최근 일본 와세다대학 주최 세미나에서 일본 정부 인사에 의해 제안된 바 있다.³⁶⁾ 동북아에서 3개의 양자간 FTA가 추진된다면, 한·중·일 FTA 논의는 자연스럽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한 시나리오를 요약해서 말하면, 중국과 일본간 대립 관계와 한·일 FTA의 협상 개시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일 FTA를 협상하더라도 중국이 제안한 한·중·일 FTA 검토와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중국이 한국과의 FTA 검토를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 FTA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일 FTA와 한·중·일 FTA가 ASEAN+3(동아시아) 경제통합과도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일 FTA를 양자간 관계로만 파악하기보다는 한·중·일 3각관계와 ASEAN+3 구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36) 이에 대해서는 관지웅(2003) 참고

제5장 한·중·일 FTA 선행과제 및 주요 쟁점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중·일 FTA는 필요하나, 아직 이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중·일 FTA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선행과제를 고찰하고, 3국간 FTA 추진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중·일 FTA를 위한 3국간 선행과제는 한·중·일 FTA의 목표 설정, 한·중·일 경제통합의 효과적 접근방법 및 분야별 협력사항 등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한·중·일 FTA의 주요 쟁점으로는 다자주의와의 상충문제, 미국의 입장, 동아시아 FTA 등을 들 수 있다. 한·중·일 FTA는 다자체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 FTA의 완성을 위한 전 단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1. 한·중·일 FTA를 위한 3국간 선행과제

제1절에서는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이 상호 협력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가항에서는 한·중·일 FTA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 혹은 목표 설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한·중·일 FTA가 궁극적으로 동북아경제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관세철폐보다는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의 경제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항에서는 동북아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뒤, 다항과 라항에서는 각각 경제와 비경제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가. 한·중·일 FTA의 목표 설정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중·일 FTA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FTA의 목적은 협정을 맺는 국가들 사이의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역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후생 증대의 혜택을 나누어 가지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FTA의 목적과는 달리 다양한 목표로 FTA가 추진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한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 의해 불완전한 형태의 협정으로 귀착될 수 있다. 한·중·일 FTA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완벽한 형태의 협정을 바란다는 것은 무리한 기대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감안하여 목표를 처음부터 낮게 설정할 경우 명목상으로는 FTA일 뿐 별다른 실익이 없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협정에 다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FTA를 논의하고 실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의 목표 수준을 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제 동북아지역은 유럽과 북미에 이은 세계경제 3대축의 하나로 부상했다. 먼저 한·중·일 FTA는 유럽이나 미주지역과 대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동북아의 지역경제통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통합의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겠으나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지역통합은 유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U는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정치·행정의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지역통합을 이루어 가고 있다.³⁷⁾ 이에 반해 북미지역의 NAFTA는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한 형태의 지역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EU도 처음에는 가장 기초적인 통합단계라고 할 수 있는 관세동맹의 형태에서 출발했음을 상기할 때 NAFTA도 향후 더 깊은 수준의 통합을 이룰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고려된 지역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동북아가 유럽이나 미주와 대등한 위치의 영향력을 갖는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가 우선 NAFTA와 같은 형태의 시장통합을 이루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삼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EU와 같은 형태의 광범위한 통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역내에서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공급과 소비가 보장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할 것이다. 후발주자로서 이미 다른 두 지역무역협정에 비해 뒤져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NAFTA 수준의 통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만 최소한이라는 의미를 통해 NAFTA의 수준을 뛰어넘는 지역통합의 가능성은 열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한·중·일 FTA는 NAFTA+(플러스)를 궁극적 목표로 삼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NAFTA+의 의미는 한·중·일 FTA가 경제적 이득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3국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함께 도모하는 형태가 될 필요가 있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3국이 수평적인 분업구조를 갖춘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역내 무역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경제통합의 혜택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다면 상호신뢰 구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경제통합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7) EU는 2003년 6월 21일 그리스의 포르토 카라스의 정상회담에서 임기 2년 반의 대통령직 신설을 비롯한 EU 헌법 초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회원국들의 비준을 거쳐 2004년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38)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나 멕시코의 경우는 인적자원의 이동도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음.

이렇게 하는 것은 한·중·일 FTA가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즉 이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동북아인들이 서로 교류하며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데 있어 한·중·일 FTA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FTA를 통해 3국의 국민들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외에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인들은 서로 공통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관심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북아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한·중·일 경제통합의 효과적 접근방법

동북아 경제통합의 이상적인 모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역내 경제적 격차, 상호신뢰 부재, 남북한 대치관계 등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동북아지역에 고착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표 5-1>은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식을 도표로 표현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대략 3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 동북아경제통합의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표 5-1> 동북아 경제통합의 단계적 접근

3단계	동북아 경제공동체		포괄적 사회통합 기반 구축
2단계	한·중·일 FTA	경제·성장 정책공조	
1단계	산업협력기반구축		

1) 산업협력기반의 구축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의 경제통합은 우선 한·중·일 3국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의 구축은 산업협력 기반을 형성하는 데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금융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동아시아지역의 과잉생산설비의 문제가 자주 지적되고 있다. 즉 동아시아 각국의 무리한 설비투자 경쟁으로 생산시설이 과다하게 증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이러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동아시아국가들이 서로 비슷한 산업구조를 추구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부 산업에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유휴시설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중국에서는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동일 산업에서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는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중·일 FTA를 거쳐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이루는 과정은 이러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데 3국이 함께 공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중·일 3국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산업구조 조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호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산업 전반에 걸친 공동의 구조조정 추진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구조 조정 공조는 우선 가능한 일부 산업에서 실시하고 이의 성공 여부를 보아가면서 그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구조 조정의 공조는 정부차원의 협정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자

체제하에서 인정되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고는, 산업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산업구조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기업들간의 담합으로 비취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경쟁국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산업구조 조정을 취하는 데 있어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항의 4)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2) 한·중·일 통합 FTA 추진

한·중·일 경제통합의 두 번째 단계는 3국간 FTA의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중·일 통합 FTA의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여건이 성숙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협력과제를 찾는 것이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중·일 FTA에 이르는 협력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중·일 FTA의 추진은 앞서 언급한 공동 산업구조 조정의 바탕 위에 산업 및 무역분야의 협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한 공동 산업구조 조정이 완성된 뒤에 비로소 한·중·일 FTA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진행이 매우 더딜 수 있다. 한·중·일 FTA의 공식적인 출범은 다소 늦을 수 있겠지만, 이의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중·일 3국이 각기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의의 수용 노력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일 FTA도 궁극의 목표가 동북아의 경제통합임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중국과 ASEAN의 FTA 논의도 결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당장 한국이나 일본과의 FTA에 체결에 부담이 느껴진다면 FTA의 전 단계인 투자협정의 체결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

다.³⁹⁾ 그런 의미에서 한·중이나 중·일 또는 한·중·일 3자간 투자협정은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논의를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협정의 논의는 앞서 언급한 공동 산업구조 조정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3국간 FTA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TA 등 지역주의에 입각한 협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대응하여 한·중·일은 3국간 FTA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의 경제통합이 단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3국은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협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분위기를 유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 경제·성장정책 공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정책협조는 산업과 무역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나 금융정책 등 일반 경제정책과 장기 성장전략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 일본, 중국 등은 1997년 동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발할 것에 대비하여 외환스왑협정(BSA)을 맺은 바 있다. 이 스왑협정은 금융위기 직후 일본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동아시아통화기금(AMF)의 설립 움직임이 무산된 이후 차선택으로 강구되었으며 이로써 금융위기 상황 발생시 동아시아 각국이 상호간에 지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를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의 경우와 같이 동아시아국가들이 연쇄적인 위기상황에 빠진다면 스왑협정에 의한 상호지원이 오히려 위기를 더욱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

39) 발리 한·중·일 정상회의(2003년 10월)에서 3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따라서 일본에 대한 불신 등으로 논의가 일단 중단된 상태에 있는 AMF와 같은 통화협력기금의 설립을 다시금 검토하여 한·중·일 3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동아시아국가들은 위기의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동아시아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서구식 경제논리의 일방적 적용보다는 동아시아적 가치관에 입각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운용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국가들간에 인플레이, 금리, 환율 등의 거시·금융 경제정책에 대한 협조로까지 정책공조의 범위를 넓혀갈 수도 있게 된다면 이는 동아시아국가들간의 상호신뢰 기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AMF와 같은 장치가 경제정책에 대한 상호 협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국가들간의 공동 성장기반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북아개발은행과 같은 기금은행의 설립은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통해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이 발전하고 경제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낙후지역이 함께 개발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중·일 3국이 주도하여 북한, 몽골, 시베리아 등 주변 지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된다면 동북아지역의 통합경제권 형성이 그만큼 더 광범위해지고 그 추진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4) 포괄적 사회통합 기초의 확립

이상에서 언급한 공동 산업구조 조정,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동아시아통화기금과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등은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춘 협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의 가항에서 언급한 NAFTA+와 같은 보다 진전된 형태의 지역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야의 협력에만 주목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진정한 의미의 지역통합을 위해, 경제분야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그 지역의 경제주체들의 상호 이해가 바탕에 깔려야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국가들의 사회가 일정한 동질성을 가진 방향으로 통합되어 갈 수 있는 기초가 포괄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동질성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더구나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북아 각국은 서구에 비해 일반대중의 교류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의 경제통합이 단순한 경제적 차원을 넘어 포괄적인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특히 출발이 늦은 동북아지역이 현재 앞서가고 있는 다른 지역 통합의 정도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초기의 교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위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라항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한·중·일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서로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중·일 3국간의 여행은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유럽이나 동남아 등 다른 지역에서의 여행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한·중·일 경제교류와 사회통합은 이와 같은 국경간 제약조건을 해소해 가는 데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40) 지금 당장 중국인에게 비자면제를 해주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무비자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다. 경제분야의 협력

1) 비관세장벽 개선

한국과 일본은 GATT/WTO의 회원국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면서 관세장벽이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⁴¹⁾ 한편 중국도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향후 5~7년에 걸친 관세인하 양허스케줄을 이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상당한 수준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관세인하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체제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세를 제외한 비관세장벽에 관한 논의는 다자간 체제를 통해서도 상당 기간 진행되어야 해결이 가능할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 경제통합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중·일 3국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중에 하나가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로지만 한국과 일본은 관세 양허정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루어져 있으나 각종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폐쇄적인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가) 기술표준의 조화

이상에서 언급한 비관세장벽으로 우선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표준을 들 수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전자·통신분야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국가간에 서로 다른 기술표준은 자국의 기업을 국외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우선 한국과 일

41) 2002년을 기준 한국과 일본의 수입액가중실행관세율은 각각 5.12%와 2.27%임.

본은 소비재 안전규정, 전기·통신 안전규격, 식품위생법 등의 다양한 기술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자국 내의 소비자보호, 생활안전, 보건·복지 향상 등이 원래의 취지이기는 하지만 이 기술규정예의 부합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 등이 외국제품에 비해 불리하게 되어 있어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예가 많이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각각의 공업표준인 **KS**와 **JIS**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들 마크의 취득과정이 역시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체계적인 기술표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⁴²⁾ 향후 3~5년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체계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완성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으로의 기술이전에 적극적인 외국기업의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을 일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상호협력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서구기업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켜 동북아국가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중국의 기술표준 정비에서뿐만 아니라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의 표준화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상호인증제의 확대

기술표준 제정과정의 협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상호인증제의 확대이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각국의 기술표준, 안전규정 등의 부합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은 외국기업에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어 무역에 있어서 장벽이 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기술규격이

42) 2002년 현재 1만 9천여 개의 기술표준이 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낡은 규정 이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표준화되어 가면서 국가간 차이가 사실상 없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에서 생산되어 자국의 기술규격에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동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의 검사기관에서 유사한 규격에 심사를 또다시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자주 발생한다.

국가간 상호인증협정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서구국가들 사이에는 이러한 협정이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다.⁴³⁾ 그러나 한·중·일 3국 사이에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협정이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⁴⁴⁾ 전면적인 상호인증은 당장 어렵더라도 가능한 일부 기술에 대해서라도 상호인증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 범위를 점차 넓혀 가는 협력이 한·중·일 3국간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인증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에 대한 상호인증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한·중·일간의 전문인력 교류가 확대되어나간다면 이는 한·중·일 3국의 경제통합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유통구조의 개선

일본의 유통구조는 전통적으로 무역상대국으로부터의 문제 제기가 가장 많은 분야이다. USTR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의 복잡한 다단계 유통구조와 이에 대한 규제는 일본에 대한 수입과 투자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벽이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JFTC)의 조사에 의하면 유통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로서는 구매관행, 재고품의 반환, 판매원의 파견 요청, 판촉자금의 지원요청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의 전통적인 계열구조도 유통 등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상대국의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통구조의 변화조짐은 아직 포착

43) 특히 EU 내에서는 상호인증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기술표준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증에 대한 상호인증도 이루어지고 있음.

44)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양국간 투자협정에 이어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호인증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되지 않고 있다.⁴⁵⁾

일부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유통구조의 고착적인 요소가 일본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지난 10년간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⁴⁶⁾ 최근 한국과 일본의 FTA 논의에 있어서도 한국은 일본의 유통구조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들이 자국의 구매관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받을 정도로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에 대한 심각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특히 한·중·일 협력과 더 나아가서 경제통합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3국에 남아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데 3국이 서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 정부조달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1996년 WTO 정부조달구매협정(GPA)이 발효되고 한국과 일본은 동 북수국간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법률상으로는 이 두 국가에서는 정부조달에 있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실제로 정부의 조달구매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부조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등록 양식이 각 지방정부에는 물론 중앙정부의 부처별로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밝지 않은 외국기업에는 애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건설산업의 경우 해외건설자재의 품질검사제도는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다시 현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장애가 존재한다. GPA가 발효된 이후 그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전과 전자공시시스템의 활성화 등을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

45) 1996년의 OECD 보고서는 일본의 계열구조가 견고하게 고착되어 변화가 쉽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은 지적은 유효한 것으로 보임.

46) 이에 대해서는 Frederick(2002) 참고

소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WTO의 가입이 최근에만 이루어진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 GPA의 서명국이 아니며 동 협정에 대한 관심 표명도 없는 상태이다.⁴⁷⁾ 그러나 베이징올림픽, 서부대개발 등 막대한 규모의 정부조달 구매가 예상되고 있어 이 분야에서 한·중·일 3국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향후 동북아 경제통합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정책 및 통상제도의 조화

한·중·일 3국이 FTA를 체결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3국의 경제정책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997년 동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가 이 지역 국가들간의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했으며 그 이후 스왑협정 등 경제위기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일부 장치가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동아시아지역의 궁극적인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장치들이 계속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간에 우선 긴밀한 정책공조체제를 마련하여 위기상황에서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제사회에서 동북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3국간의 신뢰는 더욱 강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가) 위기관리 및 개발정책의 조화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국가들 사이에는 위기관리에 있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여 각국간에 외화스왑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어느 한 국가가 위기에 처할 경우 여러 국가가 함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

47) 중국과 함께 WTO에 가입한 타이완의 경우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아직 읍서버의 자격도 신청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낮음.

만 1997년의 상황과 같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1997년 위기 이후에 추진되다가 실현되지 못한 AMF의 설립논의를 다시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에는 위기 직후 동아시아국가들의 투명하지 못한 금융제도, 관행 등을 비롯한 책임론, 도덕적 회의를 따라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개혁이 이루어진 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벌인다면 AMF의 설립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AMF의 설립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간의 거시, 금융정책의 공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춘다는 의미도 갖는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공조는 산업과 무역에 관한 FTA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앞서도 언급하였던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논의도 더욱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두만강유역, 시베리아 등 동아시아의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여러 계획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은 충분한 자본을 유치할 수 없었던 데 주요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등이 보유한 막대한 외환자본이 주로 서구시장을 거쳐 투입되기 때문에 이 자본들이 동아시아지역의 개발에 유입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따라서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은 동북아의 막대한 외환자본이 실제로 이 지역의 개발에 투입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앞당겨 역내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통합을 앞당기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나) 통상정책 공조

거시·금융 및 개발정책 등과 관련한 정책협조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국제통상정책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우선 WTO 등 국제무역

질서의 확립과정에서의 한·중·일 협조가 중요하다. 최근 멕시코 칸쿤에서의 WTO 각료회담이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DDA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공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반덤핑협정 개정, 농산물 시장개방 등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정식 회원국이 된 뒤 첫 번째로 가지는 다자간 협상이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력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으로서 한국이나 일본과 여러 면에서 다른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무역규모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중·일 3국간에 공조필요 분야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특히 WTO 체제에서 중국의 등장은 그 동안 서구가 주도해 오던 국제 무역질서의 확립과정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중·일 3국은 적절한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칸쿤회의의 미진한 결과로 인해 많은 국가가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간 FTA 등의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FTA 논의에 있어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은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로 인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동북아 국가의 FTA 논의가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동북아국가들은 경쟁적으로 FTA를 서둘러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북아국가들은 FTA 체결에서 서로 경쟁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의 정신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다) 무역구제제도의 개선

앞서 언급한 통상정책의 공조에 있어 한·중·일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통한 산업보호 조치의 발동에 관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3국의 통상제도를 조화시킬 수 있다. 이들 조치는 원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극단적인 충격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취해지는 일시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이 조치들을 남용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⁴⁸⁾

또한 최근에는 개발도상국 사이에도 이 조치들을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들 조치의 발동이 극히 제한적이지만 중국은 이를 매우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WTO 가입 이후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의 발동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⁴⁹⁾ 이와 같이 무역구제조치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WTO의 DDA 협상에서도 반덤핑조치 발동요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반덤핑협정의 개정 논의가 벌어지고 있으나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서 실제로 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의 반대는 철강, 섬유 등 취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무역구제 조치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한 부담은 개발도상국들이 떠안는 것이 현실이며 한국과 중국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DDA 협상에서의 공조를 통해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3국간의 무역구제조치 발동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3국이 공유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라) 통관절차 간소화

통상분야의 협력에 있어 한·중·일 3국이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또 다

48) 1980년대의 수입규제 남용에 대해서는 Nam(1993) 참고

49) 2003년 8월 현재 한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무역구제조치는 모두 18건에 이릅니다.

른 부분으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들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서는 통관기간이 현저히 단축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관절차에서의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공처리와 창고운영 등 화물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수입통관시 받게 되는 각종 검사 수수료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아 수입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다양한 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WTO에 가입한 중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세관의 관세평가에 있어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며, 특히 수입항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투명성 문제와 통관지연의 문제는 각국의 세관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통관체제(EDI)의 도입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상하이와 심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EDI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각국이 이러한 체제를 도입하는 데 서로 협조하여 상호호환성이 높은 시스템을 갖춘다면 통관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일 3국도 EDI 시스템의 향후 개선에 있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3국간에도 세관원들의 교류증대 등을 통해 상대방의 통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시작으로 서로 호환성이 높은 통관체제를 갖추어 나간다면 향후 지역 경제통합에 있어서 관련 비용을 크게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3) 상호무역 확대

<표 5-2>의 한·중·일 3국의 무역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151억 4,300만 달러이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237억 5,400만 달러로 전체수출 1,614억 8천만 달러의 9.38%와 14.71%를 각각 차지하는 규모이다. 즉 한국의 수출에서 일본과 중국에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4%를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각각 115억 800만 달러와 484억 8,300만 달러로 전체수출 3,257억 1,100만 달러의 각각 3.53%와 14.89% 그리고 전체적으로 18.4%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286억 1,200만 달러와 중국에 대해서 399억 5,800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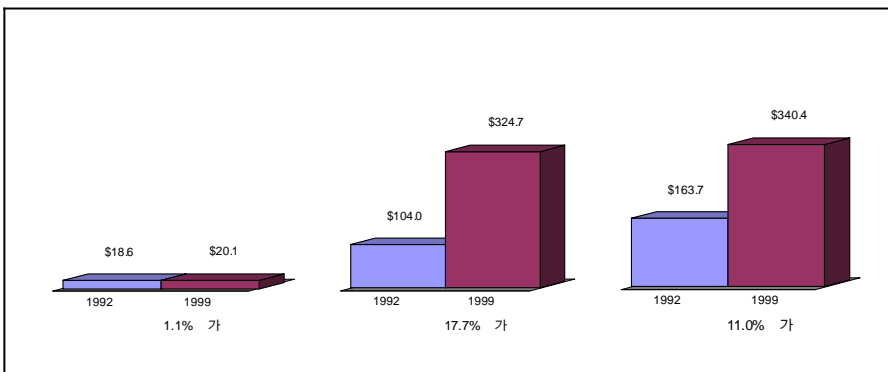
<표 5-2> 한·중·일 3국의 무역 구조

(단위: 억 달러)

수출국 \ 수입국	한국	일본	중국	세계
한국	154.98	237.54	1,742.26	1,614.80
일본	298.56	534.89	4,540.22	4,166.32
중국	174.00	617.92	4,656.56	3,257.11
세계	1,521.23	3,371.49	2,954.40	66,773.3
	1,420.82	3,041.28	2,628.42	63,563.3

주: 2002년도 기준
 자료: 무역협회, KOTIS

<그림 5-1> 한국의 대일 수출부진품목에 대한 분석



를 수출하여 전체 수출 4,166억 3,200만 달러의 6.87%와 9.59%를 합친 16.5%에 가까운 수출을 한·중 두 나라가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1992년부터 10년간 3국간의 무역액이 1,262억 400만 달러에서 3,783억 7,400만 달러로 연평균 4.88% 이상씩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한·중·일 3국의 무역액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77%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한·중·일의 역내 무역의 비중은 아직까지 2.90%에 지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한·중·일 3국간에는 무역량이 훨씬 증대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수출입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중·일 3국이 세계 다른 국가와는 활발한 무역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역내 국가간에는 무역이 부진한 품목을 찾을 수 있다. 위의 그림은 1992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이 특히 부진한 품목에 대한 분석이다.⁵⁰⁾ HS 6 단위로 163개 품목에 있어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1.1% 증가한 데 그친 반면, 한국의 세계에 대한 수출은 연평균 17.7%나 증가하였다. 설령 한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이 품목들에 대한 일본의 수입수요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 5-1>에서 보듯이 이 품목들에 대한 일본의 수입은 11.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각각의 품목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이 품목들에 대한 무역의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이러한 품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품목들을 발굴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다면 3국간의 무역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한·중·일 3국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3국간의 무역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

50) 자세한 분석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권영민(2002) 참고

으며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이는 반면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3국간 협력의 필요성과 더불어 무역의 확대균형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즉 한·중·일 3국이 적절한 분업구조를 정착시킨다면 3국간에는 무역의 흑자와 적자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겠지만 3국 전체에는 무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3국간의 무역이 부진한 분야를 찾은 것과 마찬가지로 3국간의 무역불균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3국간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의 해소와 적절한 분업구조의 구축은 한·중·일 3국간 신뢰를 보다 공고히 구축할 수 있으며 3국간 FTA의 실현을 생각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4) 산업구조 조정 공조

이상에서 한·중·일 3국간 무역불균형의 해소 또는 확대균형을 위해 3국간의 적절한 분업구조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3국간 분업구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3국의 산업구조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국가간에 협력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선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일 3국간 신뢰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그 가능성과 실효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동아시아 지역내 과다 유희설비를 공동의 노력으로 해소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증설을 시도함으로써 생산과잉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것이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또한 사실이라고 하여도 그 책임이 반드시 동아시아지역의 국

가들에만 지워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겠으나, 일부 산업에서의 산업설비 편중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의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또한 국제수요의 변동에 따라서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설비가동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석유화학분야를 들 수 있다. 동아시아지역의 석유화학설비 분포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동북아로부터 시작하여 싱가포르에 이르는 동남아시아에 넓게 퍼져 있으며 이들은 마치 지리적으로 가운데 위치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제품의 상당 물량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대외 의존적 구조를 벗어나 자국 내에서의 균형적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외국자본을 유치한 석유화학설비의 증설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중국 이외의 지역에 분포

<표 5-3> 다국적 화학기업의 대중국 투자계획

(단위: 천 톤)

기업	생산제품 계획					총투자액	비 고
	에틸렌	PE	PP	SM	EG		
BASF	600	400			300	26억 달러	2005년 완공 예정
Shell	800	450	240	560	320	40억 달러	2005년 완공 예정
BP Amoco	900	(415)		(415)		(35억 달러)	AN(360), 2006년 완공 예정
ExxonMobil	600	450	300			30~40억 달러	2006년 완공 예정
Dow	600	270		600		30~40억 달러	PVC(250),PS(360) 2008년 완공 예정
Phillips	600	540	300	250		24억 달러	PS(200)
합계	4,100	2,525	840	1,945	620	195억 달러	

자료: 일본중화학공업통신사(2001)

해 있는 많은 석유화학설비가 잉여설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렵겠지만 동아시아지역의 국가와 기업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중·일 공동산업구조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반도의 서해를 사이에 두고 그 동쪽에서는 생산설비의 여력이 남아 있고 그 반대쪽에서는 새로운 설비 증설이 필요한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는 유희설비의 중국 이전, 합작을 통한 설비의 공동운영, 전략적 제휴, 직접투자, 기술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석유화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협력범위를 철강, 조선 등의 분야로 점차 넓혀 간다면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는 자연스럽게 재편되어 갈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3국간 FTA를 비롯한 지역경제의 통합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 조정 협력을 추진에 앞서 WTO 등 국제무역규범의 틀과 경쟁국들에 의한 담합에 대한 이의 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상관행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은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여기에 해당 국가의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기업의 협의체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제3국으로부터의 견제를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국제무역규범에 있어서의 새로운 틈새를 개척함으로써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 협력에 대한 합법성을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⁵¹⁾

51) 유럽의 석탄·철강동맹이나 미·캐나다 자동차 협정 등도 현행의 WTO체제 아래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규범에 선행한 행위로 규제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됨.

5) 에너지·환경 협력

최근 이라크전쟁을 둘러싼 국가간의 첨예한 대립의 배후에는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부에서는 제1·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인류의 큰 전쟁이 모두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둘러싼 강대국간 경쟁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⁵²⁾ 이와 같이 강대국간 에너지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역내의 부존 에너지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은 공동의 경제적 이익 이외에 지역국가간의 유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최근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베리아의 가스전 개발을 비롯한 이 지역 자원 개발과 수송망사업에 한·중·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북아지역은 세계에서 에너지자원의 수요 증가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기에 개발 이후의 잠재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나 문제는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구의 자본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그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졌지만, 만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당 지역 국가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된다면 진척이 상당히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역내 에너지 수입국들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게 되고 중국, 러시아 등 자원보유국은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수송관 설치 경로의 결정 여부에 따라 북한이 관련될 수도 있으며, 북한을 가로지르는 수송관이 건설된다면 이는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협력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한·중·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해 갈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환경협력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국제적인 논의의 전개

52) 전쟁과 자원확보간 관계에 대해서는 Claire(2003) 참고

<표 5-4> 동북아 에너지 개발 주요 프로젝트

구분	사할린-I	사할린-II	이르쿠츠크
확인매장량	원유: 3억 7000만톤 가스: 3억 5,117만톤	원유: 5억 톤 가스: 4억 1,073만톤	가스 10억 톤
지분구조	엑손모빌(미) 30%	셸(영) 62.5%	BP(영) 31%
	SODECO(일) 30%	미쓰이(일) 25%	INTERROS(러) 24%
	ONGC(인도) 20%	미쓰비시(일)12.5%	TNK(러) 18%
	Rosneft(러) 20%	-	이르쿠츠크 주정부 14%
	-	-	Vitra Holding Co. 13%
거리 (파이프라인)	최대 3,000km	LNG (선박, 2001년)	최소 4,000km

자료: 류지철(2003), 『동북아 에너지 협력』

와 이에 따른 각종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중·일이 상호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의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최근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한 중금속의 국경간 이동으로 한국과 일본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을 극복한다는 점에서도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동북아 환경협력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각국이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정부간, 환경부처간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일 양국은 이미 21세기를 향한 환경협력사업으로서 중국의 충칭 등 3개 도시에 대한 환경개발 모델 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업에 한국의 참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향후 한·중·일 3국은 환경분야에 대하여 좀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서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인터넷·정보통신 협력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과

제는 인터넷, 정보통신분야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통산업에서의 구조조정 협력과 함께 미래형 지식산업으로까지 협력분야를 넓혀 가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한·중·일 3국에서 정보통신 산업은 고용창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 등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3국의 기술발전 단계가 상이하고 또한 비교우위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3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5-5> 한·중·일 3국에서 정보통신분야의 비중(GDP 대비)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정보통신서비스 (A)	6.80	3.40	2.05
정보통신기기 (B)	20.08	6.14	5.70
소프트웨어 (C)	2.98	-	-
IT 산업비중 (A+B+C)	29.86	9.54	7.75

주: 한국은 2001년, 중국과 일본은 1999년 기준

자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2002), 『정보통신 통계지표집』

특히 인터넷, 정보통신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언급하였던 기술표준의 제정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이 부분에서 3국의 협력은 서구국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표준제정 협상에서 동북아국가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 관련 정책의 서구 편향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한·중·일 3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즉 사생활보호, 정보보호, 소비자보호, 도메인(domain) 설정 등에 있어서 서구의 국가와 기업들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출발이 늦었던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비경제분야의 협력

앞에서는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앞당기기 위한 협력과제 가운데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내용들을 다루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지역경제의 통합은 경제적인 요인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비경제분야 협력 방안을 간단하게 기술해 보고자 한다.

1) 중간조정자의 역할 강화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 논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늦은 배경에는 이 지역의 양대 세력인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인 대결구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의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과 일본의 역학관계를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쟁과 반목의 관계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이나마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면서 이러한 관계가 계속 축적되어 상대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3국간 상호신뢰의 구축은 경제적인 측면의 협력방안과 그 밖의 다른 분야 협력방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는 어느 정도의 관리와 조정이 필요하다.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의 경제통합에 중국과 일본이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에 양측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적절히 중재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일본에 대해

중국과 유사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 정도의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양국을 연결하여 동북아를 통합하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의 관점에서만 본 아전인수적인 논리라고 비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 EU의 전신인 EC 출범의 기초에는 베네룩스 관세동맹이 있었으며, 이 개방형 소국들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협상을 중재했다고 한다.⁵³⁾ 이와 같은 역할을 한국이 담당하지 못할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으며, 한·중·일 3국이 진정으로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한다면 한국은 충분히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 경제제도 선진화 등 철저한 내부 개혁으로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의 논의에 있어 도덕적 권위를 함양하며, 정치외교력을 증진시켜야 하고, 남북 긴장관계가 완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남북간 긴장 완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심각한 장애요인 중 하나는 북한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한·중·일 3국간의 협력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국 등 서구세력이 동북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남북경협 등을 통한 관계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핵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의 이해관계

53) 유럽의 초기 경제통합과정에 대해서는 문우식(2003) 참고

가 엇갈리면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다른 국가, 그리고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게도 결코 유익한 결과를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남북협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통한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에 있음을 북한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는 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 특히 중·일을 비롯한 동북아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둔다면 한·중·일 FTA를 비롯한 동북아의 경제통합이 더욱 앞당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문화적 교류의 확대

경제통합단계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유럽이나 미주지역과 비교할 때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이 뒤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문화적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각국의 소득수준이 증대되고 교통·통신수단이 발전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도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주나 유럽 등 서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듯 충분하지 못한 교류에 따른 대표적인 결과가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북아인들의 상호 의사소통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진다는 점이다. 물론 서구국가들은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피지배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비슷한 언어를 구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중·일 3국은 언어문제에 있어 심각한 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상호 의사소통능력을 증대시키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 정부는

상대국의 언어습득을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데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문화교류는 한·중·일 3국의 고유한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현대의 연예·오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요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한국이 일본문화 완전개방을 허용한 것 등은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한·중·일 3국은 좀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문화교류의 걸림돌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상호 방문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항공을 비롯한 한·중·일 3국의 교통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항공편 등의 확대는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를 위한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한·중·일간의 교통망 확대는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경제적 교류가 증대되는 것도 교통 수요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인적 교류의 확대를 위해서는 관광, 스포츠 등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관광수요의 증대가 예상되지만, 이러한 1회성 행사뿐만 아니라 정례적인 방문수요의 확대를 위해서 한·중·일 공동 프로축구리그의 창설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한·중·일 FTA의 주요 쟁점

가. 한·중·일 FTA와 다자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다자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은 2차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

나, 그렇다고 그것이 오직 미국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체제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에 성공한 한국과 같은 무역국가에 있어서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자유무역체제 구축은 국익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부정적인 상황 전개가 아닐 것이다. 굳이 Adam Smith 이래의 자유주의 경제학 이론들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일단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자유무역체제의 완성이 그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될 것임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중에 국가간 그리고 일국 내부의 계층간에 발생하기 마련인 이익과 손해의 분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일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다자주의 체제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다자주의 체제의 완성에 지역주의 체제의 발전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 보고자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한·중·일 FTA를 비롯한 쌍무적 혹은 지역주의적 경제협정체의 체결은 다자주의 경제체제의 완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인가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주의의 발전은 오히려 다자주의의 보완적, 전(前)단계적 과정으로서 지지되고 수용되어야 할 현상임을 주장한다. 그 논거는 우선 Olson(1965)의 고전적 개념인 ‘소집단의 우월성(small group’s advantage)’에서 찾는다. 특정한 경제체제의 완성이란 결국 참여국가간의 협력의 산물인데, 이 체제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가 늘면 늘수록 그들간의 국제협력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집단규모가 클수록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 혹은 ‘무임승차의 문제(free-riding problem)’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자주의 체제에 가까울수록 그 협력체제의 완성은 어렵다는 말이 된다. 참여국가의 수가 늘어가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협력을 순조롭게 성취하고자 한다면 참여국의 수를 가능한 줄여야 한다. 집단행동의 전개와 그 목표달성에 있어 소집단일수록 우월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은 국제협력이라는 국가간 집단행동의 경우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쌍무적 혹은 지역주의적 경제협력체의 발전이 다자주의에 비해 용이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소집단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우선 지역주의, 즉 소수 지역국가간의 ‘역내 협력체제 (intra-regional cooperation system)’를 전세계에 걸쳐 발전시키고, 그 이후 이 소수 지역협력체 사이에 소위 ‘지역간 협력체제(inter-regional cooperation system)’의 구축을 도모해 나감으로써 중국에 전세계적 차원의 다자주의 체제의 완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항의 핵심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다자주의로 바로 가려고 하는 어려운 길을 택할 것이 아니라 소집단의 우월성을 잘 활용하여 지역주의를 거쳐 가는 보다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최종 목표에 순조롭게 도달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1) 다자주의 체제의 문제: 국가간 집단행동의 문제

과거의 GATT 체제는 물론 현재 WTO를 중심으로 하는 新다자주의 체제 건설의 주도 국가는 단연 미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조차 NAFTA 등과 같은 지역경제협력체의 발전을 통해 자국의 국익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다자주의라는 총론에는 각국이 모두 동의하지만 그에 대한 실천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주의를 그들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즉 지역주의가 현실이며, 다자주의는 아직 이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다자주의로 바로 가는 길은 그만큼 험난하다는 것이다.

전후의 국제사회에서 GATT나 WTO 체제를 성공적인 혹은 완성된 다자주의 체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어떠한 국제기구 혹은 국제협력체도 세계무역질서 전체를 총괄할 수 있었던 예가 없었고, 따라서 국가간 및 지역간의 무역분쟁은 끊임없이 계속될 뿐이었다.

자유무역체제를 포함하는 소위 ‘국제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의 창출과 유지에는 모든 국가가 지대한 관심을 가졌지만,⁵⁴⁾ 그것을 위한 비용부담에 선뜻 나서는 국가는 1970년대 초까지의 미국을 제외하고는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거의 모든 국가는 언제나 무임승차국으로 머물기를 원했다. 타국 시장의 개방폭은 최대치이길 원하면서도 자국 시장의 개방폭은 최소한에 그치고자 했다. 자유무역체제를 위한 국제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간에 벌어지는 집단행동의 문제가 원인이었다.

가) 패권체제 이후의 두 대안: 신자유주의제도론과 집단지도체제론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의 역할이 감소하기 시작한 1970년대 초 이후 국제사회에서 이 집단행동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소위 ‘패권 이후(After Hegemony)’의 문제가 도래한 것이다. 패권체제하에서는 국제공공재의 유지비용을 패권국가가 전부 혹은 대부분 부담했고, 따라서 집단행동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경우가 적었으나, 패권 이후의 체제에서는 그 사정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국제공공재를 위해 누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어떻게 하도록 하느냐를 결정하는 일이, 즉 국가간에 발생하는 집단행동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를 찾는 일이 국제사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 크게 다음의 두 가지 해법 적용이 시도되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제도론자(neo-liberal institutionalist)들이 강조했던 국제기구와 제도의 역할 강화였다.⁵⁵⁾ 그들에 의하면 장기적 안목을 갖고 합리적 선택을 해나가는 국가들에게 있어 국제기구와 제도를 국제협력에의 강한 유인을 제공한다. 그것들은 국제협력 성취의 걸림돌이 되는 불확

54) 국제공공재의 성격과 의미에 대하여는 Snidal(1979)과 Conybeare(1984)를 참고

55) 신자유주의 제도론은 Lipson(1984), Axelrod and Keohane(1985) 등에 의해 발전되었음.

실성(uncertainty)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주고, 국제협상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대폭 감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기구나 제도 등이 국제협력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시도는 소위 집단지도(collective leadership) 체제의 구축이었다. 신자유주의 제도론자들이 패권국가 대신에 국제기구나 제도의 존재를 필수인 것으로 여기는 반면, 집단지도체제론자들은 그러한 제도적 고안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패권 이후의 국제사회에서는 단지 소수 주도 국가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새로운 집단지도체제가 출현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단일 패권국가의 역할을 소수 강대국이 나누어 부담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수 강대국이란 패권국가 덕에 유지되어 기존 국제경제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들인바, 그들에게는 패권 이후의 체제유지비용을 자신들이 나누어 부담하더라도 그 부담비용이 그로 인해 얻는 이익, 즉 국제공공재의 제공이 계속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보다 훨씬 낮게 마련이고, 따라서 그들은 집단지도에 충분한 유인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⁵⁶⁾

나) 두 대안의 공통문제: 강대국 중심구조

상기 두 해법이 적어도 일정 기간 상당 정도의 국제공공재 창출을 가늠케 해줌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효과는 여러 면에서 제한적이었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두 해법 모두 약소국가들에는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이다.⁵⁷⁾ 이 문제의 소재는 두 경우 모두 소수 강대국의 주도에 의한 국제협력체제의 유지를 꾀했다는 점에 있다. 신자유주의 제도론에서 필요로 하는 국제기구나 제도는 그 창설 자체가 소수 대국들간의 협조에 의해서만이 사실상 가능한

56) 집단지도체제론에 대해서는 Snidal(1985)과 Rosecrance and Taw(1990)를 참고

57) 이 두 해법에 의한 국제공공재의 창출 및 유지에 따르는 제반문제에 대한 이하 논의는 주로 최태욱(2000)에서 인용하였음.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도론자들의 국제협력 문제의 해결책은 대국들로 이루어진 소집단의 협력을 전제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지도 체제론이 제시하는 해법의 골자가 소수 대국간의 협력체제 구축 자체에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국제협력체제에서 한국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국제공공재의 창출인 것이다. 그런데 소수 강대국의 주도로 유지되는 국제협력체제는 많은 경우 오직 그 소수 주도국만을 위한 ‘클럽 재(club goods)’를 생성하기 일쑤다.

집단지도체제의 구성 국가는 그 지도력을 오직 자국의 이익 극대화라는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발휘할 뿐이다.⁵⁸⁾ 체제유지를 위한 노력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일 뿐인 것이다. 사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며, 따라서 이러한 소수 지도국가가 다수 약소국의 이익을 고려해 줄 것을 기대할 하등의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약소국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강대국들의 이익추구 행위가 자신들의 희생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국제기구나 제도 설립에 의한 국제협력의 경우에서도 강대국들과 약소국들 사이의 이득분배의 불균형 문제는 자주 일어난다. 무역, 금융, 투자, 에너지 등 주요한 국제거래의 개별영역에 존재하는 국제 제도들은 그 형태나 운영이 대부분 강대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1970년대의 석유위기 당시 석유 소비국들간의 소위 ‘긴급석유공유체제(emergency oil sharing system)’의 확보를 위해 설립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경우가 과점적 국제협력체제의 정형에 속한다. 이 협력체제는 에너지위기의 극복이라는 가치 세계적 필요에 의하여 형성되어졌으나,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3세계의 약소국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것은 오직 협력체제의 설립과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소수 강대국만의 몫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58)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Snidal(1985) 참고

현상은 에너지시장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국제시장에 걸쳐 이러한 과점적 혹은 카르텔적 제도가 강대국들에 의하여 조직, 운영되고 있다.⁵⁹⁾ 국제공공재의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각 영역에 있어 자유시장체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그에 의한 혜택은 상당 부분 강대국들에 의하여 과점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소수 대국들만의 주도에 의하여 성립된 국제협력체제가 이러한 약소국 소외현상을 결과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국제공공재의 창출을 가능케 해 줄 균형 잡힌 다자주의 체제로의 발전에 이르는 대안은 달리 없는 것인가?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약소국 소외현상을 극복하는 동시에 국가들간의 집단행동의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리하여 그 구축 가능성이 높은 국제협력체제인 것이다. 아래에서는 지역간 협력체제의 건설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집단지도체제나 국제기구 등에 의해서는 직접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체제를 지역주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결국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의 보완적, 전(前) 단계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2) 대안으로서의 지역주의적 접근

EU나 NAFTA 등의 발전이 예시하듯, 각 지역의 인접 국가들이 역내 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는 일은 비교적 용이한 일이다. 체제내 모든 국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집단행동 문제, 즉 국제협력의 문제가 역내 소수 국가 사이에서는 훨씬 수월하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체제 내에 이러한 제도화된 몇 지역주의가 자리잡게 되면, 즉 국제체제가 ‘지역적 하부체제(regional subsystems)’로 나뉘게 되면, 지역간 협력체제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될 것이다. 보다 광범위한 국제공공재의 창출 필

59) 미국의 주도에 의한 과점적 국제 제도의 예는 손열(1999), Strange(1996), Bovard (1991)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요는 상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제경쟁력이 계속 향상되어 가는 다국적기업들은 기존의 역내 자유무역체제가 자신들의 경쟁력이 미치는 어느 영역에도 계속 확대되기를 바랄 것이며, 그들의 선호가 역내의 많은 국가에서 표출되고 결집되게 되면, 결국 해당 지역경제협력체는 타지역의 경제협력체와 지역간 경제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의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도 역내 국가들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집단의 협력 문제에 해당한다. 지역공동체들은 어느 경우에도 소수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집단의 우월성은 이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며, 그것이 지역간 협력체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체제의 구축을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국제협력체제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면, 그것은 특히 약소국들에 보다 바람직한 일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지도체제나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체제는 자칫 강대국들만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국제협력체제의 주도권은 실질적으로 소수의 대국에 의하여 좌절될 것이며, 그것은 결국 비참여국가 혹은 비기여국가로 분류될 대부분의 약소국가를 소외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 혹은 기여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국제협력체제의 이익을 가능한 한 분배하지 않겠다는 주도국가들의 의도를 탓할 수는 없다. 단지 참여 혹은 기여의 기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는 소수 대국의 주도에 의한 국제협력체제의 구조를 문제삼는 것이다. 지역간 협력체제를 통한 경우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어진다.

동아시아의 특정 약소국가의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일반적으로 그 국가가 집단지도체제를 직접 구성하거나 세계적 국제기구의 주도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그 나라는 국제협력체제로부터의 이익분배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국제협력체제가 지역간 협력체제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라면 그 나라는 엄연한 참여국가로서 그에 합당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동아시아 지역협력

체의 구성원일 것이며, 동아시아 지역협력체는 다시 국제협력체, 즉 지역간 협력체의 주요 멤버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협력체의 결성으로 이 약소국의 국제협력체제에서의 위상이 간접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 지역협력체가 결성되어지고 그것이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공동체 등과 더불어 전세계 규모의 국제협력체를 구성하는 단위가 된다면, 동아시아의 모든 약소국은 국제협력체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이익을 동시에 그리고 빠짐없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역간 협력체제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진정한 국제공공재의 혜택인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다자주의 완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것이 된다. 탄탄한 지역경제협력체 몇 개가 모여 전세계를 아우르는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체제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국제협력체제의 설립 목적이 안정적인 자유무역체제의 확립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역경제협력체의 발전 자체도 그 목적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 된다. 지역주의의 참가국들은 역내에서의 경제장벽 제거를 통해 시장확대에 따르는 여러 이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예컨대 EU가 실질적으로 일국 경제와 비교될 수 있는 단일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지역주의는 세계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 또 다른 축소판 세계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자주의에 기초하여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WTO라는 커다란 우산이 있다면 지역주의는 이 테두리 내에서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간에 다자주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유화를 실현하는 한 수단이기도 하다.⁶⁰⁾ 그리고 이러한 지역주의가 중국에 하나의 국제협력체로 결집된다면 지역주의는 결국 다자주의로 가는 전 단계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한·중·일 FTA가 다자주의 체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타당하다.

60) 이러한 견해와 해석은 김세원(2003) 참고

나. 한·중·일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1) 한·중·일 FTA에 대한 미국의 예상 태도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지지자들은 한·중·일 FTA의 경우에서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형태의 역내 경제협력체의 건설에 있어 미국의 반대를 우려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과거에 미국은 실제로 동아시아국가들만의 제도적 통합에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예컨대 1990년과 1991년 각각 ‘동아시아경제그룹(EAEG)’과 ‘동아시아경제회의(EAEC)’의 창설이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에 의해 제창되었을 때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⁶¹⁾ 또한 미국은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와중이었던 당시 일본이 제안했던 AMF의 설립이나 그와 유사한 엔 블록의 구축 구상 등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AMF의 창설 등으로 인해 자국의 통화패권이 위협받을 것이며, 그 경우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여 자신이 배제된 형태의 경제통합체가 역내에 건설되는 것에 대해 일관된 거부감을 표시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반대에 동아시아국가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었음은 그들 경제의 대미 의존도가 줄곧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Pempel(1997)이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높은 대미의존도를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지역주의 건설에 치명적인 걸림돌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물론 1970년대를 거쳐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동아시아국가들간의 역내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아져 1997년도에 이미 48.7%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MERCOSUR(22.6%)는 물론 NAFTA(44.1%)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EU

61) EAEG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배궁찬(2000) 참고

(59.9%)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에 있어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였다. 예컨대 1990년대 후반부에도 일본 수출의 약 30% 가량은 계속 미국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한국이나 대만 등 다른 주요 동아시아국가들에게도 미국은 여전히 최대의 수출시장이었다. 동아시아국가들의 대미 무역의존도가 이렇게 높다는 사실은 그들의 경제발전과 성장은 아직도 미국시장이라는 변수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미국의 대동아시아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안보 면에서의 대미 의존 역시 국제무대에서의 그들의 행보를 상당 부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각각 한·미동맹과 일·미동맹 등으로 미국과 양자간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 또는 중국으로부터의 실질적 혹은 잠재적 위협에 대응해 온 이 국가들이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국제정치경제적 결정을 내리기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철(2003)이 관찰한 바와 같이, 적어도 20세기 말까지는 “미국은 중국과 일본을 분리시켜 균형을 이루게 하고 그 틈새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 유지”해 왔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군사 및 경제적 동맹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인지도 모른다. 만약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미국의 대중국 경계정책에 반하여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한 공동 접근을 통해 한·중·일 FTA를 건설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더구나 한·중·일 FTA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파급효과가 가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의 합은 미국이나 전체 EU에 거의 필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들로 분류되는 중국과 한국이 협력체에 포함되어 있어, 동북아 3국이 경제협력체를 결성할 경우 그것이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부

상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시 말해 3국의 기존 경제규모가 FTA의 형성 등으로 인해 활성화될 때 그것이 동북아 영향력 창출의 극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패권에 변화가 초래될 여지가 충분해진다는 데에 있다.⁶²⁾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이 한·중·일 FTA의 체결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또한 한·중·일 3국이 그러한 미국의 태도에 일정 부분 구속될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

2) 명분이 약한 미국의 반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 한·중·일 FTA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미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명분은 약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 스스로도 FTA의 확산을 통한 지역주의 정책을 대외경제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함께 WTO 체제가 출범하며 다자주의의 세계화가 완성될 것으로 보였으나, 그 기대를 무산시킨 것은 오히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해 왔던 미국이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NAFTA를 결성하였다. 이후 미국의 지역주의는 중단없이 계속되었다. 미국은 현재 2005년까지 중남미국가들까지도 포함시킨 FTAA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또 그와는 별도로 중남미국가와 쌍무적 FTA도 동시에 추진중에 있다. 심지어는 역외 국가들과의 FTA 체결 움직임도 활발한데, 현재 모로코, 이집트, 호주, ASEAN 국가들, 그리고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등과 FTA 추진을 논의중에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아메리카 지역주의의 완성을 위한 노력에 더하여 여건이 되는 모든 역외 국가와 쌍무적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해 가고 있는 것으로

62)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김기수(2003) 참고

보인다. 따라서 김기수(2003)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쌍무적, 국지적, 혹은 지역적 FTA 체결 움직임에 미국이 반대할 명분은 애당초 약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

지역주의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입장은 최근 매우 확고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국 USTR의 Zoellick 대표의 말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4월 태국 방콕의 기자회견에서 그가 강조한 것은 미국이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완성을 위해 선호하는 특정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⁶³⁾ 그는 모든 나라가 ‘다양한 수준에서(on multiple levels)’ ‘다양한 방법으로(in multiple ways)’ 자유무역을 확산시켜 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그 다양성이 쌍무주의나 지역주의적 경제통합 방식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는 또한 ASEAN 국가들을 예로 들 경우, 미국은 그들이 중국과 일본 등 개별 지역 국가들과의 쌍무적 자유무역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끼리만의 AFTA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어느 것이든 그것은 자유무역체제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며, 미국으로서도 동아시아국가들이 그렇게 FTA를 역내에 확대시켜 갈 때 그 나라들과 별도의 FTA를 체결해감으로써 확대일로의 자유무역 기회를 동일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2002년 11월 Zoellick은 미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국은 다양한 수준에서 동시에 (자유무역체제의 확산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 쌍무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⁶⁴⁾

미국의 반대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큰 이유는 좀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1997년을 기점으로 하는 소위 동

63) Excerpts: USTR Reports on Free Trade Agreements in Southeast Asia(Zoellick’s April 5, 2002 Press Conference in Bangkok, Thailand)
(<http://usembassy-australia.state.gov/hyper/2002/0408/epf110.htm>)

64) Transcript: “Zoellick Hoping for More Asian Free Trade Agreements,”
(<http://usembassy-australia.state.gov/hyper/2002/1120/epf312.htm>)

아시아 금융위기까지이다. 문제는 한마디로 동아시아국가들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을 때 당시 다자주의와 혹은 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APEC이라는 광역 지역주의만을 강조했던 미국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은 전혀 두드러지지 않았고,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IMF의 개입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APEC은 무력한 기구에 불과했음이 판명되었다.

결국 동아시아국가들은 IMF와 같은 다자주의 체제와 APEC과 같은 역외국가 주도의 광역 지역체제를 대치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자신들만의 지역주의 구축에서 찾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 확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연계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동아시아국가들은 선·후진국 차별 없이 거의 모두 이 지역에도 NAFTA 수준에 해당하는 지역경제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게 되었다.⁶⁵⁾ 이러한 동아시아국가들의 자구책으로서의 지역주의 발전 움직임에 위기시의 방관자임이 드러난 역외 국가 미국이 반대하고 나설 명분은 매우 약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사실상 방기해 놓았던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동아시아국가들의 변화를 반대하거나 제지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목격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활발한 지역주의 움직임이 대부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진행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과거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상당한 장애물이던 미국의 반대가 그 시기 이후 감소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일 수도 있다. 1990년과 1991년 미국의 반대로 구체화 작업이 무산되었던 EAEG와 EAEC가 그 구성 국가들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1997년 이후 ASEAN+3을 통해 거듭 발전하고 있음은 좋은 예에 해당될 것이다.

이상에서 미국이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를 적극 반대할 명분은 적어도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안보이슈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특히 만약

65) 이에 대해서는 송은희(2002) 참고

미국이 중국을 아직도 잠재적 위협국가로 파악하는 것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이 포함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특히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연대를 맺게 되는 한·중·일 FTA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부시 행정부의 초기 대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일본을 가까이 하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팽창 일로에 있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할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이 심대하게 손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이었다. 이러한 초기 부시 행정부의 대중국관이 여전하다면,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중국이 군사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급성장하는 것을 차단하길 원할 것이며,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될 한·중·일 FTA를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진전을 저지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을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격리시키길 원할 것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 및 일본과의 안보동맹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 역시 미국을 의식하여 자신들의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즉 중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미국이 안보문제와 관련 한·중·일 FTA 등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상당 부분 미국의 대중국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미국은 현재 중국을 어떠한 국가로 파악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진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개입되며, 그 중에서 대략적이거나 분석이 가능한 변수란 고작해야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미국의 최근 입장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역내 국가들 간 경제협력체 형성의 움직임에 대하여 큰 반대를 표명하는 일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가 FTA를 체결했을 때, 중국과 ASEAN이 FTA 공식 협상 개시에 합의했을 때, 한국과 일본이 FTA를 위한 공식 협상의 조기 개최에 합의했을 때, 그리고 ASEAN+3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을 때 미국의 반대는 전혀 목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적어도 미국의 공식입장은 위에서 본 흑묘백묘론의 맥락에서 그것이 자유무역체제의 확산에 도움이 되는 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에 대하여 찬성과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미국 USTR의 Zoellick 대표가 ASEAN 국가들의 대중 혹은 대일 FTA 체결 움직임에 대해서 또는 그들만의 AFTA 강화 노력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것은 상기한 대로다. 특히 그가 2002년 11월 중국과 ASEAN이 향후 10년 이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한 중·ASEAN FTA에도 미국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이었다.⁶⁶⁾ Zoellick이 밝힌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인 Schriver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2003년 3월 미 상원 외교 상임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 출석한 그는 중국은 이미 ASEAN과의 FTA 체결에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는 그에 더하여 한국 및 일본과의 FTA 체결 문제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활발한 지역주의 참여 움직임을 ‘긍정적인 발전(a positive development)’으로 평가한다고 진술했다.⁶⁷⁾

상기 발언의 또 다른 의미는 중·ASEAN FTA에 대한 미국의 태도로

66) Transcript: “Zoellick Hoping for More Asian Free Trade Agreements.”(www.ustr.gov)

67) Randall Schriver의 미 상원 아태소위(Subcommittee on East Asia and the Pacific,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증언(3월 19일)
(<http://www.state.gov/p/eap/rls/rm/2003/18879.htm>)

미루어 보건대, 한·중·일 FTA에 대해서도 역시 미국은 긍정적인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한·중·일 FTA에 대한 반대 가능성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이었다. 하나는 중국 경제론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대 지역경제협력체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영향력의 감소 우려였다. 첫 번째 근거가 중·ASEAN FTA에 대한 미국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이제 더 이상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면, 두 번째의 근거도 역시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한·중·일 FTA가 자국 경제와 역내 위상에 대한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미국이 반대하리라는 추측도 중·ASEAN FTA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볼 때 상당한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하여 단순한 수용 이상의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큰 이유는 상기했듯 흑묘백묘론의 입장에서 미국 스스로 FTA 확산전략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고, 따라서 동아시아국가들간의 FTA 체결 증가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이제는 미국 스스로 동아시아내 FTA 무대에 진입해 들어와 있는 이상 다른 동아시아국가들끼리만의 배타적 지역주의에는 반대하지만, 역외국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의 지역 경제협력체 형성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경제대상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이 자국의 FTA 확산전략을 전개해야 할 협력대상으로 변하게 된다.

참고로,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의 다양한 발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또 다른 큰 이유는 9·11 테러사건 이후 변화된 미국의 대동아시아, 특히 대중국 외교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부시 행정부의 초기 대아시아 정책의 핵심을 중국 견제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정리한 바 있는 이상현(2003)에 의하면 그러한 미국의 초기 정책은 9.11 테러사건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즉 9·11 이후

미국 외교는 이른바 새로운 전략적 틀(New Strategic Framework)에 따라 과거 적대적이었던 강대국들과 새로운 관계 정립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획기적 변화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전략관계 재정립”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부시 행정부는 중국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는 적어도 “미국의 반테러전략이 지속되는 한… 전략적 경쟁자라기보다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성격이 더 커보인다”는 그의 평가는 적절하다 할 것이다. 김성철(2003)의 분석도 이와 동일하다. 그는 “부시 정권은 초기에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을 경쟁자로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시사했으나 9·11 테러사건 이후 미·중은 ‘전략적 화해’를 통한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4) 미국 변수의 조절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은 최근 동아시아국가들간의 지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한·중·일 FTA에 대해서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이 안보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설 경우, 한·중·일 3국은(물론 그들이 모두 3국간 FTA의 체결을 원한다면) 그러한 미국의 반대를 극복 혹은 설득할 충분한 능력과 명분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한·중·일 FTA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미국 변수는 조절 가능한 것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적어도 1990년대 말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Bergsten(2000)은 ASEAN+3의 발전 예를 들어 동아시아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의 완성을 향해 계속 전진중에 있다고 평가하며 조만간 이루어질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부상을 예견하고 있다. 그런데 Bergsten

이 암시하는 대로 만약 그 동안도 미국이 줄곧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반대 표명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그만큼(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만큼) 미국변수의 결정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 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반대라는 것이 한·중·일 FTA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주요 변수는 더 이상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국가들은 어쩌면 이제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들만의 미래 대안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이미 상당 정도 축적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다.

아직은 좀 이른 판단일 수도 있겠으나 김성철(2003)은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일본과 중국의 접근,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급성장을 지적하며 어쩌면 이러한 일들이 일본의 미국으로부터의 독자화 움직임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후퇴를 의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참고로, 일본과 중국의 관계 강화는 1998년을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양국은 그해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 간에 과거의 단순한 ‘선린우호’ 관계를 뛰어넘는 ‘21세기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틀을 구축해 갈 것임을 공표했다.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 보장과 경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가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독자노선 추구 경향이 강화되어 가고, 이러한 일본이 중국과의 접근을 지속해 가며, 그리고 그 위에 한국이 합류하여 3국이 단합하기만 한다면(한·중·일 모두 3국간의 경제통합을 원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한·중·일 FTA에 대한 미국 변수의 조절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3국 모두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우선 그렇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미국의 제2·제3의 무역대상국이며, 그들의 달러 보유고와 미국정부채권 보유고는 세계 1·2위를 다투는 정도이다. 한마디로 양국은 미국에 있어 거대 시장이며 거대 자본가인 셈이다. 이들의 영향력을(더구나

일·중이 단합할 경우) 미국이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이 그 동안 동아시아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 때문이었다. 만약 이들이 단합한다면 역내에서 미국이 설 자리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결국 문제는 미국의 반대보다는 동북아 3국이 경제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정도라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 3국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세계 수준에서의 자유무역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다자주의의 전 단계로서 지역주의체제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함으로써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의 완성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중간단계로서의 지역주의가 발전되는 과정 중에서도 배타적 지역주의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즉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미국을 포함한 역외 국가들에 의해 언제나 침투 가능한 지역주의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의 FTA 확산전략과 흑묘백묘론적 입장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러할 때 미국의 태도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여타의 지역주의와 함께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완성을 위한 디딤돌이 됨과 동시에 그 자체가 자유무역 확산의 주요 기폭제가 될 것임을 설명함으로써 미국 스스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에 찬성과 지지를 적극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한·중·일 FTA와 ASEAN 및 동아시아 FTA와의 관계

동아시아 FTA의 건설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01년 11월에 열린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시작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창설을 제의했고 다른 정상들도 그 문제에 대해 협의해 갈 것에 합의하였다. 동북아와 동

남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제도화는 결국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 거의 모든 동아시아국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ASEAN국가들간의 AFTA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향후 동아시아 FTA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건설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 즉 기존의 AFTA에 한·중·일 등의 동북아국가들이 동아시아 FTA의 구축을 목적으로 합류해 가는 형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한·중·일 혹은 동북아 FTA가 따로 결성되고 이것이 나중에 AFTA와 합쳐질 것인가의 문제이다.

1) 선 한·중·일 FTA, 후 동아시아 FTA

상기 문제에 대해서도 앞에서 제시한 소수집단의 우월성 논리를 적용해 본다면 한·중·일 FTA가 먼저 결성되는 쪽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FTA는 아직 그 제도화의 단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협상에 있어서도 ASEAN 국가들은 아직 하나의 단일체라기보다는 개별적 주권국가로서 따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북아국가들이 모두 나서 ASEAN 국가들과 동아시아 FTA 구축 문제를 개별적으로 협상해 간다고 하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대집단의 협력 모색 상황에 가까울 것이며, 따라서 집단행동의 문제는 상당한 정도로 심각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만약 동북아 국가들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먼저 한·중·일 FTA를 체결하고, 그 후에 동아시아 FTA를 추진해 간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동아시아 FTA의 형성과정이 소집단의 협력문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한·중·일 FTA를 체결함으로써 동북아국가들은 적어도 무역 및 투자이슈에 관한 한 자국의 대외 협상력을 하나로 결집해 갈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이러한 결집과정이 일어나는 사이 ASEAN 국가들은 자국의 필요는 물론이고 동북아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AFTA의 제도화 수준을 높여 갈 것으로 보인다. ASEAN의 협상주체로서 단일화 현상이

진전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된다면 결국 동아시아 FTA의 구축이 동북아와 동남아 양 주체간의 협력문제로 근접하게 된다. 최소집단의 협력문제일 뿐이며, 그렇다면 그 성사 가능성은 최고치에 다다를 것이다.⁶⁸⁾

ASEAN 국가들 사이에서도 먼저 자신들의 경제통합 수준을 상당 정도로 끌어올린 후에 동아시아 FTA로 가자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방도가 비교적 높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정도가 개별적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 ASEAN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FTA 체결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산업발전단계가 낮은 후발참여국들은 AFTA를 통한 ASEAN국가들간의 경제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과는 경제력은 물론 산업발전단계에서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동북아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설정에 대한 ASEAN의 기본 시각은 그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실질적인 동아시아 FTA를 논의하기보다는 ASEAN의 주도하에 무역 및 투자 원활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역내 균형성장을 위한 개발협력 확대 및 후발 가입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논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⁹⁾ 그렇다면 이러한 ASEAN의 입장을 감안해서라도 동아시아 FTA로 바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한·중·일 FTA 등과 같은 동북아국가들간의 지역경제협력체 발전에 노력을 경주함이 옳다고 하겠다.

미국의 반대 또한 동아시아 FTA의 조기 구축에 부정적일 수 있는 변수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이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미

68) 참여국의 수뿐만 아니라 국제체제나 문화 및 정서변수 등을 보더라도 이러한 수준이 유리하다는 논의는 최태욱(2002) 참고

69) ASEAN 국가들이 한·중·일에 대해 가지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노재봉(2003) 참고

국의 반대가 이제는 무의미한 변수가 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지역주의의 형태와 방법에 따라 미국의 반대는 그 강도를 달리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그것은 여전히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컨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가 과거 EAEC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이며 배타적일수록 미국의 반대가 강력해지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바이다.

논의를 동아시아 FTA와 한·중·일 FTA로 한정할 경우 미국의 반대는 전자에서 보다 강할 것임이 거의 확실시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미국의 반대는 쌍무적 FTA의 경우에서 가장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두 나라 사이의 FTA 체결을 반대하기는 명분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과 싱가포르가 FTA를 체결할 때도 미국의 반대는 거의 문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FTA가 한·일, 한·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일 FTA 등 3 개의 양자간 FTA를 통해 달성될 경우 역시 미국의 반대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3국간의 동시 협상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한·중·일 FTA는 여전히 국지적 FTA에 불과한 까닭에 전체 동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약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동아시아 FTA의 경우이다. 1990년대 초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가장 큰 우려는 동아시아국가들이 미국을 제외한 자신들만의 FTA를 구축하는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혹은 군사적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한·중·일 3국이 ASEAN과 함께 동아시아 FTA로 바로 가겠다고 한다면, 이는 미국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일이 된다. 그것은 APEC을 통해 동아시아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주의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미국을 자극하여 일을 어렵게 하기보다는 가능한 쌍무적 혹은 국지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동아시아 FTA에 앞서 단계적, 점진적, 순차적 접근에 의한 한·중·일 FTA의 우선 체결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2) 동아시아내 양자간 FTA

그렇다면 한·중·일 3국은 ‘선(先) 한·중·일 FTA, 후(後) 동아시아 FTA’라는 발전 수순을 밟아가는 기간중에 아세안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주지하듯 현재의 양자관계는 ‘ASEAN+3’라는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약체로 이어져 있는데, 위의 발전전략을 택한다 하여 기존의 이 형태를 수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그리고 동남아국가들간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능한 조속하고 체계적으로 성사 혹은 발전되도록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FTA가 순차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탄탄한 기반 구성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최근 체결되었거나 추진 혹은 구상중에 있는 일·싱가포르 FTA, 중·ASEAN FTA, 일·ASEAN FTA 등과 같은 동북아와 동남아국가들간의 개별적 FTA 체결 움직임에는 얼마간 유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대로 동아시아 FTA를 위해서라면 동북아 국가들은 한·중·일 FTA의 체결을 통하여, 그리고 동남아국가들은 기존의 AFTA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우선 각자가 제도적으로 보다 성숙되고 견고한 독립 통합체로 서는 것이 유리한 까닭이다. 그렇게 된 후 동북아와 동남아간 동아시아 FTA가 구축될 때 소집단의 우월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수순 없이 동북아와 동남아국가들간의 양자간 FTA가 무질서하게 양산되어 간다면 그것은 자칫 상기한 대집단 협력 상황으로 전락되어 동아시아 FTA의 추진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⁷⁰⁾

70) 동아시아 역내에 많은 양자간 FTA가 체결될 경우, 그것은 결국 부작용만 초래하고 막상 동아시아 FTA의 추진은 더 어렵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Cheong (2002) 참고

제6장 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 시사점

국제통상협상에서 아무리 대외협상을 잘해서 좋은 협상안을 만들어내더라도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내집단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특히 FTA 협상은 상호 개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에 국민경제 속에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승자집단(winner)과 손해를 보는 패자집단(loser)이 확연히 양분되어 이 이해집단들간의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승자집단은 FTA를 지지하는 사회적 세력(endorse group)으로, 패자집단은 반대세력으로 각종 정치적 시위나 정치권, NGO 등과 연합을 통해 정부의 대외협상과 국내비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장에서는 한·중·일 FTA 추진에 대비한 국내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현실성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⁷¹⁾ 여기서의 논의는 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1. 한·중·일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정책여건 평가

가. 어려운 국내 정책여건

앞으로 한·중·일 FTA가 본격적 협상에 돌입할 경우 국내정책 여건은 한·칠레 FTA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71) 설문조사 개요, 주요 질문사항 및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부록 3>을 참고

1) 패자집단의 강한 정치적 반발

우선 가장 크게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은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패자집단의 반발이다. 조사대상 13개 직종 중 농민단체, 노조지도자, NGO⁷²⁾ 등은 한·중·일 FTA가 한국경제는 물론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패자집단들은 단순히 한·중·일 FTA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한·중·일 FTA 협상을 시작할 때 협상반대를 아주 강하게 제기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 패자집단들은 한·칠레 FTA에 대해 농민단체가 보였던 정치적 시위에서 보듯이 강한 집단행동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2) 정치적 반발집단의 변화

특이한 사실은 강하게 반대할 집단이 한·칠레 FTA 때와 다르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를 중심으로 농민단체가 칠레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반면, 한·중·일 FTA에는 노조와 NGO가 반대투쟁의 선두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FTA에 대해 농민단체의 20%가 부정적 인식을 가진 반면, 노조지도자는 84%, NGO는 93%가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 한·칠레 FTA보다 더 강한 반발과 보상요구 예상

한·중·일 FTA에 찬성 또는 반대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이해단체의 경우 한·칠레 FTA 당시보다 더 반대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72) 다수 NG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민감성으로 인해 단체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함.

노조 지도자와 NGO 종사자의 경우 각각 76%와 80%의 응답자가 3국간 FTA 반대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겠다고 답하였다. 반면 농민단체의 경우에는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겠다는 응답자는 33%에 그쳐 한·칠레 FTA와는 다른 양상을 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패자집단들이 칠레와의 FTA보다 거세게 반발할 뿐만 아니라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보상을 주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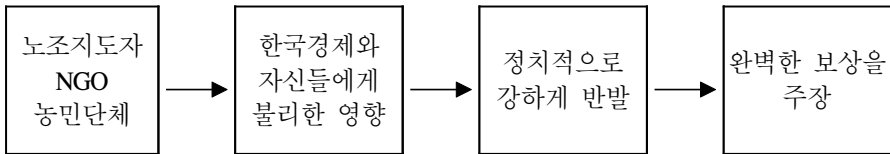
<표 6-1> 한·중·일 FTA의 예상 패자집단의 반발정도

단 체	더 많은 노력 투입	같은 수준의 노력 투입	적은 노력 투입	전체
농민단체	10	12	8	30
	33%	40%	27%	100%
노조 지도자	19	4	2	25
	76%	16%	8%	100%
NGO	24	5	1	30
	80%	17%	3%	100%
전통산업 종사자	12	28	12	52
	23%	54%	23%	100%
전 체	194	179	56	423
	46%	42%	13%	1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한·중·일 FTA에 대해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농민단체의 53%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20%만이 ‘완벽한 보상’을 주장한 반면에, 노조 지도자와 NGO는 각각 4%, 17%만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무려 92%와 72%가 ‘완벽한 보상’을 주장했다.

〈그림 6-1〉 한·중·일 FTA에서 패자집단들의 반응의 특징



이는 앞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 피해보상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경우 과거 한·칠레 FTA 때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보상을 노조, NGO 등이 주장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4) 승자집단과 패자집단간 반응의 비대칭성

“한·중·일 FTA 반대(또는 찬성)를 위해 어느 정도 개인적 노력을 하겠나”는 질문에 대해 노조지도자의 80%, NGO의 67%가 ‘많은 노력’을 들여 반대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반해 승자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경영자의 8%,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의 24%만이 ‘많은 노력’으로 찬성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칠레 FTA의 경우와 같이 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철강, 자동차 등 승자산업인 대기업이 무임승차(*free-riding*)하려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노조 지도자, NGO의 거센 반발에 몰릴 정부를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지지세력 역할을 해야 할 재계가 제역할을 하지 않고 침묵할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정치이슈화 가능성

한·중·일 FTA도 칠레와의 경험에서와 같이 FTA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정치이슈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단체는 물론이고 노조 지도자, NGO, 대기업경영자, 심지어 공무원까지 한·중·일

FTA로 농민단체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는 칠레와의 FTA 추진과정에서 反FTA 그룹이 주장한 정치이슈와 관련이 깊다. ‘FTA = 농민 피해 & 재벌 이익’이라는 슬로건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FTA는 농민에게 손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국가인 일본과의 FTA에서는 한국 농업이 승자산업으로 이익을 볼 것이다. 설사 중국과의 FTA에서 농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한·중·일 FTA를 같이 놓고 본다면 농업부문의 이해득실을 지금 정확히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한·중·일 FTA의 최대 피해자가 농민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 본격적인 협상진행과정에서 ‘한·중·일 FTA = 농민, 노동자, 중소기업 피해 & 재벌 이익’이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쉽게 정치이슈화할 가능성이 크다.

6) 대일 감정적 편견

재미있는 것은 한국 국민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평소 감정이 이 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는 중국보다는 일본에 더 큰 개인적 편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 대해 편견을 가진 응답자는 한·일 FTA 추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일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시에는 FTA 자체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일반적 국민정서 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7) 정부부처간 갈등

한·칠레 FTA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중·일 FTA에도 해당 정부부처간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승자산업을 주관하는 외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과 농업, 수산업 등 패자산업을 주관하

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간에 현저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

두 그룹의 공무원들은 모두 한·중·일 FTA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비슷한 응답을 하였으나 피해 보상수준에 대하여는 이견을 보였다. 외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의 77%가 교육훈련, 사업전환지원 등 비금전적 보상이 옳다고 응답하였다. 설사 금전적 보상을 해주더라도 ‘완벽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에 불과했다. 그러나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반 이상(56%)이 금전적 보상을 꼭 해주어야 하며, 13%가 ‘완벽한 보상’, 4%가 ‘적절한 보상’을 주장하였다.

8) 학력, 소득 수준별 반발

마지막으로 학력, 소득수준과 한·중·일 FTA에 대한 인식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NAFTA에 대한 미국 내 이해집단의 반응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한·중·일 FTA에 긍정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농민이 축을 이루는 저학력, 저소득층이 부정적 견해를 가지는 것은 다른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유리한 국내 정책여건

1) 한·중·일 FTA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가장 유리한 국내 정책여건은 한·중·일 FTA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이다. 응답자의 47%가 한·중·일 FTA가 한국 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며 26%가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부정적’,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각각 20%, 7%에 불과한데 이들 대부분은 노조 지도자와 NGO이다.

또한 응답자의 70%가 현 정부, 늦어도 다음 정권 초까지 한·중·일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물론 여기서도 NGO나 노조 지도자는 각각 37%, 20%가 FTA 체결 자체에 반대하였다. 이는 설사 노조 지도자와 NGO가 반대하더라도 국민 대부분이 FTA에 대해 호응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조속한 체결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사점은 NAFTA 체결시 미국 경험에서 보듯이 효율적 홍보로 국민 다수를 설득하면 소수 반대집단의 반발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2) 승자집단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활동 기대

다음으로 유리한 여건은 한·칠레 FTA 협상시 침묵하던 승자집단, 즉 재계, 경제단체, 공무원들의 한·중·일 FTA에 대한 지지의사가 과거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칠레 FTA와 비교한 찬성 노력’에서 경영자의 59%가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물론 앞으로 실제 협상과정에서 이 승자집단들이 어느 정도 정부를 강하게 지지하고 나설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거 칠레와의 FTA 때보다는 보다 적극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표 6-2> 한·중·일 FTA의 예상 승자집단의 지지 정도

단 체	더 많은 노력 투입	같은 수준의 노력투입	적은 노력 투입	전체
대기업 경영자	12	12	2	26
	46%	46%	8%	100%
외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	15	13	2	30
	50%	43%	7%	100%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19	9	5	30
	63%	30%	17%	100%
전경련, 무역협회	10	5	2	17
	59%	29%	12%	100%
중소기업중앙회, 중진공	6	10	2	18
	33%	56%	11%	1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3) 유연한 보상방법 요구

보상방법에 있어서도 산업계는 농민들보다 유연한 반응을 보였다. 농민단체의 76%가 금전적 보상을 선호한 반면 한·중·일 FTA 체결시 잠재적 패자산업에 속하는 전통산업 종사자의 40%, 중소기업 경영자의 53%가 사업전환 지원과 같은 비금전적 보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치적 반대의식을 가지고 강하게 반발하는 노조 지도자와 NGO 등의 반대를 극복하면 개방으로 실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금전보상 대신 교육훈련, 사업전환 지원과 같은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윈세트(win-set)와 한·중·일 FTA 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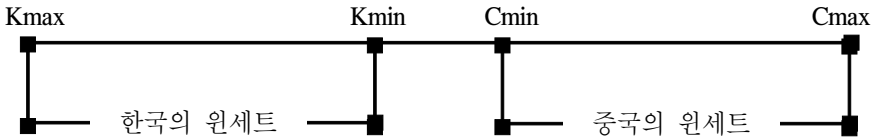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한·중·일 FTA의 어려운 국내 정책여건은 앞으로 정부 협상대표의 윈세트(win-set)를 제약하여 협상 그 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Putnam(1988)에 의하면 윈세트이란 “앞으로 국내 비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1단계 대외협상에서의 모든 가능한 합의안(the set of all possible level I agreement that would win at level II game)”이다. 윈세트의 크기와 대외협상의 용이성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앞의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여건이 어려우면 정부대표의 윈세트가 작아지고, 이는 정부간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게 만들 것이다.

<그림 6-2>에서 보듯이 한국정부와 중국정부가 FTA 협상을 한다고 할 경우 중국의 윈세트는 C_{min} 과 C_{max} 사이이다. 즉 C_{max} 는 중국에게 최대의 협상성과를 가져다 주는 윈세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 유리한 농산물을 모두 포함하고 불리한 기계, 전자 등 모든 공산품을 예외품목으로 FTA

<그림 6-2> FTA 협상시 한국과 중국의 원세트



- Kmax** : 한국의 최대 협상성과를 보장하는 원세트
- Kmin** : 한국의 최소 협상성과를 보장하는 원세트
- Cmax** : 중국의 최대 협상성과를 보장하는 원세트
- Cmin** : 중국의 최소 협상성과를 보장하는 원세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Cmax**는 당연히 중국 내부참여자의 승인이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Cmin**은 중국에 최소의 협상성과를 가져다 주는 원세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 농산물에서 중국의 수출실적이 별로 없는 고기능성 쌀만, 공산품에서는 전자만 예외품목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따라서 **Cmin**은 중국정부가 가까스로 국내 비준이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원세트이다. 대외협상에서 **Cmin** 이상으로 양보하면 국내 비준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최대 양보점, 즉 저항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작은 원세트, 즉 **Kmax-Kmin**의 원세트를 가지고 중국정부와 협상한다고 하자. **Kmax**는 한국에 불리한 농산물을 모두 예외품목으로 인정하고 공산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Kmin**은 농산물 중에서는 쌀, 마늘을, 공산품 중에서는 기계만 예외품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원세트 **Cmax-Cmin**과 한국의 원세트 **kmax-Kmin**은 겹치지 않아 양국정부간 FTA 협상은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중·일 FTA가 타결되기 위해서는 농산물 중에서 마늘을 FTA 대상에 포함하고 중국이 원하는 전자를 예외품목으로 인정해 주어

야 한국의 원세트가 확대되어 정부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한·중 마늘협상에서 보듯이 국내 4대 작물에 속하는 마늘시장 개방에 대해 농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이는 곧바로 대중국 협상에서 한국정부의 원세트를 제약하여 결과적으로 정부간 협상을 상당히 교착상태에 빠뜨릴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본격화될 FTA에 대한 정부협상에서 합의 가능한 원세트를 각국 정부대표가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내 정책시사점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이에 따르는 각국 경제의 상호의존성 증대로 주요 무역파트너와의 경제협력 심화는 향후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한·중·일 FTA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일 FTA에 대한 대내외적인 장애요인도 적지 않으므로, 이 FTA는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 대미국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동북아에 위치한 한국의 지역경제협력정책은 향후 동북아 경제성장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보완적인 산업 및 무역구조 구축에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경제의 회복 가속화와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 지속으로 특징지어질 향후 세계경제 환경하에서 한국은 미국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 심화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방향 수립이 중요하며, FTA 정책도 이러한 틀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5장 2절 나항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비록 미국이 동아시아국가들의 지역주의 형성에 반대

할 명분이 약하더라도, 과거 EAEG 경우처럼 동아시아내 대규모 경제협력체 구축을 반대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은 동북아와 높은 군사 및 안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내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표면적인 지지입장과는 달리, 군사적 대치관계에 있는 중국이 포함된 FTA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다.⁷³⁾ 따라서 FTA 추진과 관련하여 한·중·일 3국은 미국과의 경제 및 정치, 외교적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FTA 정책 방향은 동북아 FTA를 추진하면서 동아시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FTA의 주도세력(core force)을 형성해 나가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은 한·미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을 양국간 FTA 추진의 사전조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제적 실익 확보와 한·미 FTA 추진을 위해 조속한 기간 내에 양국간 BIT를 체결해야 할 것이다.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한국정부는 한·중·일 FTA를 추진해 감에 있어 그 자체가 대외경제정책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장기적으로 이루어 내야 할 세계적 차원의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체제의 완성에 기여하는 비교적 초기 단계의 정책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 기반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 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의 높은 무역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역내 무역활성화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자체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FTA의 다음 단계 목표는 순차적으로 AFTA와의 협력으로 가능

73) 한편 부시 미 대통령은 2002년 10월 멕시코 Los Cabos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The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AEI) 제안하였는데, 이 제안은 중국의 FTA 추진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됨.

할 동아시아 FTA의 창설, 그리고 나서 APEC이나 ASEM 혹은 다른 형태의 지역간 경제협력체의 완성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한·중·일 FTA는 최종 목표인 다자주의체제의 완성뿐만 아니라 그 직후 단계인 동아시아 FTA와 지역간 경제협력체의 건설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수순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을 펼쳐갈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할 때 중국 및 일본과의 협력 및 통합과정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며, 특히 미국과의 FTA를 포함한 통상관계도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바라는 바도 결국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SEAN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AFTA가 제도적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그 후 한·중·일 FTA와 연계하여 동아시아 FTA의 건설을 완성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여 한·중·일 FT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그들의 협력 역시 적극적으로 확보해내야 할 것이다. 당장 한·중·일 FTA를 직접 추진하기가 어려워 한·일 FTA가 먼저 추진된다 할지라도 한국 정부의 이러한 의도가 중국 및 일본정부에 충분히 전달된다면 앞서 추진되는 한·일 FTA도 결국은 한·중·일 FTA로 가는 중간 단계로 인정받게 되어 추후의 수순을 밝아감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정부는 일본 및 중국정부와 상기한 장기 계획을 놓고 끊임없는 대화와 논의를 유지하여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장기적으로 돈독히 하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러한 의제를 논의하는 최적의 회의가 될 수 있다.

다. 한·중·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한·중·일 FTA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협력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제들은 한·중·일 FTA의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이 언제 시작되느냐에 상관없이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 한·중·일 3국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중·일 3국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건만 조성된다면 언제라도 순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 주체가 반드시 정부이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즉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며, 이는 한·중·일 FTA와 그 이후 더욱 진전된 경제통합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FTA 또는 그 이상의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데 있어 어느 한 국가나 집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급적 모든 국가가 높은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중국과 일본간 대립관계 등 현실적인 측면으로 볼 때 한국이 3국간 FTA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리히텐슈타인 등 소국들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통합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통합을 실현한 지역에 비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통합이 지연된다면 그것은 한국과 한국인만이라기보다는 지역 전체의 손실이 될 것이다.

경제통합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이를 위한 환경이 서서히 조성되고, 정치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가시적인 진전을 보게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3국간 경제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FTA이든 그 이외의 어떤 것이든 동북아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여러 계층에서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무역원활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통관제도의 조화 및 선진화 등 비관세장벽의 개선은 수출입업자 등 상품통관과 관계된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과 연계된 문제로서 지역의 경제발전 및 후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역이 확대되면 해당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 그밖에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협력방안인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의 조화, 산업구조 조정 공조, 에너지·환경 협력, 인터넷·정보통신 협력, 중국과 일본간 대결구도의 완화, 남북한 긴장의 완화, 사회·문화교류의 확대 등은 동북아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함으로써 동북아인 공통의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일부 노동단체와 농민단체를 비롯한 각종 NGO들을 중심으로 시장개방의 확대가 마치 서구자본주의에 의한 신제국주의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양상이다.⁷⁴⁾ 한·중·일 3국의 국민들은 역내 경제통합이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FTA의 논의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라. FTA 홍보 강화

범세계적 지역주의 심화 추세와 그 빠른 확산으로 볼 때 한국이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FTA 정책에 대한 국내적 컨센서스의 획득이 선결요건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칠레와의 FTA 비준을 위해 농업분야 구조조정 및 피해보상을 위한 『FTA 이행특별법』을 포함한 정부의 4대 농업입법⁷⁵⁾ 및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과 투융자사업⁷⁶⁾ 등을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 경

74) 본 보고서는 연구진의 생각을 담은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연구가 축적되면, 무역자유화 및 경제제도 선진화의 이익, 개방과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임.

75) 정부는 2003년 하반기에 한·칠레 FTA 지원, 농특세 기한 연장, 농어가 부채의 획기적 경감을 추진하는 특별법, 농어촌 복지지원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76) 2003년 11월 11일 정부는 2003년 말까지 농업발전과 농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119조 원의 농업분야 투융자계획을 밝혔음.

제의 가장 취약한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며, 현재 농업인의 총소득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소득이 일본과 같이 30%로 낮아질 수 있도록 농업외소득원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한·칠레 FTA 협정을 조속하게 비준·발효시킴으로써 FTA 정책의 국내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FTA의 필요성 홍보에는 언론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언론인에 대한 FTA 정책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체결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제조업체들도 FTA 추진정책에 대한 지지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이다.

NAFTA 추진시 미국의 국내비준 과정을 살펴보면, FTA 추진에 정부의 대국민홍보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노조, 환경단체 등 패자집단의 반발을 무마하기보다는 적극적인 국민홍보를 통해 'NAFTA 불가피론'을 만드는 데 주력하였다. 이는 정치적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국내 패자집단을 피해보상 등으로 설득하여 FTA를 추진하기보다는 'FTA 불가피론'을 통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이 패자집단들의 반발을 약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한·중·일 FTA가 본격적인 협상단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꾸준히 한·중·일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특히 'FTA는 농민의 피해다'라고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FTA하의 무역자유화는 관세 부담없이 수입된 물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을 향상시키고,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값싸고 질 좋은 물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며, 국내 경제체도를 개혁하는 계기로 활용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정부 또한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칠레와의 FTA 협상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한국 정부는 농업분야의

개방이 최소화되도록 했으며, 농산물 수입 급증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일명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하였다. 또한 『FTA이행 특별법』과 같은 보완조치를 통해 농업분야 지원을 강화하였다.

클린턴 대통령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경우에도 살리나스 대통령이 TV에서 여러 번에 걸쳐 NAFTA의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NAFTA 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멕시코의 경우,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이해를 조정하는 산업무역조정기구(COECE)를 신설하여 민간부문의 이해와 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하였으며, 민간부문도 통상협상시 자국 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토론회를 조직하고 작업반을 구성하여 산업별 공동입장을 발표하였다. 한국 업계도 멕시코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측에 업계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6-3> 국민 또는 국내집단이 FTA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항

잘못 알고 있는 사항	객관적인 사실(홍보 착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최대 희생자는 농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FTA 체결시 농민이 최대의 수혜자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농민 희생 & 재벌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칠레 FTA의 경우 다소 그런 영향이 있으나 FTA의 효과는 국민경제 전체를 보아야 함. ■ 한·일 FTA = 농민 수혜 & 일부 재벌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단체나 노조, NGO, 소비자단체 등의 연대 투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단체는 FTA의 최대 수혜자임. ■ 엄밀한 의미에서 소비자단체, 노조 등은 FTA의 경제적 이익을 보기에 지지그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FTA 전담인력과 협상조직도 보강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USTR과 같은 KTR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통상조직과 외교조직의 혼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FTA는 중요한 외교정책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며, 군사동맹을 대체하는 협력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FTA 정책은 성격상 특히 정치적인 합의가 크며, 정치외교적인 고려가 가미되지 않은 채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FTA 정책은 궁극적인 국가이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체결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ASEAN 국가들과의 FTA도 외교적인 기준으로 상대국을 선별하였다. 중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ASEAN과의 FTA, 동북아 경제통합 구상도 그 기저에는 정치외교적 고려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FTA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상교섭본부내 FTA 전담인력을 확대·개편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통상교섭본부내 다자통상협력과 하나로는 2004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한·일 FTA와 한·싱가포르 FTA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중·일 FTA 추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통상교섭본부내에 FTA 전담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고, 상대국의 반응을 탐색하며, 협상단계에서는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상대국 입장 및 협상 대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활용을 위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FTA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보면 통상교섭본부내 FTA 전담인력의 공관근무를 FTA 추진대상국 위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상교섭본부내 전문인력을 지역과 기능을 중심으로 매트릭스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인력 활용을 효율화하며, 각 분야별로 민간전문가풀을 구성하는 등 국내 민관의 협상 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농림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FTA 정책 전문인력도 보장되어야 한다. 2003년에 산업자원부는 FTA 관련 정책을 총괄할 FTA팀을 창설하였으나, 팀장 외 2명의 팀원이 배정된 상태이다. 2003년 말부터 시작될 일본과의 FTA는 한국 제조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데 비해, 제조업 전체 입장에서 협상을 준비할 전담인력은 너무 부족

하다. 따라서 관련 부처들은 FTA 전담인력의 육성과 아울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이라도 추가 배정할 필요가 있다.

바. FTA 비판그룹에 대한 대응

FTA가 개방으로 손실을 입는 계층과 이익을 보는 계층을 양분시킬 수 있어 정치적 리더십이 FTA 추진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 집권 초기 정치전문가들은 “NAFTA가 클린턴 대통령 재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NAFTA 체결시 클린턴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중산층, 그리고 노조의 반발이라는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NAFTA를 성사시켰다.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한·중·일 FTA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2%가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정치적 리더십’을 지적하였다.

<표 6-4>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소

순위	요 소	비중
1	정부의 충분한 보상	53%
2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	32%
3	관련 부처의 적극적 추진	6%
4	이해단체의 강력한 반대가 있으면 불가	8%

자료: 설문조사 결과

한·칠레 FTA와 달리 농업,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엄청난 충격이 예상되는 한·중·일 FTA 추진은 ‘대통령’의 굳은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며,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만 한·중·일 FTA 추진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운 국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NAFTA 체결을 위

해 백악관에 ‘Task Force’ 팀을 마련하여 국내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이해집단의 반발을 최소화하였다.

한·중·일 FTA 비판그룹의 반발을 극복하는 길은 비판그룹을 직접 설득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법과 지지그룹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정부를 지원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실적으로 NGO 등과 정치적으로 연대투쟁하고 있는 비판그룹을 직접 설득하는 것을 쉽지 않을 뿐더러 피해그룹이 만족할 만큼의 보상을 해주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심한 경우 과도한 경제적 보상은 한·중·일 FTA로부터 얻는 경제적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지그룹으로 하여금 FTA에 대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비판그룹의 정치적 영향력을 희석시키는 방법이 차선책이라 하겠다. 또한 무임승차의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재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FTA 지지그룹의 역할을 해주어야만 한다. 참고로 미국 NAFTA의 경우, 미 재계는 FTA에 반대하는 의원과 찬성하는 의원에 대해 차별적으로 정치헌금을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6-5> NAFTA시 미 재계의 정치헌금

주요 내용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NAFTA를 지지하고 이의 출범을 위해 결정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 세력은 미 재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재계는 정치헌금을 통해 의회내 친NAFTA의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미 하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215명이 그들의 정치헌금의 30% 이상을 재계로부터 받았음. - 반면 단체 34명의 하원의원만이 정치헌금의 30% 이상을 노조에서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로부터 정치헌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의원은 반NAFTA - 민주당 의원(전체 헌금의 20.7%)이며, 재계로부터 정치헌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의원은 친NAFTA - 공화당 의원(전체 34.7%)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를 들어 친NAFTA - 민주당 의원은 전체 정치헌금의 33.2%를 재계로부터 받은 반면, 노조로부터는 12.1%만 받음.

사. 취약산업의 산업구조 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한·중·일 FTA는 한·칠레 FTA와 달리 패자산업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구조조정과 피해보상은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한·칠레 FTA의 경우 농업이 최대의 패자산업이지만 일본, 중국과의 FTA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자제품, 기계산업 등 다양한 계층과 산업이 패자산업이 된다. 따라서 한·중·일 FTA에서는 한·칠레 FTA와 같이 농업을 위주로 한 특별법 보다는 국내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지원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중·일 FTA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과 보상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한·중·일 FTA 협상은 국내산업 구조조정정책 및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 및 일본과의 FTA는 사실상 한국 산업이 필요한 구조조정의 대부분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자체제하의 무역자유화와 연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발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동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을 위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한·중·일 FTA 관세양허협상 및 산업구조 조정 방향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FTA에는 칠레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농업부문의 충격이 있을 것이므로 WTO, DDA 농산물 개방과 양자간 농업개방의 큰 틀 속에서 개방에 따르는 국내 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3년 1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농업정책방향은 농업분야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119조 원의 자금을 농업분야에 투융자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농업지원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비효율적인 투자, 사후 관리기능의 부재,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세한 이행계획과 세심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의 FTA에는 자동차 및 부품, 전자부품, 기계분야에서의 큰 개방충격이 예상되는데, 이 분야들의 중소기업, 노동자 등에 대한 사업전환, 직업훈련, 구조조정 지원 등의 제도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일 FTA로 인한 대일 무역적자 심화문제도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일본과의 FTA에서는 양국간 FTA가 향후 추진될 한·중·일 및 동아시아 FTA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농업분야를 포함한 전 부문의 개방과 아울러, 서비스와 투자, 통상제도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FTA’가 되도록 협상 초기부터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적절한 보상수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FTA 피해그룹에 대해 ‘정치적 보상’이 아닌 ‘합리적 차원’의 보상(side-pay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보상이란 함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또는 선거서 무마용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비판그룹에 대한 과도한 금전적 보상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중 마늘협상시 마늘농가에 대한 1조 8천억 원을 지원한 것은 정치적 보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합리적 보상이란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FTA로부터 피해를 볼 내부집단에 대해 그 예상 피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표 6-6〉 피해집단에 대한 보상책

보상책	특 징
직접적 보상	피해집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금전이나 금융자산 등으로 보상
간접적 보상	피해집단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생산비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피해집단 보상
교차 보상	개혁과 별로 관계가 없는 집단에 혜택을 줌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함.
배타적 보상(면제)	정치적으로 강한 집단에 대하여 개혁으로부터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함.
정치적 보상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을 정부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향후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암시

자료: Edwards and Lederman(1998)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방법은 가능하면 간접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금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 공동사용시설 제공, 직업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사업 전환 및 작목 전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Putnam(1988)은 합리적 보상보다도 한계집단의 지지그룹화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 FTA 체결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상책이 FTA 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피해집단에 대해 보상을 해줄 때 FTA로부터의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FTA 체결을 가능케 하는 수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보상의 재원은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민. 2002. 『동북아 지역경제권의 형성과 기업간 협력방안』. 한국경제연구원.
- 김기수. 2003. 『자유무역협정의 전략적 평가: 한국의 정책기조를 위한 제언』. 세종연구소 정책보고서, 2003-02.
- 김성철. 1999. 「통일한국의 경제외교: 「親美入亞」와 한·일·중 경제협력체 구상」. 이태환 편.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전망과 대책』. 성남: 세종연구소.
- _____. 2003. 「미·중·일관계와 일본외교」. 김성철 편. 『미·중·일관계와 동북아 질서』. 성남: 세종연구소.
- 김세원. 2003. 「동북아 경제통합의 비전과 과제 - 유럽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호.
- 김창남. 2003. 「동북아시아 경제발전과 경제협력 구도」. 장정모·김창남·오용석 외 공저 『신 동북아 경제론』. 서울: FKI 미디어.
- 노재봉. 2003.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전개와 한국의 선택」. 200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 류지철. 2003. 「동북아 에너지 협력」.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연구』. Workshop 결과 보고서. 경제사회연구원.
- 문우식. 2003. 『유럽의 경제통합과 동북아협력에의 시사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박인원. 2003.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설립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은행 『경제분석』, 제9권 1호.
- 박홍규. 2003. 「EU 확대의 의미와 평가-동유럽권 확대를 중심으로」. 『주요국 제문제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 손병해. 1992. 『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손 열. 1999. 「시장개방은 자유화인가?: 일본의 건설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31권.
- 송은희. 2002. 「동북아 지역협력으로서 한·중·일 FTA 모색과 전망」. 『한국동북아 논총』. 23.
- 신현수·이원복. 2003. 「한·중·일 제조업 경쟁력의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 오용석. 1996. 「동북아 경제협력의 물결모형」. 『북방경제연구』, 제7호.
- _____. 2002. 「한·일·중 FTA의 당위성과 동북아 변수」. 『동북아경제연구』, 제14권

3호.

- 오웅탁·정인교. 1998.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의 지역주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9권 2호.
- 이 근. 2002. 「(동북)아시아 지역주의 형성과 스포츠 교류: 한, 일의 역할」. 국제정치학회 발표 논문.
- 이상현. 2003. 「미국의 대중 및 대일 정책과 동북아질서」. 김성철 편. 『미중일관계와 동북아질서』. 성남: 세종연구소.
- 이흥배·岡本信廣. 2002.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 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일본중화학공업통신사. 2001. 『아시아의 석유화학 공업』.
- 정갑영 외. 1998. 「동북아의 신경제질서와 중국의 변화」. 『동북아경제연구』, 제10권 제1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정보통신 통계지표집』.
- 정인교. 1998. 「지역주의의 확산과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FTA 정책방향) 발표(12월 17일).
- _____. 2001.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정책연구 01-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1.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01-02, pp. 99~1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2.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2.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안보연구원 공동 주최 세미나(한일 FTA의 득실과 우리의 대응), 발표자료, 6월.
- _____. 2003. 「한·중·일 FTA 연구」. 경제사회연구회(편)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연구』.
- _____. 외. 1999.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정책연구 99-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방호경. 2003. 「발리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사항과 의의: FTA를 중심으로」. 『KIEP 세계경제』, 11월호.
- _____. ·이경희. 2000.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 0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용균. 2001. 「중국 WTO 가입의 정치 경제적 영향」.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

연구원.

- 최창규. 1996. 「동아시아경제블록의 가능성 검토」. 『경제분석』, 제2권 3호. 한국은행.
- 최태욱. 2000. 「일본의 부상과 국제공공재에 관한 고찰: 동아시아 약소국의 시각에서」. 『평화논총』, 4권 1호.
- _____. 2002. 「지역주의의 제도화에 끼치는 국내정치변수의 영향력: 동아시아 중심의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8권 3호.
- 한국무역협회. 2003. 「중국 시장에서의 한·대일 경합 동향 분석」. 해외조사팀.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2. 『정보통신 산업통계연보』.
- Claire, Michael. 2003. 『자원의 지배: 문명충돌의 시대에서 자원충돌의 시대로』. 김태유·허은영 옮김. 서울: 세종연구원.
- 日本經濟新聞社. 2002. 『日本の自由貿易協定(FTA) 戦略』. 東京.
- 日本總理官邸. 2003. 「小泉內閣メールマガジン」. (www.kantei.go.jp). 제115호.
- 關志雄. 2003. 「なぜ日中FTAが必要なのかー補完關係を發揮するためにー」. 東アジア經濟圈 國際シンポジウム(開催: 早稻田大學現在中國總合研究所). 11月.
- 中北徹. 2002. 「FTAと日本經濟の再編成」. 浦田秀次郎・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編 『日本のFTA戦略』,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第5章.
- 小川雄平. 2000. 「日韓自由貿易地域構想と 東アジア地中海經濟圈」. 『西南學院大學商學論集』, 46(3・4).
- 江小涓. 2002. 「我國對外投資和中國跨國公司的成長: ‘十五’期間的趨勢和戰略」. 『經濟研究參考』, 北京, 第73기(총 제1,649기). pp. 19~31.
- 高孔廉. 2002. 「兩岸經貿整合的起點 - 自由貿易區」. 『國政研究報告』, 臺北. 國安(研) 091-003號. 6월 30일. (www.npf.org.tw/PUBLICATION/NS/091/NS-R-091-003.htm).
- 國務院發展研究中心. 2002. 「區域經濟一體化背景下的中日韓經濟合作」. 『DRC調查研究報告』, 第22號.
- 徐長文·李光輝·李偉·張威·宋志勇·王灤·黃銳. 2002. 「建立中日韓自由貿易區 全景分析」. 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編). 『2002年 形勢與熱點』:151-192.
- 小川雄平. 2000. 「日韓自由貿易地域構想と‘東アジア地中海經濟圈」. 『西南學院大學商學論集』, 46(3・4).
- 安莫榮. 2000. 「2000年全球和中國就業形勢展望」. 『中國勞動』, 第3期: p. 6. 北京
- 楊帆. 2000. 「持續發展中國經濟的四大戰略措施」. 『戰略與管理』, 第6期: pp. 96~99. 北京.
- 李善同·侯永志·翟凡. 2003. 「未來50年中國經濟增長的潛力和豫測」. 『經濟研究參考』,

- 제2期(총 제 1,674期). pp. 53~59.
- 李善同·翟凡·侯永志. 2000. 「中國經濟增長的前景」, 王夢奎 主編. 『中國2020: 目標, 政策與前景』. 北京: 中國發展出版社. pp. 18~31.
- 劉昌黎. 2001. 「日韓自由貿易區對我國的影響及對策」. 『世界經濟』 제11기. 북경.
- 李英明. 1996. 『中共研究方法論』. pp. 27~32. 臺北: 揚智文化出版社.
- 日本經濟新聞社. 2002. 『日本の自由貿易協定(FTA)戰略』.
- 中北徹. 2002. 「FTAと日本經濟の再編成」. 浦田秀次郎·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編 『日本のFTA戰略』,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 趙晉平. 2003. 「從推進FTA起步-我國參與區域經濟合作的新途徑」. 『國際貿易』(월간). 베이징. 2003년 제6기.
- 武心波. 2002. 「全球化與中美關係戰略基礎的重構」. 『外貿經濟·國際貿易』. 베이징. 2002년 제12기.
- 陳文敬. 2003. 「面臨歷史機優的中韓經貿合作」. 『한·중 중장기경제협력 공동연구회 중간토론회 자료집』.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부자료. 9월 2일.
- 黃欽勇. 2001. 「因應兩岸分工角色變化之臺灣新興產業發展策略 - 以電子業為例」. 『國政研究報告』. 臺北: 科經(研) 090-31號.
(www.npf.org.tw/PUBLICATION/TE/090/TE-R-090-013.htm).
- Abbott, Frederick M. 2000. "NAFTA and the Legalization of World Politics: A Case Stud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4, No. 3, Summer, pp. 519-547.
- Almon, Klopfer. et al. 1990. "Industrial Effects of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Mexico and the US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NTIS No. PB 91-110627.
-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February 1991. *U.S.-Mexico Free Trade: Exploring Both Sides*. Washington, D.C.
- Axelrod, Robert and Robert Keohane. 1985.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World Politics*, vol. 38, no. 1.
- Baldwin, Richard E. 2002. "Asian Regionalism: Promises and Pitfalls." Presented at the KIEP Seminar on 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 held in Seoul, Korea, 27 September.
- Bergsten, Fred. 2000. "Toward a Tripartite World." *Economist*, July 15.
- Bhagwati Jagdish. 1996. "The WTO's Agenda: Environment, Labor Standards, Competition Policy and the Question of Regionalism." In *The Multilater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Challenges Ahead*. pp. 15-80.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 Bhagwati, J. 1993.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n Overview." In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Edited by J. de Melo and A. Panagariy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oz, Allen and Hamilton. 1997. "Korea Report". Booz Allen Hamilton Inc.
- Bovard, James. 1991. *The Fair Trade Fraud: How Congress Pilages the Consumer and Decimates American Competitiveness*. New York: St. Martins Press.
- Brown, Drusilla K. 1992. "The Impact of a 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s." *Assessing the Impact of North American Free Trade*. Edited by. Nora Lustig, Barry P. Bosworth, and Robert Z. Lawrence.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pp. 26-68.
- Business Week. 1994. "What Has NAFTA Wrought? Plenty of Trade?" pp. 48-49. November 21.
- Cao, Shi Gong. 2002. "Progress of China-ASEAN FTA and China's Position." Presented at 2002 International Forum on Northeast Asia Trade Policy Cooperation. Nanjing, China.
- Caves, R. 1982.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Economic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Cheong, Inkyo. 2002.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KIEP Policy Analysis 02-20. KIEP.
- _____. 2003. "Prerequisites, Economic Effects and the Environment for a China · Japan · Korea FTA." Presented at Trilateral Joint Research Seminar held in Tokyo. August.
- _____. and Yunjong Wang. 1999.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KIEP Working Paper 99-03.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Chirathivat, Suthiphand. 2002. "ASEAN-China Free Trade Area: Background, Implications and Future Development."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13, Issue 5. September-October. pp. 671-686.
- Cho, Yong-Kyun. 2001. "Economic Aspects of Globalization: Challenges and Responses." In *Globalization and Regional Responses*.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IFANS).
- Conybeare, John. 1984. "Public Goods, Prisoners' Dilemmas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8. pp. 5-22.
- Edwards, Sebastian and Daniel Lederman. 1998. "The Political Economy of Un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The Case of Chile." NBER Working Paper Series #6510.

- Fitzgerald, Sara J. 2001. "The Effects of NAFTA on Exports, Jobs, and the Environment: Myth vs. Reality." *Backgrounder*. The Heritage Foundation. Washington, D.C. No. 1462. August 1.
- Fortgang, R. 2000. "Taking Stock: An Analysis of Negotiation Pedagogy across Four Professional Fields." *Negotiation Journal*. October.
- Frederick, Jim. 2002. "Going Nowhere Fast - Yes, Japan has broken banks and crummy companies. But real problem is unproductive workers." *Time Asia*. December 9.
- Freund, Caroline. 2000. "Different Paths to Free Trade: The Gains from Regional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5, No. 4. November 1. pp. 1317-1341.
- Gabriel A. Almond and G. Bringham Powell, Jr. 1978. *Comparative Politics: System Process and Policy*. Bpston, Mass.: Little, Brown & Co.
- Garnaut, Ross and Peter Drysdale. 1994. *Asia Pacific regionalism: Readings i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Harper Educational in association with The Australia-Japan Research Centre. Canberra.
- Global Insight DRI-WEPA. 2003. *World Overview*. March.
-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GTAP). 2001. (www.gtap.agecon.purdue.edu).
- Gruben, William C. 1992. "North American Free Trade: Opportunities and Pitfalls." *Contemporary Policy Issues*, Vol. 10, No. 4. pp. 1-10.
- Grunberg, Isabelle and Khan, Sarbuland(ed.). 2000. *Globalization: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Dialogue*.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 Hai, Wen and Zhang X. 2000. "A Bilateral FTA or a Trilateral FTA?" Paper for the 2001 KIEP/NEAEF Conference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onolulu, Hawaii.
- Holmes, Leslie. 1997. *Post-communism - An Introduction*. pp. 22~62, 117~122. Cambridge: Polity Press.
- Hu, Angang. 2001. "Proposition for Setting Up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China, Hong Kong, Japan and Korea". Peking: Center for China Stud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and Tsinghua University. Unpublished Manuscript.
- Hufbauer, Gary Clyde, and Jeffery J. Schott. 1992. *North American Free Trade: Issues and Recommendation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IMF. 2003.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June.
- _____. 2003. *Balance of Payment Statistics*. April.
- _____. 2003.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April.

- _____. 2003.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 Isaak, Robert A. 2000. *Managing World Economic Chang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3rd ed. Prentice Hall
- Jain, Subhash C. 1999. "Prospects for a 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 problem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8, Issue 4. pp. 399-419.
- Japan's Cabinet Office. 2001. "Toward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China's WTO Accession and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Tokyo: Japan's Cabinet Office. December.
- Josling, Tim. 1992. "NAFTA and Agriculture: A Review of the Economic Impacts." *Assessing the Impact of North American Free Trade*. eds. Nora Lustig, Barry P. Bosworth, and Robert Z. Lawrence. The Brookings Institution. pp. 144-175.
- Khan, Saleem M. 1997. "South Asia: Free Trade Area and Trade Liberalization."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8, Issue 1. pp. 165-177.
- Khan, Saleem M. and Zahira S. Khan. 2003. "Asian Economic Integration: A Perspective on South Asia."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13, Issue 6. pp. 767-785.
- Krishna, Pravin. 1998.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3, No. 1. pp. 227-250.
- Lipson, Charles. 1984.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World Politics*, Vol. 37, No. 1.
- MacArthur, John R. 2000. *The Selling of "Free Trade": NAFTA, Washington, and the Subversion of American Democracy*. New York, NY: Hill and Wang
- Mansfield, Edward D. and Jon C. Pevehouse. 2000. "Trade Blocs, Trade Flows, and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4, No. 4. pp. 775-808.
- Meunier, Sophie. 2000. "What Single Voice? European Institutions and EU-US Trade Negoti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4, No. 1. pp. 103-135.
- Milner, Helen. 1997. *Interests, Institutions, and Informations: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ader, Ralph. 1993. "Free Trade and the Decline of Democracy." *The Case Against 'Free Trade': GATT, NAFTA, and the Globalization of Corporate Power*. San Francisco. CA: Earth Island Press. pp. 1-12.
- Nam, Chong-Hyun. 1993. "Protectionist US Trade Policy and Korean Exports." *Trade and Protectionism*. Edited by Ito Takatoshi, Krueger Anne-O. NBER East Asia Seminar on Economics, Vol. 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83-228.

- National Safe Workplace Institute. 1991. *Crisis at Our Doorstep: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Implications for Mexico-U.S.-Canada Trade Negotiations*. Chicago, IL: National Safe Workplace Institute.
- Odeja, R. H., and Robert K. McCleery. 1991. "U.S.-Mexico Interdependence, Social Pacts, and Policy Alternatives: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Estudios Economicos*, January-June.
- Odeja, R. H., and Sherman Robinson. 1992. "Labor Issues in a 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Assessing the Impact of North American Free Trade*. eds. Nora Lustig, Barry P. Bosworth, and Robert Z. Lawrence. The Brookings Institution. pp. 69-108.
- Odeja, R. H., and Sherman Robinson. April 1991. "Alternative Scenarios of U.S.-Mexico Integration: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UCLA. Working Paper No. 609.
- OECD. 1998.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n Mexico*.
- Ojeda, R. H., C. Dowds, R. McCleery, S. Robinson, D. Runsten, C. Wolff, and G. Wolff. 1996. "NAFTA-How Has It Done? North American Integration Three Years after NAFTA." North American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enter at UCLA.
- Olson, Mancur.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nagariya, Arvind and Rupa Duttagupta. 2002. "Politics of Free Trade Areas: Tariffs versus Quota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58, Issue 2. pp. 413-427.
- _____. 1994. "East Asia and the New Regionalism in World Trade." *World Economy* Vol. 17.
- Pastor, Robert A. 1992. "NAFTA as the Center of an Integration Process: The Nontrade Issues." *Assessing the Impact of North American Free Trade*. (Edited by) Nora Lustig, Barry P. Bosworth, and Robert Z. Lawrence. The Brookings Institution. pp. 176-209.
- Peat Marwick Policy Economic Group. 1991. "The Effects of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Mexico." February.
- Pempel, T. J. 1997. "Transpacific Torii: Japan and the Emerging Asian Regionalism."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Edited by Peter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Peng, D. 2002. "Invisible Linkages: A Regional Perspective of 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6, No. 3. pp. 423-447.
- Putnam, R. Summer, 1988. "The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s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pp. 435-436.
- Reed Electronics Research. 2001.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2*. Volumn 2 - America, Japan and Asia Pacific.
- _____. 2000.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2/2001*, Vol. 3 - Emerging Countries and World Summary.
- Rosecrance, Richard and Jennifer Taw. 1990. "Japan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Leadership." *World Politics*. Vol. 42.
- Rothstein, Richard. 1995. "The NAFTA and Downward Wage Pressure." In *NAFTA as a Model of Development*. Edited by Richard S. Belous and Jonathan Lemco. New York,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 41-45
- Sachs, Jeffrey and Woo, Wing Thye. 1996. "China's Transition Experience, Reexamined." *Transition*, Vol. 7, No. 3-4.
- Scollay, Robert and John P. Gilbert. 2001. *New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in Asia Pacific?* Washington D. C.: IIE.
- Sohn, Chan-Hyun and Jinna Yoon. 2001. "Korea's FTA Polic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KIEP Discussion Paper 01-10.
- Snidal, Duncan. 1979. "Public Goods, Property Rights, and Politic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3, pp. 532-566.
- _____. 1985. "Limits of Hegemonic Stability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9.
- Strange, Susan. 1996. *The Retreat of th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rry, M Moe. 1984. "The New Economics of Organ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
- The Economist*. 1994. "Happy Ever NAFTA?" December 10. pp. 23-24.
- Thurow, L. 1992. *Head to Head: The Coming Economic Battle Among Japan, Europe and America*. New York: William Morrow.
- Trilateral Joint Research. 2003.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Joint Research on Economic Effects of China, Japan and Korea FTA by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China,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of Japan,

-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of Korea.
- U.S. Department of Commerce. "NAFTA 5 Years Report—Expanding Opportunities for North American Trade and Growth." *NAFTA Works for America*, at <http://www.ustr.gov/naftareport/expand1.htm>.
- U.S. Department of Commerce. "NAFTA 5 Years Report -- Fostering Higher Wage Jobs." at <http://www.ustr.gov/naftareport/fastering.htm>.
- U.S. Department of Commerce, Office of Automotive Affair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Fifth Annual Report to Congress Regarding the Impact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Upon U.S. Automotive Trade With Mexico*, at <http://www.ustr.gov/html/autos99.htm>. (July 31, 2001)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01. *U.S.-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Establishing a Free Trade Agreement(FT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Publication 3452. Washinton D.C.
- UNCTAD. 2001. "The evolving profile of FDI in China." *World Investment Report 2001*, p. 26. New York.
- United Auto Workers. 2001. "Derail Fast Track." UAW Politics at <http://www.uaw.org/politics/dclink/01071801fasttrack.html>.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1991. *The Likely Impact on the United States of a Free Trade Agreement With Mexico*. USITC Publication No. 2353.
- Wilson, James Q. 1980. *American Government: Institutions and Politics*. Lexington, Mass.: D.C. Health and Co.
- _____. 1975. *Political Organization*. New York: Basic Books,
- World Bank. 1997. *China 2020: Development Challenges in the New Century*. pp. 1-22. Washington D.C.
- WTO. 1995. *Regionalism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WTO Secretariat.
- Xie, Kang. 2003. "China-Korea Trade and Investment Development and FTA Prospects."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Seoul: KOEX Conference Hall.
- Yu, Tzong-Shian. 2003. "Can East Asia rise again?."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13, Issue 6. pp. 715-729.
- Zhang, Yunling. 2003. "China-ASEAN FTA Under the Framework of East Asian Integration". Presented at Policy Research Institute(Japan's Ministry of Finance) Seminar on China-ASEAN FTA. March.

<http://www.nonghyup.com>(농협중앙회)

<http://www.junnong.org>(전국농민회총연합)

<http://www.kiep.go.kr>(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nds.or.kr>(신문기사검색)

<http://www.krei.re.kr>(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maf.go.kr>(농림부)

<http://www.minagri.gob.cl>(칠레 농림부)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http://www.position21.jinbo.net>(대안연대회의)

<http://www.ustr.gov>(미국 통상대표부)

부 록

<부록 1>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보상체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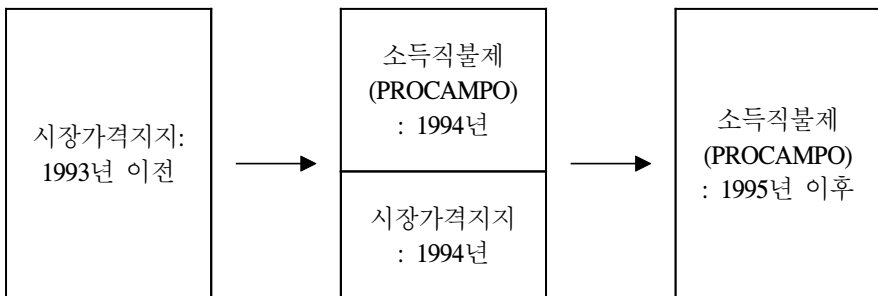
1. 멕시코

가. PROCAMPO 제도

멕시코는 1994년 NAFTA 체결로 인해 종래의 정부의 보장가격(guaranteed price) 지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의 소득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농민에 대한 소득보장 목적의 직불제 형태인 PROCAMPO(Program of Direct Payments to the Countryside)를 1993년에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어 시장가격지지제도를 점진적으로 소득직불제로 바꿀 계획이다(부표-1 참고).

PROCAMPO 제도의 목적은 첫째, 관리가격체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농민을 포함한 약 300만 명의 농민에게 직접소득 지불, 둘째, 비교우위가 있는 작목으로의 생산전환 촉진, 셋째, 미래 소득지지에 관한 확신 제공

<부그림-1> 멕시코의 농민보상제도 추이



자료: OECD(1998),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n Mexico*

으로 생산자의 소득지지, 넷째, 산림회복 및 토양보존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침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환경지속농업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PROCAMPO 제도의 특징으로는 현재의 생산량이 아니라 과거의 경작 면적(historical acreage, 헥타르(ha) 기준)에 근거하여 식재(植栽) 기간마다 관련 농가에 직불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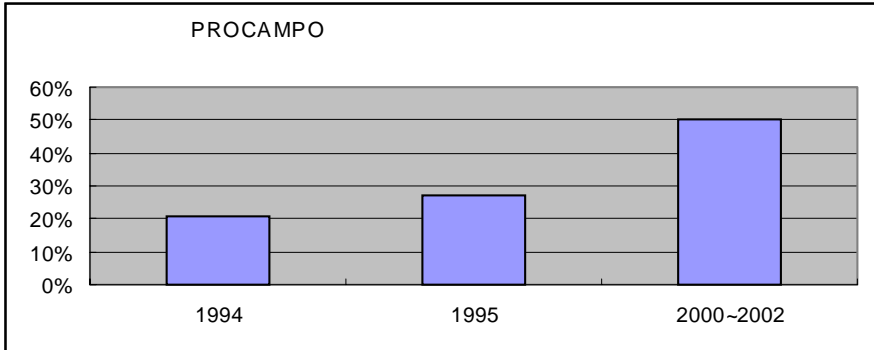
첫째, 이 제도의 지급요건은 농지요건과 농민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농지요건은 1994년에는 시장가격지지와 소득직불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 대상 농지 활용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1995년 시장가격지지 제도를 철폐하고 소득직불제만을 실시함에 따라 지원대상 농지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즉 1993년 8월 이전에 3년간 옥수수, 밀, 두류, 수수, 쌀, 대두, 목화 또는 보리 등 아홉 가지의 농산물이 재배된 농지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1996년 이후에는 각종 농산물,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지 또는 승인된 환경프로그램에 가입된 토지의 경우로 조건이 완화되었다. 이 경우 농지를 방치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음 농민요건으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민에 한해 소유농/임차농 또는 개별농/기업농 여부는 불문하였으나 농지소유 혹은 임차증명서류를 소지한 농민에 한해 제한되었다.

둘째, 운용방법은 농림부(Secretariat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Rural Development, Fisheries and Foodstuffs: SAGARPA) 및 ASERCA(Support Services for Agricultural Marketing Agency)의 관리하에 시행되었다. ASERCA는 16개의 지역사무소를 통해 대상농지, 자격농민 적격 여부 및 투명한 지불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불방법으로 매작목 시즌별로 단위면적 기준으로 지불하였으며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멕시코 국회 하원에서 매년 정부예산에 배정되도록 하였다.

<부표-1> PROCAMPO의 지원추이



자료: OECD(1998),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n Mexico*

농업정책 지출에서 PROCAMPO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산물시장 개방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수혜농가의 88%가 5 헥타르 이하 경작농가로서 이들의 수혜금액은 전체 PROCAMPO 지원액의 50% 정도(1995년)를 차지하였다.

<부표-2> PROCAMPO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백만 멕시코 페소, 백만 달러)

연도	ha당 지불액 ¹⁾		총지불액 ²⁾	대상농지 (단위: 백만-ha)
	가을/겨울시즌	봄/여름시즌		
1994	-	400(62)	4,900(1400)	13.6
1995	400(62)	440(58)	5,900(900)	14.7
1996	440(56)	484(61)	6,575(830)	13.8
1997	484(61)	556(70)	7,533(951)	13.9
1998	556(61)	626(68)	8,491(928)	13.9
1999	626(66)	708(74)	9,372(981)	13.5
2000	708(75)	778(82)	10,379(1,098)	13.6
2001	778(83)	829(89)	11,005(1,178)	13.4
2002	829(86)	873(91)	12,420(1,292)	14.0

주: 1), 2) 화폐단위는 멕시코 페소(M\$)이며, () 안은 미국달러(US\$)

자료: OECD(1998),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n Mexico*

OECD는 PROCAMPO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PROCAMPO는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직접지불이고 지불기준도 현재의 생산량이 아니라 과거 일정시점의 경작면적(historical acreage)을 대상으로 하므로 생산과 이로 인한 무역을 왜곡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최소인 지불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시장가격지지조치에서 직접지불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OECD의 농업정책 개혁의 방향 및 회원국에 대한 정책 권고와 일치하므로 OECD의 PROCAMPO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시장가격지지에 비해 직접지불제가 안고 있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신용보증제도(credit guarantee system)

멕시코는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의 소득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02년에 농민이 농업 관련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새롭게 착수할 수 있도록 PROCAMPO 지급액을 일시불(lump-sum)로 지불하는 신용보증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의 연간예산은 연방세출예산(Federal Expenditure Budget)에서 배정된다.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2년부터 2008년(PROCAMPO 종료시점)까지 식재기간마다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동 lump-sum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PROCAMPO와 무관하게 농민이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추가 신용(credit) 공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농민들은 금융기관, SAGARPA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정을 받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 농업연합(Alliance of Agriculture, ALIANZA)

멕시코는 1996년에 인적자본, 기술, 인프라 등을 투자하고 농민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빈곤퇴치 프로그램, 관개시스템의 현대화, 각종 장비 등의 구입을 위한 재정지원, 기술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옥수수, 두류 등 주요 곡물의 종류 다양화 및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냈다. 농업연합을 위한 재정재원은 수익자부담원칙을 도입하여 소요재정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지 않고 농민이 50%, 연방정부가 32%, 자치단체가 18%씩 지원, 충당하고 있다.

2. 미국의 무역구조지원개혁법(Trade Adjustment Assistance Reform Acts, TAARA)

미국은 무역자유화로 인한 사회구성원의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를 입은 분야의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무역자유화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고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1962년 Trade Expansion Act를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 1974년 무역법을 통해 현재의 틀을 갖추었으며, NAFTA 발효에 따라 NAFTA-TAA를 별도로 운영하다가 2002년 제반 법령을 통합한 「무역조정지원개혁법(Trade Adjustment Assistance Reform Acts)」이 제정되었다.

「무역조정지원개혁법(TAARA)」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조사와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에 따른 무역협정 체결시 관계장관들이 산업피해 규모 및 구조조정가능성 등을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첫째, 지원대상은 실직 또는 실직우려 근로자(adversely affected workers)

이다. 동종 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기업생산이 감소하고, 동 기업의 상당수 근로자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해고되거나 해고될 위험에 처한 경우, 또는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공급업체(supplier), 하류부문기업(downstream producer)에 근무하는 근로자(secondary worker)들이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둘째, 산업피해기업(firms)이다. 해외로부터의 수입증대로 인해 국내기업의 생산 또는 판매가 1년 동안 25% 이상 감소되고, 근로자가 해고 또는 해고위험에 직면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communities)다. 공동체(단위: county)에서 최근 3년간 무역조정 지원을 받은 근로자의 수가 일정 규모(도시: 500명, 농촌: 300명) 이상이고, 지역실업률이 국내실업률보다 1% 이상 높은 경우에 지원대상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넷째, 농어민(farmers and fishermen)이다. 해외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해 최근 1년간 농수산물 평균가격이 지난 5년간 평균가격의 8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 한해 농어민도 지원대상이 된다.

나. 지원방식

첫째,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실직노동자에게는 무역조정수당(trade adjustment allowance), 임금보전수당(임금 차이의 50%를 2년간 지원), 의료보험료 혜택, 구직수당, 직업재배치수당 등을 지급하며, 산업피해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직접지원(direct loan) 또는 대출보증(guarantee of loan)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공동체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어민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정보 및 기술 지원(information & technical assistance)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절차, 지원내용, 의무사항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지원대상자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제안서 작성, 제안내용 이행과정의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 지역개발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training)을 지원한다. 해고근로자의 전직(轉職)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무역조정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다.

다. 담당 정부기관

무역구조조정지원개혁법을 실행하는 담당기관은 지원정책 수립 및 의회, 대통령에 대한 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로자에 관한 지원업무는 노동부가, 그리고 기업, 공동체 및 어민에 관한 지원업무는 상무부, 농민은 농림부가 담당한다. 또한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주정부에서 협조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여타 정부기관이나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공동체 경제개발조정위원회, 민간 훈련, 연구 및 자문기관 등의 민간기관과도 협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부록 2> NAFTA 추진시 미국의 국내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1. NAFTA의 개요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에 정식 발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까지 향후 10년간에 걸쳐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국간 상품 및 용역무역의 99%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둘째, 금융기관의 타국 영업 등 3국간 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부분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며, 셋째, 멕시코의 경우 에너지, 철도산업, 캐나다의 경우 출판, 뉴스미디어, TV Programming 등 문화산업, 미국의 경우 항공, 유선통신산업 등 예외부문을 제외하고 3국간에 행해지는 해외직접투자에 부과되는 대부분의 무역장벽을 철폐한다. 넷째, 3국은 각국의 형편에 맞는 국가환경기준을 수립하여 적용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환경기준이나 건강, 안전, 최저 임금 및 미성년자 불법노동 등을 규정한 NAFTA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NAFTA가 보장하는 무역특혜를 박탈하는 권한을 갖는 NAFTA 산하기구를 설치한다.

2. NAFTA 출범과 미국의 대내 정책과제

USA-Canada FTA 발효 2년 후인 1991년에 멕시코를 포함한 NA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1992년 8월 NAFTA를 출범하기로 하는 기본적인 합의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국간에 이루어졌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1년 뒤인 1993년 가을까지 국내 비준절차를 거의 마쳤으나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의 협정 체결을 향한 강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환경단체를 포함한 각 이익단체 등의 저항과 하원의

반대에 직면하여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정점으로 한 효과적인 총력전에 힘입어 1993년 11월 17일 하원을 통과하고 곧이어 상원 인준에도 성공함으로써 NAFTA는 1994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하지만 1991년에서 1993년까지 NAFTA 협상 당시 미국내 노동조합, 재계, 환경단체, 농민 및 대기업 등 여러 이익단체는 NA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었다. NAFTA 찬성론자들은 NAFTA가 북미 전지역에 걸쳐 효과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의 기업들이 실질임금이 낮은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대량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NAFTA 반대론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다.

가. NAFTA 찬성의견

NAFTA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증대효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고용감소효과를 능가하는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의 고용증대효과, 역내 노동시장 재편과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국제경쟁력 향상, 역내자본이동의 증대로 인한 후생증대 효과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NAFTA가 미국상품과 용역에 대한 멕시코로부터의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모두 17만 개의 일자리가 미국 내에서 창출되어 미국과 멕시코의 GDP가 매년 150억 달러씩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당시 미 행정부는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경제통합시에 발생하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중 NAFTA의 경우는 무역창출효과가 월등히 커서 NAFTA 체결 후 역내 국가간에 후생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나. NAFTA 반대의견

NAFTA에 반대하는 견해는 NAFTA가 미국의 노동시장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으로 주장하면서 NAFTA가 체결되면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낮

은 임금, 허술한 환경법규 및 노동법규 등을 가진 멕시코로 대량의 일자리가 이동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제로 1991년 당시 미국의 시간당 평균임금(제조업)이 14.31 달러, 캐나다가 14.71 달러인 반면, 멕시코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32 달러로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단순노동집약 제조업이었다.

대표적인 NAFTA 반대론자인 Perot은 NAFTA가 체결되면 590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멕시코에 잃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기도 하였으며, 미국 노조단체인 AFL-CIO는 NAFTA를 Free Trade가 아닌 Fair Trade 'The North American Fair Trade Agreement'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미 노조의 NAFTA에 대한 가장 심각한 우려는 '일자리의 수출'임을 명백히 하였다.

NAFTA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세력 중 다른 하나는 환경론자들이었다. 이들은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위치한 멕시코 내의 관세 면세지역인 Maquiladora에 만연한 환경오염사태, 멕시코시티와 대도시의 스모그 및 공기 오염 실태, 텍사스주 엘파소 지역과 멕시코만 일대의 증가하는 화학폐기 물질 방출사태 등을 제시하며 NAFTA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여러 시민단체도 NAFTA는 대기업, 다국적기업 그리고 고소득층 일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일 뿐 중산층 및 저소득의 일반 서민들에게는 실업, 저임금, 위험하고 조악한 작업 환경 등을 양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일반 시민 생활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모습의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다.

Josling(1992)은 미국의 농업부문에 있어서, NAFTA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집단은 미국의 곡물, 특히 옥수수, 유지종자, 목축업자, 멕시코 북부의 과일, 채소 생산업자들로 추정하였으며, 손해를 보는 집단은 멕시코의 곡물 생산업자와 미국의 과일, 채소 재배업자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NAFTA가 미국 농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NAFTA 협상기간중에 농산물 관련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의 불법 노동력 유출문제가 더 자주 거론되었으나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멕시코 저임금 노동이 미 농산업에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고 있어서 이 또한 정식으로 이슈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⁷⁷⁾

3. 클린턴 행정부의 대내 협상전략

노동계, 환경론자,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여러 이익단체와 미 하원을 중심으로 하는 NAFTA 체결 반대 및 신중론의 강력한 저항에 접한 미 클린턴 행정부는 늦어도 1993년 말까지는 성공적인 미국의 NAFTA 의회 비준을 끝낼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그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전략

NAFTA의 체결이 고용창출, 해외시장의 확대와 수출증가, 경제성장촉진효과 등을 주로 하여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뉴스미디어, 토론광장, 홍보물, 연구결과물의 소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NAFTA 협상기간중에 있었던 Perot과 Gore 미 부통령과의 NAFTA에 관한 공개 논쟁은 NAFTA에 대한 여론 형성과 정치계 및 민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⁷⁸⁾ 이는 클린턴 행정

77) NAFTA가 체결된 후 U.S. Border Patrol은 멕시코로부터의 불법 이민 및 유입 단속을 강화하였음. 예를 들어 1993년과 1998년 사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담당하는 이민국 직원의 수는 3,965명에서 7,90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불법 이민자 체포도 1,263,490명에서 1,555,776명으로 확대되었음.

78) CNN으로 방영된 the Gore-Perot 토론은 Cable TV로는 기록적인 1,68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있게 NAFTA 체결을 주요한 정치 및 정책 목표로 삼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대민 홍보는 상무부, 재무부, 노동부, 그리고 대통령 경제보좌관실 등이 담당하였고, task force로 백악관 내에 USA-NAFTA 팀이 결성되었으며, 재계 및 대기업들도 이를 도와 The Business Roundtable을 만들어 pro-NAFTA 여론을 형성하고 활동자금을 모금하는 등 백악관과 NAFTA 비준을 위한 공동전선을 폈으며, IIE(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The Heritage Founda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등 민간 연구기관에 의한 NAFTA의 긍정적인 경제효과에 관한 보고서 등도 NAFTA에 대한 미국내 우호적인 여론형성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⁷⁹⁾

학계로부터의 지원도 있었는데 MIT의 Dornbusch 교수가 대표 집필하고, 모두 12명의 생존한 Nobel 경제학상 수상자 전원이 부서하여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NAFTA 지지 공개서한(September 17, 1993, The New York Times 1면 게재)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⁸⁰⁾

나. NAFTA 부속협정문 수정·보완 전략

두 번째 대응 전략은 다양한 이해단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NAFTA 협정문을 전체 윤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수정하거나 부속협정문(NAFTA's side agreements)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79) NA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보고서가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성장에 positive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특히 멕시코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미국에 비하여 10~15배 이상) 예상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Brown(1992), Hufbauer and Schott(1992), Odeja and McCleery(1991), Odeja and Robinson (1991), Peat Marwick Policy Economic Group(1991), USITC(1991), and Almon et al(1990) 등을 참고

80) "Dear Mr. President, ... While we may not agree on the precise impact of NAFTA, we do concur that the agreement will be a net positive for the United States ... Specifically, the assertions that NAFTA will spur an exodus of U.S. jobs to Mexico are without basis ..."

이는 크게 환경 관련조항, 노동시장 관련조항 및 예외조항의 설정 등으로 대표된다.⁸¹⁾ 또한 NAFTA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실직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실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직업 훈련제도가 클린턴 행정부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Bush 행정부는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노동자 보상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10 billion over a 5-year period)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노동성 내에 NAFTA Transitional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TAAP)을 도입하여 1994년 1월 1일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증가 혹은 미국내 생산시설의 멕시코, 캐나다로의 이전 등 NAFTA 체결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실직하거나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미국 노동자들을 지원, 보호하도록 하였으며,⁸²⁾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의 불법 노동자 이동을 막는 방편으로 미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Maquiladora System을 존속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NAFTA는 친환경적 협정(green agreement)임을 부각시키고 환경 훼손 방지 및 위반시 제재 조치를 가하는 조항들(The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NAAEC)이 신설되었다(Pastor 1992).

이와 더불어, NAFTA 회원 3국내 환경보존을 위한 특별기구를 두기로 합의하였으며(예를 들어 CEC; the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와 BECC; the Border Environment Cooperation Commission⁸³⁾), NAFTA

81) 여러 이익단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고려가 행해지지 않으면 NAFTA가 체결되더라도 다시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드세질 것이며 그 전면에 타격을 받은 이익단체들이 나설 것으로 우려되었음(Gruben 1992).

82) 미 노동부에 의하면 1998년 말까지 NAFTA TAA Program이 지원한 NAFTA 직접 관련 실직자 수는 211,582명에 달한 것으로 발표되었음. General Electric 회사가 행한 미 의회 증언에 의하면, 동 기간중에 NAFTA로 인하여 부품 공급회사까지 포함하여 총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3,566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보고되었음.

83) 이와 더불어 U.S. Department of Commerce는 BECC Projects를 금융적으로 돕기 위하여 the 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NADB)를 1995년에 설립하고 2000년까지 5년 동안에 모두 14개의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 걸친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1억 500만 달러를 융자하였다.(U.S. Department of Commerce, "NAFTA 5 Years Report- Fostering Higher Wage Jobs," at <http://www.ustr.gov/naftareport/fastering.htm>)

가 장기적으로는 NFATA 회원국 3국간에 환경, 노동규제를 평준화하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환경론자와 노조로부터의 조직적인 저항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폈다.

실제로 1997년에 NAFTA 회원 3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보다는 멕시코인들과 캐나다인들이 NAFTA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양국의 노동, 환경 등에 관한 정부규정을 변화된 경제, 산업구조에 맞게 고쳐나가는 데 NAFTA가 매우 효율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있다(Isaak 2000).

4. 대의회 로비전략

마지막 대응전략은 정치적인 해결책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활발한 대의회 로비활동이었다. 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백악관에 이른바 ‘NAFTA-team’이 구성되어 Kantor(전 USTR 장관), Daley(전 상무상관) 등이 주요 멤버로 활약하였다. 특히 NAFTA가 체결되면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의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NAFTA의 비준은 미국 전체의 장기적 국익에 비추어 볼 때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주지시키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NAFTA 협정문의 보완 혹은 NAFTA 의제 외 전혀 다른 부문에서 정치적 흥정 혹은 경제적 보상을 함으로써 의회 유동표를 끌어들이는 로비활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이를 위해 클린턴 대통령이 그 협상 전면에 나서서 큰 활약을 하였으며,⁸⁴⁾ 백악관의 대하원 로비활

84) 예를 들어, California의 유력한 민주당 하원의원인 Esteban Torres의 표를 얻기 위하여 그가 제안했던 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NADB)를 설립하여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의 환경보존사업을 지원하자는 안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Florida주 하원의원들(Peter Deutsch and Harry Johnson 등 23명)의 요청과 Florida Fruit and Vegetable Association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계획하고 있던 methyl bromide 살충제금지법을 완화하여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로부터 토마토와 sweet pepper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과 협조하여 긴급구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MacArthur 2000, pp. 225-275).

동은 클린턴 대통령 외에 Bentsen(전 재무장관), Kantor, 그리고 Richardson 등이 담당하여 유동표 흡수에 주력하였다. 1993년 11월 17일에 있었던 NAFTA 비준에 대한 하원 투표는 찬성 234표, 반대 200표로 16표차로 가결되었으며, 3일 후에 있었던 상원 투표에서는 61 대 38로 가결되었다.

5. 멕시코의 대내 협상전략

멕시코 정부는 NA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내 반대세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하였으며, 멕시코정부 내에서는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ial Development가 미국 내에서 NAFTA를 위한 로비를 총괄, 지휘하도록 하였다. 또한 워싱턴의 법률사무소, 로비스트, 컨설팅, PR 회사들을 대량 고용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였다(1993년 예산: 약 1천만 달러).

뿐만 아니라 멕시코는 33인의 미국 전직 고위관리를 NAFTA를 위한 로비스트로 채용하였으며, 멕시코 국민들의 반미·반NAFTA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PR회사, 의회 로비스트, 국제변호사 등을 활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멕시코 기업인으로 하여금 미국을 방문하여 NAFTA에 대한 PR 활동을 하게 하였다.

미국내 반대세력의 대변인 격인 Anderson AFL-CIO 회장과 멕시코 정부 로비스트인 Blanco간의 대화 추진 등을 통해 협상의 물꼬를 트고자 하였으며 미 의원(3인), 주지사(1인), 입법보좌관(48명)들로 하여금 멕시코 현지실사(fact-finding) 방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멕시코에서 NAFTA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Salinas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로는 제도적인 틀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국내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국내적인 합의는 정부부문, 민간부문, 국회, 노동 및 학계를 주요 주체로 여겼으며, 국내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이 <부표-3>과 같이 마련되었다.

<부표-3> NAFTA 국내 비준을 위한 멕시코의 제도적 틀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주체인 경제부차관: 1990년 외국과의 경제협정을 협상하기 위해 신설함. - 정부부처간의 조율을 위한 부처간 위원회: 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농림부장관, 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석함. - 협의과정(국회, 자문위원회, COECE)
국회(국민협의회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통상관계가 경제와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토론 - 참여자: 노동조합, 학계, 지식인, 과학자, 언론, 정치가
협상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에 관련된 각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매달 모임을 가지며 위원장은 경제부차관이 맡음. - 자문위원회에서는 협상주체와 사회에 회의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함.
COECE (Coordinator for Foreign Trade Business Organiz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이해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장치 - 민간부문의 이해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 산업, 서비스, 유통, 금융, 농업 포함 - 민간부문에서 통상협상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 조성 - 역할: 협상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정부에 자문(room next door), 산업별 연구를 수행하여 협상단에 제시, 토론회를 조직하고 작업반을 구성하여 산업별 공동입장을 발표

<부록 3> 한·중·일 FTA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한·중·일 FTA에 대한 국내 이해집단간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서 농민단체, 경영자, 노조, 학생, 공무원 등 13개 직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개요

설문목적: 한·중·일 FTA에 대한 이해집단들의 반응 조사

실시기간: 2003년 5-7월

조사방법: 인터넷, 방문, 전화, 우편

대 상: 농민단체, NGO, 경영자, 노조, 학생, NGO, 경공업 종사자, 철강·조선·자동차산업 종사자, 공무원, 경제단체, 소비자

유효응답자수: 423

설문지는 두 Part로 구성되어 있는데 Part 1에서는 응답자의 한·중·일 FTA에 대한 태도 및 찬반 입장, 그리고 그 이유와 해결책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11개 문항), Part 2에는 응답자의 연령, 직업, 소득수준, 교육 수준, 해외경험 및 일본(인)과 중국(인)에 대한 감정 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7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방문, 우편, 전화, e-mail 등을 이용한 설문조사는 2003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실시되었는데 회수된 설문응답지 중에 총 423개의 유효 응답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유효 응답자들의 개인별 성향(personal attributes)과 배경(personal background)은 <부표-4>에 요약되어 있다. <부표-4>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들의 개인별 성향과 배경이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해외경험의 유·무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적 응답자(a representative respondent)의 profile은 대졸(65%), 30대(46%)의 연령층에 연소득이 1,200~4,000만 원(46%)대이며, 해외여행 경험은 1~3회(43%) 정도로, 일본(인) 및 중국(인)에 대해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감정(각각 47%, 63%)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4> 설문 응답자의 개인 성향 분석표

항 목	측 정	빈도수	비율(%)
나 이	20~29세	116	27%
	30~39세	196	46%
	40~49세	88	21%
	50~59세	19	4%
	60세 이상	4	1%
최종학력	중졸 이하	3	1%
	고졸	49	12%
	대졸	277	65%
	석사	91	22%
	박사	3	1%
연 소득수준	1200만 원 이하	77	18%
	1200만~4000만 원	195	46%
	4000만~8000만 원	118	28%
	8000만 원 이상	27	6%
	미응답	6	1%
해외여행경험 (지난 5년간, 횟수)	0	86	20%
	1~3번	184	43%
	4~10번	87	21%
	11번 이상	43	10%
	해외근무 또는 연수	23	5%
일본·일본인에 대한 감정	아주 좋은 감정	6	1%
	약간 좋은 감정	56	13%
	중립적	197	47%
	약간 나쁜 감정	144	34%
	아주 나쁜 감정	20	5%
중국·중국인에 대한 감정	아주 좋은 감정	5	1%
	약간 좋은 감정	69	16%
	중립적	268	63%
	약간 나쁜 감정	68	16%
	아주 나쁜 감정	13	3%

설문조사는 13개 집단(직종)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직종별 분포는 <부표-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부표-5> 설문조사 응답자의 직종별 분포

직 종	응답자 수	전체대비 비율(%)
1. 농민단체	30	7%
2. 대기업 경영자	26	6%
3. 중소기업 경영자	32	8%
4. 노조 지도자	25	6%
5. 학생	51	12%
6. NGO	30	7%
7. 전통산업 종사자(섬유, 봉제 등)	52	12%
8.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 종사자	57	13%
9. 외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	30	7%
10.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30	7%
11. 진경련, 무역협회	17	4%
12. 중소기업 중앙회, 중진공	18	4%
13. 가정주부	25	6%
총 합 계	423	100%

2. 총괄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본 한·중·일 FTA에 대한 시각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한·중·일 FTA가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장 큰 이득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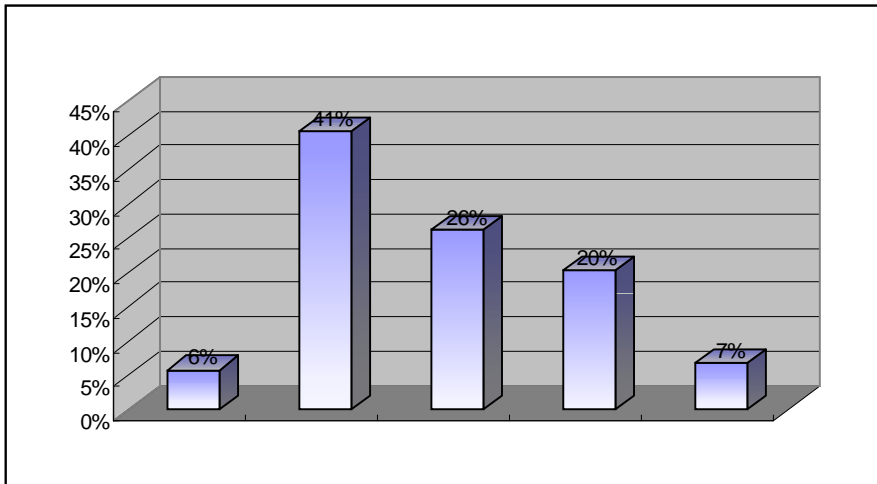
또한 일반적으로 한·중·일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농민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중·일 FTA 체결시점으로는 현 정부 말기나 차기 정부 초기로 보는 응답자가 많았다.

가. 한·중·일 FTA에 대한 시각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한국경제에 전반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긍정적’이 41%, ‘매우 긍정적’이 6%로 총유효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한·중·일 FTA 체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부정적’이 20%, ‘매우 부정적’이 7% 등 한·중·일 FTA 체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응답자는 모두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한·중·일 FTA가 국민경제 전반에는 이로울 수 있으며, FTA의 혜택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반면, 그 피해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데서 오는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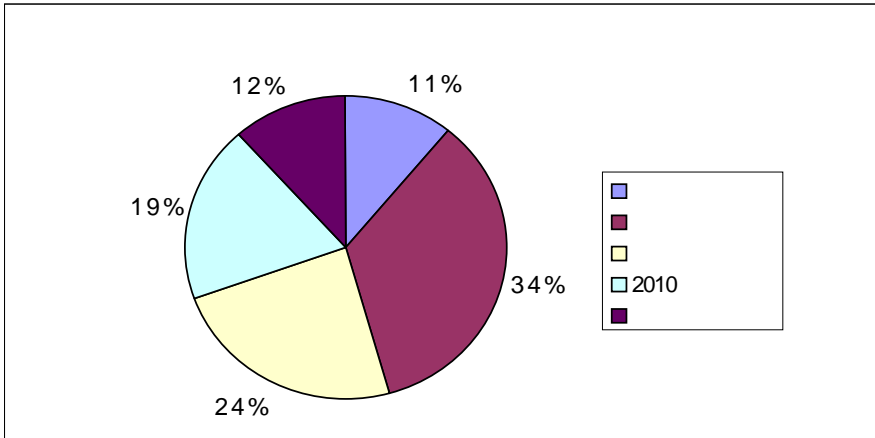
<부그림-2> 한·중·일 FTA에 대한 시각



나. 한·중·일 FTA 추진 시기

한·중·일 FTA를 체결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58%)이 현 정부 말기나 다음 정권 초기가 될 것이라 답하였다.

〈부그림-8〉 한·중·일 FTA 추진 시기



다. 한·중·일 FTA로부터의 이득과 피해

한·중·일 FTA로부터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묻는 질문에서는 52%의 응답자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수출증대(48%) 및 소비자에게 값싼 제품 제공(48%)이라고 선택한 응답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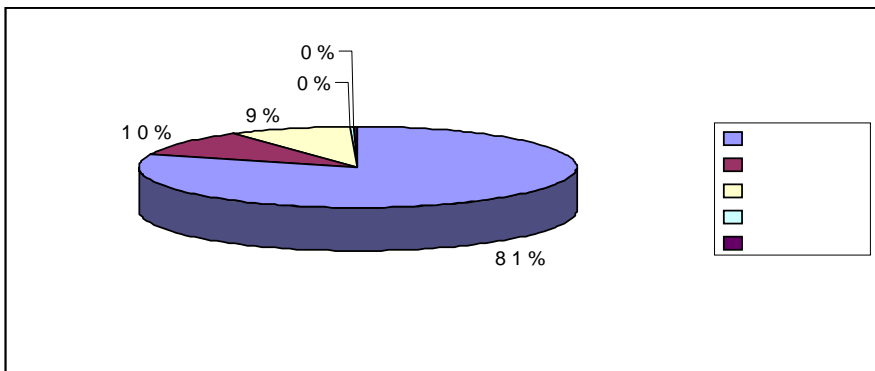
〈부표-6〉 한·중·일 FTA로부터의 이득 분석

한·중·일 FTA로부터의 이득 분석	빈도수	전체대비 비율
1. 수출증대	202	48%
2.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값싼 제품 제공	203	48%
3. 일자리가 많이 생김	44	10%
4.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	221	52%
5. 사양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	162	38%
총 합 계	423	100%

주: 복수응답을 허용하였음.

한·중·일 FTA를 하면 가장 손해 보는 집단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농민(81%)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 응답으로는 근로자(10%), 중소기업(9%)순으로 나타났다.

<부그림-4> 한·중·일 FTA로 인한 피해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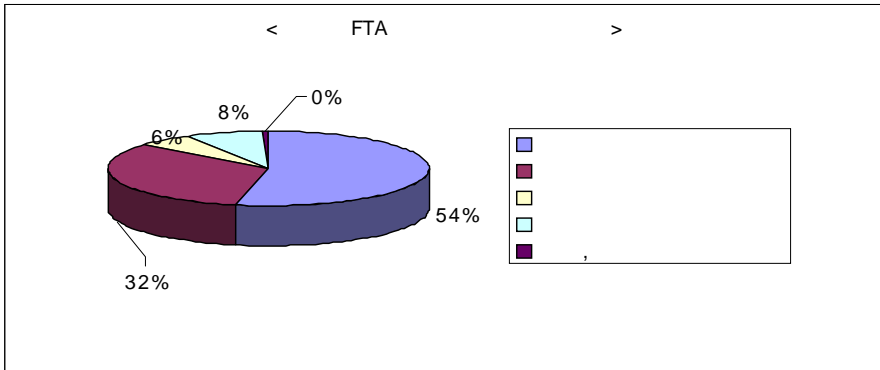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그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응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농민에 대한 피해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에 따른 피해를 목격한 응답자들의 중국과의 FTA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라. 한·중·일 FTA 추진에 중요한 요소

한·중·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54%)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대통령의 리더십(32%)이 그 다음 중요한 요소로 응답되었다.

<부그림-5> 한·중·일 FTA를 추진하기 위한 요소



3. 질문에 대한 직종별 반응

가. 한·중·일 FTA에 대한 인식

(질문 1)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한국경제에 전반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농민단체의 반응은 43%의 응답자가 한·중·일 FTA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농산물이 일본시장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할 수 있고, 상당수 농민단체의 지도자가 한·중·일 FTA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들 및 경제단체 종사자(전경련/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중진공)들은 일반적으로 한·중·일 FTA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매우 긍정과 긍정을 합하면, 대기업 경영자 54%, 중소기업 경영자 44%, 전경련/무역협회 77%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진공 72%에 이른다.

<부표-7> 한·중·일 FTA에 대한 인식

단 체	매우 긍정	긍정	중립	부정	매우 부정	전체
농민단체	3	13	8	5	1	30
	10%	43%	27%	17%	3%	100%
대기업 경영자	3	11	8	3	1	26
	12%	42%	31%	12%	4%	100%
중소기업 경영자	0	14	8	8	2	32
	0%	44%	25%	25%	6%	100%
노조 지도자	1	0	3	9	12	25
	4%	0%	12%	36%	48%	100%
학 생	4	21	16	8	2	51
	8%	41%	31%	16%	4%	100%
NGO	0	0	2	18	10	30
	0%	0%	7%	60%	33%	100%
전통산업 종사자	0	15	16	20	1	52
	0%	29%	31%	38%	2%	100%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 종사자	1	34	20	2	0	57
	2%	60%	35%	4%	0%	100%
외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	4	18	7	1	0	30
	13%	60%	23%	3%	0%	100%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3	16	8	3	0	30
	10%	53%	27%	10%	0%	100%
전경련, 무역협회	1	12	2	2	0	17
	6%	71%	12%	12%	0%	100%
중소기업중앙회, 중진공	4	9	4	1	0	18
	22%	50%	22%	6%	0%	100%
가정주부	1	9	9	6	0	25
	4%	36%	36%	24%	0%	100%
전 체	25	172	111	86	29	423
	6%	41%	26%	20%	7%	100%

한·중·일 FTA 체결시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추정되는 철강, 조선 및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한·중·일 FTA에 대해 긍정적(62%)으로 답하였다. 이에 반해 취약산업으로 여겨지는 전통산업 종사자들은 부정(38%)으로 답한 응답자가 긍정(29%)으로 답한 응답자보다 많았다.

노조 지도자와 NGO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이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정과 매우 부정을 합하면 각각 84%와 93%에 이르렀다.

공무원들은 한·중·일 FTA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상 관련부처인 외교부나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보다 약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가정주부 역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나. 한·중·일 FTA를 체결해야 할 대상국 순서

(질문 2) 만약 한·중·일 FTA를 추진한다면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한·중·일 FTA 체결순서는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그 다음 중국과 한·중·일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답하였다(농민단체, 대기업경영자, 학생, 철강·조선·자동차산업 종사자, 공무원, 경제단체 종사자). 직종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일본과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 지도자와 NGO 종사자들은 각각 84% 및 93%의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체결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8> 한·중·일 FTA 체결순서

단 체	한·중·일 동시 체결	일본→ 중국	중국→ 일본	체결 반대	전체
농민단체	10	16	2	2	30
	33%	53%	7%	7%	100%
대기업 경영자	9	10	7	0	26
	35%	38%	27%	0%	100%
중소기업 경영자	9	8	10	5	32
	28%	25%	31%	16%	100%
노조 지도자	3	1	0	21	25
	12%	4%	0%	84%	100%
학 생	13	18	13	7	51
	25%	35%	25%	14%	100%
NGO	1	0	1	28	30
	3%	0%	3%	93%	100%
전통산업 종사자	18	14	15	5	52
	35%	27%	29%	10%	100%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 종사자	17	22	16	2	57
	30%	39%	28%	4%	100%
외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	9	13	8	0	30
	30%	43%	27%	0%	100%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7	19	4	0	30
	23%	63%	13%	0%	100%
전경련, 무역협회	3	7	6	1	17
	18%	41%	35%	6%	100%
중소기업중앙회, 중진공	7	8	3	0	18
	39%	44%	17%	0%	100%
가정주부	7	4	10	4	25
	28%	16%	40%	16%	100%
전 체	113	140	95	75	423
	27%	33%	22%	18%	100%

다. 한·중·일 FTA로부터의 이득

(질문 3) 한·중·일 FTA를 체결한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선택 가능)

한·중·일 FTA로부터의 이득으로는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이라는 응답(52%)이 가장 많았으나, 그 외에도 수출증대(48%), 소비자에게 값싼 제품 제공(48%)이라는 응답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라. 한·중·일 FTA로부터의 피해

(질문 4) 한·중·일 FTA를 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표-9> 한·중·일 FTA로 인한 피해집단 분석

단 체	423	농민단체	근로자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
농민단체	30	25 83%	1 3%	4 13%	0 0%	0 0%
대기업 경영자	26	23 88%	1 4%	1 4%	1 4%	0 0%
중소기업 경영자	32	27 84%	2 6%	3 9%	0 0%	0 0%
노조 지도자	25	15 60%	10 40%	0 0%	0 0%	0 0%
학 생	51	41 80%	7 14%	3 6%	0 0%	0 0%
NGO	30	18 60%	12 40%	0 0%	0 0%	0 0%
전통산업 종사자	52	45 87%	1 2%	6 12%	0 0%	0 0%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 종사자	57	35 61%	0 0%	5 9%	0 0%	0 0%
외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	30	26 87%	1 3%	3 10%	0 0%	0 0%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30	24 80%	1 3%	5 17%	0 0%	0 0%
전경련, 무역협회	17	15 88%	0 0%	2 12%	0 0%	0 0%
중소기업중앙회, 중진공	18	13 72%	3 17%	2 11%	0 0%	0 0%
가정주부	25	19 76%	2 8%	3 12%	0 0%	1 4%

직종과 상관없이 한·중·일 FTA로부터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농민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다수의 노조 지도자(40%)와 NGO(40%) 응답자는 근로자 또한 한·중·일 FTA로 인한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다.

마. 한·중·일 FTA로 인한 피해 보상

(질문 5) 한·중·일 FTA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전체적으로는 적절한 금전적인 보상(31%)과 교육훈련, 사업전환 등을 통한 비금전적인 보상(37%)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표-10> 한·중·일 FTA로 인한 피해보상

단 체	완벽한 보상	적절한 보상	약간의 보상	보상 반대	비금전적 보상(교육훈련, 사업전환 지원 등)	전체
농민단체	6	16	1	0	7	30
	20%	53%	3%	0%	23%	100%
대기업 경영자	1	8	6	2	9	26
	4%	31%	23%	8%	35%	100%
중소기업 경영자	2	6	6	1	17	32
	6%	19%	19%	3%	53%	100%
노조 지도자	23	1	0	1	0	25
	92%	4%	0%	4%	0%	100%
학 생	4	18	6	1	22	51
	8%	35%	12%	2%	43%	100%
NGO	23	5	0	0	2	30
	77%	17%	0%	0%	7%	100%
전통산업 종사자	9	15	5	2	21	52
	17%	29%	10%	4%	40%	100%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 종사자	2	31	17	1	6	57
	4%	54%	30%	2%	11%	100%
외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	1	3	2	1	23	30
	3%	10%	7%	3%	77%	100%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4	12	1	1	12	30
	13%	40%	3%	3%	40%	100%
전경련, 무역협회	1	5	1	1	9	17
	6%	29%	6%	6%	53%	100%
중소기업중앙회, 중진공	0	4	3	0	11	18
	0%	22%	17%	0%	61%	100%
가정주부	1	7	1	0	16	25
	4%	28%	4%	0%	64%	100%
전 체	77	131	49	11	155	423
	18%	31%	12%	3%	37%	100%

농민단체나, 노조지도자 혹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NGO에서는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중·일 FTA의 수혜자가 될 대기업/중소기업 경영자(각각 35% 및 53%)나, 이를 추진하는 정부부처(77%, 40%) 및 경제단체(53%, 61%)에서는 교육훈련, 사업전환 등을 통한 비금전적인 보상을 해결책으로 응답하였다.

바. 한·중·일 FTA 체결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

(질문 6) 한·중·일 FTA가 응답자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표-11> 한·중·일 FTA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

단 체	매우 긍정	긍정	중립	부정	매우 부정	무응답	전체
농민단체	1	8	12	8	1	0	30
	3%	27%	40%	27%	3%	0%	100%
대기업 경영자	1	13	12	0	0	0	26
	4%	50%	46%	0%	0%	0%	100%
중소기업 경영자	1	12	15	3	1	0	32
	3%	38%	47%	9%	3%	0%	100%
노조 지도자	0	0	4	5	16	0	25
	0%	0%	16%	20%	64%	0%	100%
학 생	2	25	20	3	1	0	51
	4%	49%	39%	6%	2%	0%	100%
NGO	0	1	3	21	5	0	30
	0%	3%	10%	70%	17%	0%	100%
전통산업 종사자	0	16	30	3	2	1	52
	0%	31%	58%	6%	4%	2%	100%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 종사자	0	33	23	1	0	0	57
	0%	58%	40%	2%	0%	0%	100%
외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	3	12	15	0	0	0	30
	10%	40%	50%	0%	0%	0%	100%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2	13	11	2	2	0	30
	7%	43%	37%	7%	7%	0%	100%
전경련, 무역협회	1	7	7	1	1	0	17
	6%	41%	41%	6%	6%	0%	100%
중소기업중앙회, 증진공	2	8	7	1	0	0	18
	11%	44%	39%	6%	0%	0%	100%
가정주부	0	5	19	1	0	0	25
	0%	20%	76%	4%	0%	0%	100%
전 체	13	153	178	49	29	1	423
	3.07%	36.17%	42.08%	11.58%	6.86%	0.24%	100%

한·중·일 FTA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집단은 대기업경영자(54%), 학생(53%), 철강·조선·자동차 산업종사자(58%) 등이며, 부정적으로 답한 집단은 노조 지도자(84%), NGO(87%)이며, 기타 집단은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사. 한·중·일 FTA 체결 찬성(또는 반대)을 위한 개인의 노력

(질문 7) 우리나라가 한·중·일 FTA를 체결하는 데 찬성(또는 반대)하실 경우, 100이라는 시간과 자금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노력(시간과 자금 등을 투입)하시겠습니까?

<부표-17> 한·중·일 FTA의 찬성(또는 반대)을 위한 개인적 노력

단 체	많은 노력	적당히 노력	약간 노력	관심만 있음	노력하지 않음	전체
농민단체	2	13	4	11	0	30
	7%	43%	13%	37%	0%	100%
대기업 경영자	2	5	8	11	0	26
	8%	19%	31%	42%	0%	100%
중소기업 경영자	4	11	6	10	1	32
	13%	34%	19%	31%	3%	100%
노조 지도자	20	2	0	2	1	25
	80%	8%	0%	8%	4%	100%
학 생	11	14	7	18	1	51
	22%	27%	14%	35%	2%	100%
NGO	20	5	3	2	0	30
	67%	17%	10%	7%	0%	100%
전통산업 종사자	3	10	11	26	2	52
	6%	19%	21%	50%	4%	100%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 종사자	6	24	20	7	0	57
	11%	42%	35%	12%	0%	100%
외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	4	14	6	5	1	30
	13%	47%	20%	17%	3%	100%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0	17	9	4	0	30
	0%	57%	30%	13%	0%	100%
전경련, 무역협회	4	9	1	3	0	17
	24%	53%	6%	18%	0%	100%
중소기업 중앙회, 중진공	3	5	5	5	0	18
	17%	28%	28%	28%	0%	100%
가정주부	2	8	3	12	0	25
	8%	32%	12%	48%	0%	100%
전 체	81	137	83	116	6	423
	19%	32%	20%	27%	1%	100%

한·중·일 FTA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노조 지도자와 NGO 종사자들이 가장 많은 노력(100 투입)을 기울이겠다고 응답하였다(각각 80%, 67%). 농민단체는 7%만이 적극 반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한·중·일 FTA를 찬성하는 중소기업 경영자, 공무원, 경제단체 종사자는 대부분 적당한 개인적인 노력(50 투입)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주부, 전통산업 종사자, 대기업 경영자들은 관심만 있음(10 투입)이라고 답한 숫자가 가장 많게 나왔다.

아. 한·중·일 FTA 체결시점

(질문 8) 한·중·일 FTA는 언제쯤 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표-18> 한·중·일 FTA 체결시기

단 체	현정부 중반기	현정부 말기	다음 정권 초기	2010년경	체결되기 합류	전체
농민단체	4	6	7	7	6	30
	13%	20%	23%	23%	20%	100%
대기업 경영자	5	13	3	3	2	26
	19%	50%	12%	12%	8%	100%
중소기업 경영자	2	14	12	2	2	32
	6%	44%	38%	6%	6%	100%
노조 지도자	6	8	4	1	6	25
	24%	32%	16%	4%	24%	100%
학 생	7	16	10	11	7	51
	14%	31%	20%	22%	14%	100%
NGO	4	11	1	3	11	30
	13%	37%	3%	10%	37%	100%
전통산업 종사자	3	17	15	10	7	52
	6%	33%	29%	19%	13%	100%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 종사자	2	22	24	9	0	57
	4%	39%	42%	16%	0%	100%
외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	1	7	10	9	3	30
	3%	23%	33%	30%	10%	100%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4	13	5	7	1	30
	13%	43%	17%	23%	3%	100%
전경련, 무역협회	2	3	1	10	1	17
	12%	18%	6%	59%	6%	100%
중소기업 중앙회, 중진공	2	7	6	3	0	18
	11%	39%	33%	17%	0%	100%
가정주부	5	9	3	5	3	25
	20%	36%	12%	20%	12%	100%
전 체	47	146	101	80	49	423
	11%	35%	24%	19%	12%	100%

직종과는 상관없이 대다수의 응답자가 한·중·일 FTA가 현 정부 말기 또는 다음 정권 초기에 체결될 수 있으리라고 응답하였다.

단, 대기업 대표단체(전경련, 무역협회)의 경우 59%의 응답자들이 2010년경에야 체결될 수 있으리라 응답하였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기 힘들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소수인 점은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대다수의 단체가 한·중·일 FTA가 언젠가는 체결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한·칠레 FTA와의 비교분석

(질문 9)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표-14> 한·칠레 FTA 체결에 대한 개인적 견해

단 체	매우 만족	만족	중립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농민단체	0	0	14	12	4	30
	0%	0%	47%	40%	13%	100%
대기업 경영자	0	8	15	3	0	26
	0%	31%	58%	12%	0%	100%
중소기업 경영자	0	9	20	2	1	32
	0%	28%	63%	6%	3%	100%
노조 지도자	0	0	2	5	18	25
	0%	0%	8%	20%	72%	100%
학 생	2	9	32	5	3	51
	4%	18%	63%	10%	6%	100%
NGO	0	0	1	16	13	30
	0%	0%	3%	53%	43%	100%
전통산업 종사자	2	6	38	5	1	52
	4%	12%	73%	10%	2%	100%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 종사자	0	27	27	3	0	57
	0%	47%	47%	5%	0%	100%
외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	5	17	8	0	0	30
	17%	57%	27%	0%	0%	100%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1	11	18	0	0	30
	3%	37%	60%	0%	0%	100%
전경련, 무역협회	2	10	5	0	0	17
	12%	59%	29%	0%	0%	100%
중소기업중앙회, 중진공	1	10	6	1	0	18
	6%	56%	33%	6%	0%	100%
가정주부	1	5	14	2	3	25
	4%	20%	56%	8%	12%	100%
전 체	14	112	200	54	43	423
	3%	26%	47%	13%	10%	100%

철강·조선·자동차산업 종사자, 외교부·산자부 공무원, 경제단체 종사자들은 대체적으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입장을 표명하였고, 노조 지도자 및 NGO 종사자들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으로 답한 응답자가 대다수를 차지(각각 92% , 97%)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53%가 불만족(매우 불만족과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해단체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대부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한·칠레FTA와 한·중·일 FTA의 정치적 반발 비교

(질문 10) 우리나라가 칠레와 FTA를 체결하는 데 100이라는 노력(시간이나 자금 등)으로 반대 또는 찬성을 하셨다면, 한·중·일 FTA 체결에는 어느 정도의 노력(시간과 자금 등)을 투입하시어 찬성 또는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부표-15> 한·칠레 FTA와 비교하여 한·중·일 FTA 의 찬성/반대를 위한 개인적 노력

단 체	더 많은 노력 투입	같은 수준의 노력투입	적은 노력 투입	전체
농민단체	10	12	8	30
	33%	40%	27%	100%
대기업 경영자	12	12	2	26
	46%	46%	8%	100%
중소기업 경영자	15	15	5	32
	47%	47%	16%	100%
노조 지도자	19	4	2	25
	76%	16%	8%	100%
학 생	19	21	11	51
	37%	41%	22%	100%
NGO	24	5	1	30
	80%	17%	3%	100%
전통산업 종사자	12	28	12	52
	23%	54%	23%	100%

〈부표-16〉 한·칠레 FTA와 비교하여 한·중·일 FTA의 찬성/반대를 위한 개인적 노력(계속)

단 체	더 많은 노력 투입	같은 수준의 노력투입	적은 노력 투입	전체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 종사자	29	27	1	57
	51%	47%	2%	100%
외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	15	13	2	30
	50%	43%	7%	100%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19	9	5	30
	63%	30%	17%	100%
전경련, 무역협회	10	5	2	17
	59%	29%	12%	100%
중소기업중앙회, 중진공	6	10	2	18
	33%	56%	11%	100%
가정주부	4	18	3	25
	16%	72%	12%	100%
전 체	194	179	56	423
	46%	42%	13%	100%

직종과는 상관없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반대 또는 찬성했을 당시 경주했던 노력에 비해서 더 적은 양의 노력(50 투입)을 하겠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소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중·일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효과가 한·칠레 FTA보다는 크기 때문에 정치적 반발이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중·일 FTA에 찬성 또는 반대가 명확하게 표명된 이해단체의 경우 한·칠레 FTA 당시보다 더 많은 양의 노력(150 투입)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노조 지도자와 NGO 종사자의 경우 각각 76%와 80%의 응답자가 더 많은 노력(150 투입)을 하겠다고 답하였다.

같은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겠다고 답을 한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온 이해단체는 전통산업 종사자(54%), 중소기업중앙회, 중진공(56%), 가정주부(72%) 등이다.

타. 한·중·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요소

(질문 11) 한·칠레 FTA는 국내이익집단(농민 등)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한·중·일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는?

<부표-17> 한·중·일 FTA를 추진하기 위한 요소

단 체	보상체계 마련	대통령의 리더십	관련정부부처의 추진노력	이해단체반대 시 추진반대	일본, 중국의 노력	무응답	전체
농민단체	28	1	1	0	0	0	30
	93%	3%	3%	0%	0%	0%	100%
대기업 경영자	15	10	0	1	0	0	26
	58%	38%	0%	4%	0%	0%	100%
중소기업 경영자	13	15	2	0	1	1	32
	41%	47%	6%	0%	3%	3%	100%
노조 지도자	15	0	0	10	0	0	25
	60%	0%	0%	40%	0%	0%	100%
학 생	34	11	4	2	0	0	51
	67%	22%	8%	4%	0%	0%	100%
NGO	12	0	0	18	0	0	30
	40%	0%	0%	60%	0%	0%	100%
전통산업 종사자	38	7	6	1	0	0	52
	73%	13%	12%	2%	0%	0%	100%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 종사자	9	44	4	0	0	0	57
	16%	77%	7%	0%	0%	0%	100%
외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	10	19	1	0	0	0	30
	33%	63%	3%	0%	0%	0%	100%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20	9	1	0	0	0	30
	67%	30%	3%	0%	0%	0%	100%
전경련, 무역협회	4	11	2	0	0	0	17
	24%	65%	12%	0%	0%	0%	100%
중소기업중앙회, 중진공	9	5	3	0	1	0	18
	50%	28%	17%	0%	6%	0%	100%
가정주부	18	5	1	1	0	0	25
	72%	20%	4%	4%	0%	0%	100%
전 체	225	137	25	33	2	1	423
	53%	32%	6%	8%	0%	0%	100%

대부분의 이해단체가 한·중·일 FTA로 피해를 보는 집단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의 마련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하였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과반수 이상이 응답한 단체는 철강, 조선 및 자동차 산업종사자, 외교부·산자부 공무원, 전경련·무역협회 종사자들이다. NGO의 경우, 60%의 응답자가 이해단체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4. 변수간의 관계분석

가. 한·중·일 FTA에 대한 시각과 추진시기

(1) 매우 긍정 또는 긍정, (2) 부정, 매우 부정으로 나누어 FTA의 추진시기에 대한 응답을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단 분석에서 중립적 입장은 배제하였다).

<부표-18> 한·중·일 FTA에 대한 시각과 체결시기

FTA 시각 \ FTA 추진시기	현 정부 중반기 (2004~2005)	현 정부 말기 (2006~2007)	다음 정권 초기(2008)	2010년경	체결 불가능	전체
매우 긍정 또는 긍정	21	75	50	41	10	197
	11%	38%	25%	21%	5%	100%
매우 부정, 부정	13	34	23	17	28	87
	15%	39%	26%	20%	32%	100%
전 체	34	109	73	58	38	284
	12%	38%	26%	20%	13%	100%

한국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다수의 응답자가 현 정부 말기 또는 다음 정권 초기에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찬반 여부에 관계없이 한·중·일 FTA가 가시적인 시일 안에 성사되리라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학력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각

(1) 매우 긍정 또는 긍정, (2) 부정 또는 매우 부정으로 나누어 응답자의 학력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단 분석에서 중립적 입장은 배제하였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자일수록 한·중·일 FTA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표-19> 학력과 FTA에 대한 시각

학력 \ FTA 시각	매우 긍정 또는 긍정	매우 부정 또는 부정	전체
중졸이하	1	2	3
	33%	67%	100%
고 졸	24	25	49
	49%	51%	100%
대 졸	116	161	277
	42%	58%	100%
석 사	54	37	91
	59%	41%	100%
박 사	2	1	3
	67%	33%	100%
전 체	197	226	423
	47%	53%	100%

다. 소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각

<부표-20> 소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각

한·중·일 FTA 시각 소득수준	매우 긍정 또는 긍정	매우 부정 또는 부정	전체
1,200만 원 이하	21	39	60
	35%	65%	100%
1,200만~4,000만 원	89	53	142
	63%	37%	100%
4,000만~8,000만 원	75	16	91
	82%	18%	100%
8,000만 원 이상	8	5	13
	62%	38%	100%
전 체	193	113	306
	46%	54%	100%

(1) 매우 긍정 또는 긍정, (2) 부정, 매우 부정으로 나누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단 분석에서 중립적 입장은 배제하였다).

소득수준과 한·중·일 FTA 체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일본(인)/중국(인)에 대한 감정 및 한·중·일 FTA에 대한 시각의 상관관계

<부표-21> 일본(인)과 중국(인)에 대한 감정 및 한·중·일 FTA에 대한 시각

한·중·일 FTA 시각 일본(중국)에 대한 감정	일 본			중 국		
	매우 긍정 또는 긍정	매우 부정 또는 부정	전체	매우 긍정 또는 긍정	매우 부정 또는 부정	전체
아주 좋은 감정	4	1	5	4	0	4
	80%	20%	100%	100%	0%	100%
좋은 감정	28	11	39	38	16	54
	72%	28%	100%	70%	30%	100%
중립	92	56	148	124	71	195
	62%	38%	100%	64%	36%	100%
나쁜 감정	68	37	105	25	23	48
	65%	35%	100%	52%	48%	100%
아주 나쁜 감정	5	10	15	6	5	11
	33%	67%	100%	55%	45%	100%
전체	197	115	312	197	115	312
	63%	37%	100%	63%	37%	100%

일본(인)이나 중국(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중·일 FTA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67%)이 한·중·일 FTA에 대한 매우 부정 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러한 민족감정이 한·중·일 FTA에 대한 시각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겠다.

Executive Summary

A China-Japan-Korea FTA: Current Progress and Tasks

Inkyo Cheong *et. al*

A trilateral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CJK) was raised as a possibility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November 1999, the three countries made an official attempt to discuss stronge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a trilateral summit meeting in Manila. Two years later (in November 2001), many issues were raised at the trilateral summit meeting in Brunei, including the commencement of foreign affairs and finance ministerial meetings among the three countries, a business forum, the development of cultural exchange and human resources, and the enforcement of an IT cooperation system. Through this process, the three countries finally were able to take their first steps toward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One year later, then Chinese Premier Zhu Rongji proposed the study of a trilateral FTA during the summit meeting in Phnom Penh, November 2002. Since then, the Trilateral Joint Research Project has been undertaken by th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DRC) in China, the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in Japan(NIRA) and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KIEP). Th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on a step-by-step basis, beginning with the “Economic Effects of a Possible Free Trade Agreement among China, Japan and Korea” as the research theme for 2003. The policy recommendations have been developed

jointly based on analysis and intensive discussion. The research results were reported at the trilateral meeting in Bali, October 2003, and a sectoral impact and policy study for a CJK FTA will be undertaken in 2004.

The significance of a CJK FTA will be highlighted not only in terms of Korea's national interests, but also in terms of regional integration. First, the FTA will bring about massive economic benefits to the three countries in terms of production, trade and economic welfare. Moreover, the establishment of a CJK FTA will also contribute to introducing suitable arrangements that will accelerate trade and investment in the region. It is analyzed that a trilateral FTA will be much more beneficial to all the three countries in the region than any bilateral FTA among those countries. A CJK FTA can also function as a bridge to establish the goal of an East Asian FTA, implying that the trilateral FTA should first be developed as a form of solid economic integration.

This book presents several cooperative tasks of China, Japan and Korea. In order to realize these tasks, the book sets out the desirable goal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ffective strategy and the embodied cooperative tasks needed. This book recommends a guideline for seeking a CJK FTA with the concept of NAFTA-plus and a comprehensive FTA. Economic gains from the FTA should be balanced among the three countries while building up common understanding on the agenda.

Barriers in promoting a CJK FTA are characterized as excessive competition in trade, systematic differences, a leadership struggle between China and Japan, and a lack of understanding for each other. These can not be resolved in a short time. During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the three countries may find some ways to deal with these issues,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should take many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th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鄭仁教

- 미국 미시간 주립대(MSU) 경제학 박사(1995)
-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연구팀장/연구위원(E-mail: koreafta@empal.com)
-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2002)
-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01)
-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2001) 외 다수

權寧敏

-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MSU) 경제학 박사(1996)
- 現 한국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센터 소장, 연구위원(E-mail: ykwon@keri.org)
- “보완적 기술혁신과 관세의 성장효과”, 『국제경제연구』 (2003)
- 『동북아 지역경제권 형성과 기업간 협력방안』 (2002)
- 『뉴라운드와 공산품분야 시장접근』 (2000) 외 다수

安世英

- 파리 1대학(팡테옹-소르본느대학) 經濟學博士(1987)
- 現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E-mail: syahn@ccs.sogang.ac.kr)
- 『글로벌 협상전략』 (2003)
-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내부협상갈등”(무역학회, 2003)
- “Elite Attitudes Towards Multinational Firms: The Korean Experience”, Journal of Applied Research(2001) 외 다수.

趙庸鈞

- 미국 Vanderbilt 대학 경제학 박사(1991)
- 現 외교안보연구원 경제통상부 교수(E-mail: ykcho92@mofat.go.kr)
- 『DDA 협상전망』 (2003)
-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소득 불균형 연구』 (2002)
- 『FTAA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 (2001) 외 다수.

崔兌旭

- 미국 UCLA 정치학 박사(1997)
- 現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 전공 부교수(E-mail: tchoi@handong.edu)
- 미래전략연구원 공동대표 (現)
- 『세계화와 한국의 개혁과제』 (공) (2003)
- 『정부개혁의 5가지 방향』 (공) (2003)
- 『세계화시대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경제』 (2003) 외 다수

趙顯垓

- 대만 국립정치대학 동아연구소 법학 박사(2003)
-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 『중국의 유통산업 개방과 활용전략』 (2003)
-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공) (1997)
- 『중국내 외자기업의 노무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1997) 외 다수

李鴻培

- 일본 創價(SOKA)대학 경제학 박사(2003)
-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E-mail: hblee@kiep.go.kr)
- 『한·일 주요 통상현안과 대응과제』 (공) (1998)
- 『한·중·일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 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공) (2002)
- 『Changes in Industrial Interdependency between Japan and Korea since 1985』 (2002) 외 다수

金恩志

- 한양대학교 지역학 석사(2000)
-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E-mail: eunji@kiep.go.kr)
- 『일본 수입촉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2002)
-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2001)
-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공)(2000)

협동연구 03-2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2003년 12월 20일 인쇄

2003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安 忠 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06-1178 FAX: 3460-1144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대표 김규식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1193-0 94320

정가 10,000원

89-322-1072-1(세트)